

정영태·김연철·서상현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www.kinu.or.kr



정영태·김연철·서상현

#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인 쇄 2007년 12월 29일

발 행 2007년 12월 29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봄 (2275-532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2285-0936)

가 격 7,000원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 정영태, 김연철, 서상현. — 서울 : 통일연구  
원, 2007

p. ; cm. -- (연구총서 ; 07-11)

권말부록수록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22-1 93340 : ₩7,000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700413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 1  |
| 제2장 사례연구(I): 리비아 정치체제의 구조와 변화 ... 9 |    |
| I. 리비아 정치발전과 정치체제 .....             | 11 |
| 1. 리비아 역사와 정치발전 .....               | 11 |
| 2. 정치체제 .....                       | 15 |
| II. 리비아 대내외정책 .....                 | 19 |
| 1. 리비아의 경제발전 정책 .....               | 19 |
| 2. 리비아와 국제관계 .....                  | 28 |
| III. 카다피의 이데올로기와 반체제 .....          | 36 |
| 1. 카다피의 이데올로기 .....                 | 36 |
| 2. 카다피의 권력구조와 반체제 .....             | 42 |

IV. 카다피체제의 변화 ..... 48

- 1. 변화요인 ..... 48
- 2. 경제실패와 실용주의로의 전환 ..... 57
- 3.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선언 ..... 62
- 4. 체제변화 이후의 현황들 ..... 65

제3장 사례연구(II): 쿠바 사회체제의 구조와 변화 ..... 73

I. 쿠바의 정치체제 ..... 75

- 1. 쿠바 정치체제의 변화과정 ..... 75
- 2. 정치체제의 특징과 후계체제 ..... 79
- 3. 반체제와 인권문제 ..... 83

II. 쿠바의 외교정책: 대미정책을 중심으로 ..... 86

- 1. 미-쿠바 관계와 경제제재 ..... 86
- 2. 미국의 쿠바 정권교체 시도와 대응 ..... 87

# 목차

|                              |     |
|------------------------------|-----|
| Ⅲ. 쿠바의 경제 개혁 .....           | 89  |
| 1. 쿠바 경제개혁과 국가의 성격 .....     | 90  |
| 2. 금융정책과 환율정책 .....          | 92  |
| 3. 농업개혁 .....                | 95  |
| 4. 관광개혁 .....                | 104 |
| 5. 외자유치 정책 .....             | 108 |
| <br>                         |     |
| 제4장 통합결론: 북한체제에 대한 시사점 ..... | 113 |
| <br>                         |     |
| I. 리비아 .....                 | 115 |
| <br>                         |     |
| II. 쿠바 .....                 | 123 |
| 1. 정치 이념분야의 시사점 .....        | 123 |
| 2. 경제개혁에 주는 시사점 .....        | 125 |
| 3. 인권 정책의 시사점 .....          | 127 |
| <br>                         |     |
| 참고문헌 .....                   | 131 |
| 부록: 리비아와 국제사회 .....          | 139 |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 141 |

## 표 목 차

|  |     |
|--|-----|
| <표 2-1> 주요 경제 지표 .....                                 | 22  |
| <표 2-2> 주요 거시경제지표 .....                                | 23  |
| <표 2-3> UN의 대 리비아 경제제재 주요 일지 .....                     | 52  |
| <표 3-1> 쿠바의 주요 경제지표(1990~2000년) .....                  | 90  |
| <표 3-2> 쿠바의 국제수지 현황(1991~2001년) .....                  | 93  |
| <표 3-3> 쿠바의 식량수입 현황(1989~1996년) .....                  | 98  |
| <표 3-4> 국영농장(1990)과 UBPC(1994)의 규모 비교 .....            | 100 |
| <표 3-5> 쿠바의 국영농장 개편이후 농장형태 변화 .....                    | 101 |
| <표 3-6> 생산 협동조합의 경작면적 및 농장원 수 현황<br>(1980~1996년) ..... | 102 |
| <표 3-7> 농민시장과 암시장의 가격비교(1994~1996년) .....              | 104 |
| <표 3-8> 쿠바의 관광객수 및 관광수익(1990~1998년) .....              | 106 |



## 그림목차

|                           |    |
|---------------------------|----|
| <그림 1-1> 리비아의 원유생산량 ..... | 26 |
|---------------------------|----|

# 제1장

## 서론





일반적으로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은 사회주의체제의 구체적 양태와 역사가 다른 국가들의 경험들을 일반화해서 사회주의 체제 구축에서 붕괴에 이르는 변화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 이를 북한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예를 들면 박형중<sup>1</sup>은 사회주의 체제변화 패턴을 “정치권력, 경제 소유권 및 이데올로기 등 3중의 당-국가 독점체제(전체주의)”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3중의 당-국가 독점은 몇 개의 변화단계를 거쳐 점차로 약화되며, 궁극적으로 붕괴단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면서 비교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사회주의를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저발전지역에서 성립했던 유형으로 꼽고 있다. 즉 그는 이러한 유형의 저발전국가들로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을 지적하고 이들 국가들은 공산주의 체제 시기 및 탈 공산주의 시기에도 가장 낮은 변화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함으로써 북한과의 유사성을 부각시키고 있다.<sup>2</sup>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체제 변화 과정이 이러한 사회주의체제 국가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출발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이들 동구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체제개혁이 단행되어 더 이상 공산주의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반면 북한에서는 이들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겪은 급격한 체제개혁으로 기존체제의 붕괴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체제는 사회주의적 기본패턴을 유지하면서 개인적 지배 통치 즉, 유일지배 통치국가로 공고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력, 경제 소유권 및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당-국가 독점체제가 모든 권력이 ‘수령’에게 집중되는 개인독재체제

<sup>1</sup>-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p. 63.

<sup>2</sup>- 박형중, 위의 책, p. 93.

로 강화되면서 체제붕괴의 위험성이 상당부분 극복되어갈 가능성에 주목한다.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영도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원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전당과 온 사회에 오직 노동계급의 수령과 그의 혁명사상만이 지배하도록 하는 것과 둘째, 전당, 전국, 전민이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끝까지 관철하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영도원칙은 수령 개인에 의한 사상의 독재, 전당, 전체국가와 전민에 대한 독재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이와 같이 당-국가조직-인민대중을 수령 중심의 개인 독재체제 강화를 위해 결집시켜오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부분적인 경제개혁개방 정책을 단행해 왔다. 특히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개혁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통치행태는 사회주의적 체제요소를 견지하면서도 개인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리비아와 쿠바의 통치체제와도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리비아 사회주의 아랍인민공화국(The Great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이라는 정식 국명으로 알려진 리비아는 대서양에서 홍해로 이어지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동으로 이집트와 수단, 서로는 튀니지 및 알제리 그리고 남으로는 니제르 및 차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리비아는 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국토는 사막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용 가능한 면적은 매우 적다.

리비아는 1,761,132 평방킬로미터 총면적에 인구 약 600만 명(2006년 기준)을 소유한 인구 소국이다. 주요 도시의 인구에는 트리폴리에 약 200만 명, 벤가지에 약 100만 명 그리고 미수라타에 약 50만 명 등이 거주하고 있는 등 대부분이 지중해 연안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리비아는 오래 전부터 지중해 역사 문화권을 형성하며 로마의 지배와 아랍지배 그리고 오스만 터키와 이탈리아 점령을 거쳐 2차 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 하에서 1951년 독립하였다. 왕정을 중심으로 리비아는 독립 국가로 출발하였지만 경제파탄과 왕정의 국가경영 부실 등으로 1969년 27세의 무하마드 카다피가 주도한 무혈 쿠데타로 왕정은 무너지고 세계에서 유일한 정치형태인 자마히리야(Jamahiriya)<sup>3</sup> 정치체제를 도입하였다. 쿠데타 성공 이후 카다피는 대외적으로 아랍민족주의, 반제국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외세추방, 이슬람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새로 선포된 ‘리비아 아랍공화국(Libyan Arab Republic)’은 문민정부로 출범하여 마침내 카다피에 의해 주도되는 12명의 군장교로 구성되는 ‘혁명사령부위원회(Revolutionary Command Council: RCC)’로 대체되었다.<sup>4</sup> 리비아의 정치제도는 1976년부터 급격히 변화되어 국회(General National Congress)는 1년 후 ‘인민의회(General People’s Congress; GPC)’로 바뀌었고, 동시에 국명도 대중 국가인 ‘리비아 사회주의 아랍인민공화국(The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으로 선포되었다. ‘대중의 국가’(state of masses) 혹은 ‘자마히리야’로 대변되는 리비아의 정치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리비아와 카다피가 국제정치무대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의 독특한 통치스타일과 주요 테러지원국이라는 점 때문

3- 자마히리야는 아랍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일반적으로 ‘대중에 의한 국가’로 정의된다. 자마히리야 체제는 리비아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이다. US Department of State’s Background Notes (Nov. 2005), “Libya - History,” U.S. Dept. of State, Accessed July 14, 2006, 참조.

4- Federal Research Division of the Library of Congress, “Government and Politics of Libya,” *U.S. Library of Congress* (1987).

이었다. 리비아는 국가 원수인 카다피의 권력체제와 이데올로기에 기인한 정치체제로 반서방, 반제국주의의 선봉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대립을 지속하였고 양진영간에는 무력충돌과 테러로 악순환을 되풀이 하였다. 서방과의 대결을 통해 카다피는 테러를 수출하고 지원하는 지도자로 낙인찍혀 미국의 부시정권이 내세우는 ‘악의 축’에 리비아가 포함되었고 반대로 일부 아랍진영에서는 서방세계와 용감히 맞서는 지도자로 카다피를 옹호하는 등 그에 대한 평가는 극렬하게 나뉘었다.

이후 1999년 로커비 사건에 대한 카다피의 유연한 자세와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폐기와 사찰 수용 등으로 서방진영과의 대결 국면에서 화해 국면으로 전환하여 현재 카다피는 리비아 국민들의 열망인 경제개혁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다피의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선언과 해체는 최근 북한의 핵문제와 맞물려 좋은 사례로 꼽히기도 하였다.

쿠바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견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중국과 베트남은 이미 상당한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체제에 편입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쿠바는 분절적 개혁, 국제환경의 불안정성, 그리고 정치체제의 불투명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쿠바의 사회주의 역사는 1959년 카스트로가 이끄는 반 바티스타 운동의 성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혁명 이후 1959년 3월 미국계 자산 국유화와 6월 농업개혁법을 통과시켰다. 1959년 당시의 쿠바 혁명의 성격은 민족주의적인 것이었다. 1959년 헌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언급 없이 민주민족혁명이 강조되었을 뿐이었다.<sup>5</sup>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는 1976년 헌법에 포함되었다. 동 헌법은 소련의 헌법(1936

---

5- 카스트로 정권의 초기 성격에 대한 검토는 김달관, “쿠바의 딜레마: 이상과 현실,” 『라틴아메리카 연구』, 17권 3호, 참조.

년)에 기초하고 있으며, 계획경제 모델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1960년대 중반, 코시긴 개혁과 리베르만 방식의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했으며, 경제지도계획 체계(the System of Direction and Planning of the Economy: SDPE)라고 불리는 소련식 경제개혁 제도가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은 정책결정의 분권화(지배인의 권한 강화), 시장 메커니즘 활용<sup>6</sup>, 기업의 독립채산제와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경제적 인센티브의 확대(임금 차등, 생산보너스, 상금)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계획경제를 유지하면서 인센티브 정책을 개선한 것이다. 쿠바의 통치구조는 중앙집권적 정책결정구조와 중층적 겸직구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공산당 총비서이면서, 국가평의회 의장겸 각료회의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카스트로가 독점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쿠바는 여타사회주의 체제국가들의 사례와 달리 북한체제와 닮은 점이 많다.

첫째, 국제환경이 유사하다. 북한이나 쿠바는 동일하게 세계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 국가이다. 미국의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력은 90년대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쿠바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상황에서 정책결정과정의 개혁, 경제정책의 변화, 관광개방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위기를 벗어났다.

둘째, 쿠바 사례는 현실사회주의 역사에서 유일한 지도부의 교체 없이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덩소핑의 등장으로, 베트남은 신지도부의 구성으로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쿠바는 카스트로 정권차원에서 사회주의 혁명, 위기와 변화, 그리고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제 쿠바는 카스트로의

<sup>6</sup>- 경영성과의 기준으로 이윤개념이 강조되었으며, 자유 농민시장이 허용되었고, 사적 고용도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본격적인 후계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체제의 지속성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후계체제로의 이행을 준비할 가능성이 큰 북한체제와 부분적인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개혁의 과정의 유사성이 지적된다. 쿠바 지도부가 처음부터 경제개혁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후반 국제분업체제 위기직후에 쿠바에서 발표된 교정계획(Rectification Program)은 이전의 제한적인 분권화 정책을 보수화, 중앙집권화 하려는 시도였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이후 ‘고난의 행군’이나, ‘붉은기 사상’ 등을 통해 확산시키고자 했던 정치적 전략의 측면에서 유사한 맥락이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 방법으로 위기에 대응하고자 했던 쿠바의 시도는 좌절되었고,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개혁 확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 역시 2002년 7·1조치이후 제한적이거나 경제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넷째,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내수시장의 크기도 적으며, 지경학적으로도 생산거점의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하다. 게다가 북한과 쿠바는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으로 투자 위험도가 높다는 공통성이 있다. 그런데 왜 쿠바는 외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쿠바 사례는 적극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하면, 미국의 경제 제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럽국가(스페인)나, 캐나다, 남미 국가(멕시코) 등의 대체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리비아와 쿠바의 사례는 향후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리비아와 쿠바의 사례에서 북한 체제변화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 제2장

# 사례연구( I ): 리비아 정치체제의 구조와 변화





# I. 리비아 정치발전과 정치체제

## 1. 리비아 역사와 정치발전

리비아는 마그레브 문화권과 이집트 문화권 사이에 위치하여 고대에는 지중해 무역의 거점이었으며 페니키아, 오스만 터어키, 이탈리아 등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으로 오랜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리비아에 최초로 살았던 종족은 베르베르(Berber)인들이었다. BC 7세기경 페니키아인들이 리비아 동부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하여 3개의 식민도시, 즉 랩티스 마그나(Leptis Magna: 현재의 흠즈 시), 우이아트(Uaiat: 현재 트리폴리) 및 사브라타(Sabratha)를 건설하였다. 이 지역을 키레나이카(Cyrenaica)로 불렀다. 또한 그리스는 리비아 서부지역을 식민지로 삼아 트리폴리타니아(Tripolitania)로 불렀다. 트리폴리타니아는 카르타고의 통제 하에 있었다. BC 46년부터 AD 436년까지 이 지역은 로마제국의 영토가 되었으며 이후 반달(Vandal)이 점령하였다<sup>7</sup>.

로마지배를 받게 된 리비아는 올리브, 포도, 밀, 보리 등 농산물을 로마에 공급하여 ‘로마의 곡창지대’로 불렸으며, AD 193년에는 랩티스 마그나 출신인 세벨루스(Septimius Sebellus)가 로마황제에 등극하기도 하였다.

리비아는 500년을 전후하여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재차 정복되었으며, 이어 원주민인 베르베르인들의 반란으로 사실상 무정부상태가 되었다.

644~645년에 걸쳐 실시된 아랍군의 마그레브 지역 2차 원정에 의해 트리폴리가 함락되어 약 900년간 아랍이 지배, 이슬람교와 아랍어를 중심으로 한 아랍문화가 뿌리 내렸다. 이후 약 350년 동안 모로코에서 온

<sup>7</sup>- <http://www.infoplease.com/ipa/A0107722.html>.

베르베르인 알모아데가 트리폴리타니아를 통치했으며 키레나이카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다. 16세기 초 오스만 터키 제국은 리비아의 세 지역, 즉 페잔·키레나이카·트리폴리타니아를 정복하여 트리폴리 주재 섭정의 관할구로 삼았다. 18세기 초 트리폴리에 카라만리 왕조가 들어서 약 120년간 통치했으며, 이때 세 지역은 서서히 하나로 통합되었다. 1551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오스만 터키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1911년 9월 29일 오스만 터키 제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10월3일 트리폴리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까지 트리폴리(Tripoli), 벤가지(Benghazi), 베르나(Berna), 토브루크(Tobruk) 등 지중해 연안지역 도시들을 장악하였다. 1931년 반식민 항쟁의 영웅 오마르 무크타르(Omar Mukhtar: 1860~1931)가 이탈리아군에 포위,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자 리비아인의 이탈리아군에 대한 저항은 약화되고 리비아의 대부분은 이탈리아 식민지가 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 리비아는 영국군, 프랑스군에 의해 점령되어 군정통치를 받게 되었고<sup>8</sup> 종전 후 1949년 12월 유엔에서 리비아 독립지침 결의안이 채택되어 1951년 11월 리비아는 UN의 후원 하에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 중 이집트에 이어 최초로 독립이 보장되는 국가가 되었다. 독립 정부는 이드리스 1세 왕권 하에 트리폴리타니아, 키레나이카 및 휘잔 등 세지역의 연방으로 탄생되었다<sup>9</sup>.

독립한 리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1954년

---

<sup>8</sup>- 트리폴리타니아와 키레나이카는 영국에 의하여, 그리고 휘잔 지역은 프랑스에 의해 통치되었다.

<sup>9</sup>- 1969년 9월 권력을 장악한 혁명정부는 이들 세 지역을 새롭게 명명하였다. 즉 트리폴리타니아는 서부지역, 키레나이카는 동부지역 그리고 휘잔은 남부지역으로 명명되었다.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에 의하면, 리비아의 주요 수출품은 아프리카 나라 새(esparto grass)와 과거 전쟁 중 나온 폐 고물 등이었다. 당시 사누시 이슬람에 영향을 받고 있던 리비아는 1911년 이탈리아의 리비아 점령이후 이탈리아에 대한 저항운동은 사누시 민족주의자들의 조직에 의해 지속되었고 독립이후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이슬람의 역할을 강화하였다.<sup>10</sup>

이드리스 국왕의 새로운 왕정은 그것의 합법성을 위해 종교의 상징성들에 의존하였고 국가 행정을 위한 연방구조도 느슨하였다. 그리고 석유의 발견은 새로운 긴장과 희망을 가져왔지만 리비아는 민주주의로의 발전은 이루지 못했다. 더구나 일관된 개발 프로그램의 부족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부의 평등한 분배 실패 등으로 왕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누적된 불만들은 왕정의 권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sup>11</sup> 특히 나세르주의(Nasserism)와 아랍통합(Arab Unity) 사상이 중동 전역을 휩싸고 있을 무렵, 리비아 정부의 친 서방적인 태도는 사회적인 불안을 가중시켰고, 1967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이후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1969년 리비아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이드리스 국왕이 터키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9월 1일 당시 27세의 카다피 대위를 중심으로

<sup>10</sup>- Enzo Santarelli, Giorgio Rochat, *Romain Rainero and Luigi Goglia*, Omar al-Mukhtar, *The Italian Reconquest of Libya Translated by John Gilbert* (London: Darf Publishers, 1986); E.E. Evans-Pritchard, *The Sanusi of Cyrena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49); Geoff Simons, *Libya. The Struggle for Survival*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3), pp. 110~137; Jonathan Berman, *Qadhafi's Libya* (London: Zed Books, 1986), pp. 10~16.

<sup>11</sup>- Ruth First, *Libya. The Elusive Revolution*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1974), pp. 31~87; John Wright, *Libya. A Modern Histor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pp. 60~132; Omar El Fathaly and Monte Palmer, *Polit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in Libya*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0), pp. 15~37.

로 한 청년장교 그룹이 트리폴리에서 무혈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전국을 장악하였다.<sup>12</sup> 이들 청년장교그룹 12명으로 구성된 혁명평의회(Revolution Command Council, RCC)는 왕정을 폐지하고 리비아 아랍공화국(Libyan Arab Republic)을 선포하였다. 쿠데타 이후 국왕 이드리스는 이집트로 망명, 1983년 93세로 사망하였다.

쿠데타 성공 이후 카다피는 대외적으로 아랍민족주의, 반제국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외세추방, 이슬람사회주의 건설추진을 목표로 하였다. 1970년 영국군과 미군을 철수시키고 에소(Esso), 셸(Shell), ENI 등 외국 석유회사의 국유화, 외국인 재산몰수, 주요산업의 국유화 등을 단행하였다.

1973년 4월 코란에 입각한 이슬람사회 건설을 위한 문화혁명을 제창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자본주의 물질 중시론과 공산주의 무신론에 대응하고 이슬람 기반 하에 인민혁명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제3세계 이론(Third Universal Theory)’을 제창하여 리비아를 이슬람사회주의로 공고히 하였다.

새로 선포된 ‘리비아 아랍공화국(Libyan Arab Republic)’은 처음에는 문민정부였으나, 그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었던 가말 압델 나세르에 의해 고무되어 카다피에 의해 주도되는 12명의 준장교로 구성되는 ‘혁명사령부위원회(Revolutionary Command Council: RCC)’로 대체되었다.<sup>13</sup> 1971년 또 다른 나세르주의 운동으로 유일한 정당인 ‘아랍사회주의연합(Arab Socialist Union)’이 구성되었다.

---

<sup>12</sup>- Nicola Ziadeh, Sanusiyah, *A Study of a Revivalist Movement in Islam* (Leiden: E.J. Brill, 1958); B.G. Martin, *Muslim Brotherhoods in Nineteenth-Century Af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sup>13</sup>- Federal Research Division of the Library of Congress, “Government and Politics of Libya,” *U.S. Library of Congress* (1987).

리비아의 정치제도는 의회의 소집과 함께 1976년부터 급격히 변화되었다. 국회(General National Congress)는 1년 후 ‘인민의회(General People’s Congress: GPC)’로 바뀌었고, 동시에 국명도 대중 국가인 ‘리비아 사회주의 아랍인민공화국(The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으로 선포되었다. ‘대중의 국가(state of masses)’ 혹은 ‘자마히리야’로 대변되는 리비아의 정치제도는 세계에서는 유일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카다피의 유목적인 생활기반에 근거한 사회주의와 이슬람이론을 혼합한 그 자신의 저서 ‘그린 북(Green Book)’<sup>14</sup>에서 잉태된 ‘제3세계 이론’에 따라 1977년 확립되었다. 한편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따라 1986년 국가의 공식 명칭 앞에 ‘위대한’이 덧붙여져 현재의 ‘위대한 리비아 사회주의 아랍인민공화국(The Great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이 되었다.

## 2. 정치체제

### 가. 정치체제의 특성

현재의 리비아 정치체제는 1977년 주권기관인 총 인민회의(General People’s Congress)가 신설되고, 리비아 인민사회주의 아랍공화국이 선포되면서 확립되었으며, “자마히리야(인민 직접민주주의)”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리비아에는 헌법이 없으며, 자마히리야 체제가 이슬람교의 코란과 함

<sup>14</sup>- 그린 북은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가 쓴 책으로 1975년에 처음으로 출간되었는데 이 책에는 카다피의 민주주의와 그의 정치철학에 대한 견해들을 밝혔다. 그린 북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주주의 문제의 해결: 인민의 권한, 둘째, 경제 문제의 해결: 사회주의, 셋째, 제3의 보편적인 이론의 사회적 기반 등이다. 이 책은 현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으며 인민위원회에 기반을 둔 직접 민주주의 형성의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Mu’ammar Al-Qaddafi, *The Green Book* (Tripoli: The Green Book World Center, 1980) 참조.



계 리비아의 정치·사회질서를 규율하고 있다. 이는 카다피 지도자의 ‘그린 북’에서 주창한 제3세계 이론에 의거, 제도화된 것이다.<sup>15</sup>

카다피의 ‘그린 북’ 사상은 사회주의와 이슬람 이론을 혼합한 것으로서, 그 특징을 보면 첫째, 서구식 의회민주주의를 전제적인 독재체제라고 규정하고 정당을 근대의 독재적 통치기구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 인민회의 (People’s Congress)를 통해 인민이 의사를 ‘직접 대표’하는 원리를 도입하여 인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모든 인민은 지역단위의 기초인민회의(Basic People’s Congress, BPC)에 참여하여 지방자치조직을 대표하는 서기국을 선임한다. 넷째, 기초인민회의 대표로 총인민회의(General People’s Congress, GPC)를 구성하며, 총 인민회의 구성원은 약 1,000명 수준이다.<sup>16</sup> 다섯째, 의회제도와 유사한 총 인민회의가 총리 및 각료를 임명하다. 여섯째, ‘선거’라는 용어 자체가 배척되고 있으므로 기초인민회의 대표 및 각종 서기국 선임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결정한다.<sup>17</sup> 리비아에서는 1972년 정당금지법이 제정되어 정당 활동을 금지시켰다.<sup>18</sup>

1977년 자마히리야 체제 성립 이래 수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중앙 및 지방 조직개편이 있었고, 특히 공공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중앙행정부처(총 인민위원회)는 빈번하게 대폭적인 통폐합, 부활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

<sup>15</sup>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Libya* (July 2007), p. 4.

<sup>16</sup> - GPC는 지방에서 선출·임명된 1,0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선출된 5명이 상설기구인 총서기국을 구성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또한 GPC는 내각인 총인민위원회(General People’s Committee)와 혁명적 지도자, 즉 국가원수를 선출한다.

<sup>17</sup> - Mu’ammar Al-Qaddafi, *The Green Book* (Tripoli: The Green Book World Center, 1980).

<sup>18</sup> - Case Study: Libya, “Political Culture,” *Educational Module on Chemical & Biological Weapons Nonproliferation* (2001).

## 나. 중앙정치조직

### (1) 총 인민회의(General People's Congress: 국회해당)

1992년 10월 개편에 따라 총 인민회의는 기초인민회의의 대표 2명, 직능조합(Trade Union)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구성 원수는 기초인민회의 및 직능조합 등의 수에 따라 일정치 않다.

기초인민회의 및 직능조합 등의 통폐합에 따라 1994년 말 개최된 총 인민회의의 총회는 기초인민회의의 대표 638명(각 기초인민회의의 2명), 48개 직능조합 대표로 구성되었다.

직능조합 구성요건은 분명치 않으나, 총인민회의의 총회 내에서 기초인민회의처럼 취급되어 조정·법률초안 작성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총인민회의의 총회는 1988년 이래 년 2회(3월과 9월) 개최토록 되어 있고, 정기 총회이외에 특별총회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최시기, 회기가 일정치 않다. 총 인민회의의 총회는 형식상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 법령 및 포고령을 채택하고 총 인민위원회 활동지침을 결의하며 총 인민위원회 비서(각료 해당)들을 임명한다.

총 인민회의의 총회는 상설기구로 총인민회의의 총서기국(General Secretariat)을 설치, 총 인민회의의 총회의 운영 전반을 담당케 하고 있다.

2003년 6월 13일 총 인민회의의 결의를 통해 기존 6개 위원회에서 자원·환경·도시계획위원회, 문화위원회 및 법률·인권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철폐하는 대신, 의회 및 행정부 담당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과거 2인의 부의장이 관할)하여 총 5개 위원회로 개편하고, 총 인민회의의 의장 하에 총괄 부의장 1인을 신설하였다.

## (2) 총 인민위원회 (General People's Committee: 내각 해당)

국가행정은 명목상 총 인민위원회 비서장 즉 총리(Secretary General)가 주도하는 총 인민위원회가 운영하며, 각료(Secretaries)가 분야별로 공공행정을 분담하여 담당하고 있다.

자마히리야 체제 원리에 따라 총리와 각 행정부처가 폐지되고 총 인민위원회 비서장과 비서들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권한이 다소 축소·제한된 점 외에는 종래와 같이 총리 및 중앙정부부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총리가 각료를 임명하는 내각제도와 형식상 다른 것은 비서장 및 비서들이 총 인민회의 총회에서 각각 선임된다는 점으로 총 인민위원회 비서장 및 비서들은 총 인민회의 총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한편 1987년 이래 중앙정부조직의 지방분산 이전 계획에 따라 총 인민위원회 및 중앙 부처들이 미수라타(Misurata), 시르테(Sirte), 라스라누프(Ras Lanuf)로 이전, 현재는 외교부 등 일부만이 트리폴리에 남아 있다. 일부 이전 부처들은 트리폴리에 연락사무소를 유지하고 있다.

리비아는 카다피의 쿠데타 이후 혁명평의회가 3권을 장악하고 그 의장인 카다피가 국가원수가 되어 군 최고사령관을 겸하여왔다. 1977년 통치기구를 개편하여 최고결정기관으로서 국회에 해당하는 총 인민회의(General People's Congress)를 설치하고, 그 안에 총 인민회의 서기국이 설치되었다. 서기국은 혁명평의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카다피는 초대 서기장이 되었다가 1979년 3월에 사임하였는데, 여전히 국가원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고사법결정권을 가진다.

카다피는 현재 정부조직의 어떠한 공식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른바 '혁명의 지도자(1990년 3월 총 인민회의에 추대)' 및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사실상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총 인민회의는 그

의 결정을 추진하는 ‘고무도장(rubber stamp)’에 불과하다. 카다피의 주요 권력행사 수단은 혁명위원회(revolutionary committee)로 카다피는 이를 통하여 국정 전반과 각 기관을 통제하고 있다.

## II. 리비아 대내외정책

### 1. 리비아의 경제발전 정책

리비아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풍부한 석유와 카다피의 등장으로 인한 정치변동이었다. 리비아는 1960년대에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한 이후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가장 잘사는 국가로 바뀌었다.<sup>19</sup>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사막지대인 리비아는 1951년 독립당시 아프리카에서 최빈국 중 하나였다. 1955년 석유개발이 추진되어 세계적인 석유수출국이 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석유 수익이 급증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익이 감소하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자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어 최대의 산유국인 리비아는 유엔의 10년이 넘는 경제제재 조치로 말미암아 경제 회복 또는 재건의 기회를 상실한 채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미국과 유엔 제재에 의해 항공기 운항 중단 조치에 따른 국제 물류사정 악화는 물론 교역 및 투자 등 대외 경제거래의 위축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경기 침체가 구조화되었다.

특히 1996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Iran-Libya Sanctions Act: ILSA)’<sup>20</sup>으로 국가경제를 지탱하던 석유 개발마저 봉

<sup>19</sup> - <<http://www.arabdatanet.com/country/profiles/profile.asp?CtryName=Libya>> 참조.

쇄됨으로써 1970년대 초반 330만 배럴에 달했던 원유 생산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리비아 경제는 마이너스 또는 저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재정 부족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중단 또는 연기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 운영이 불가능했다.

1990년대 초반 UN제재와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1998년 약 3.6%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던 리비아는 1999년 UN제재의 중단과 함께 국제유가 상승으로 0.7% 성장세로 돌아선데 이어 2000년에는 2.6%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후 UN 경제제재 중단 및 민영화 정책으로 2004년 1.8%, 2005년 5.8%, 2006년 6.3%의 높은 성장세를 이룩하여 왔으며 2007년 이후에도 고유가 영향 등으로 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sup>21</sup>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로 주로 올리브, 오렌지, 수박, 감자 등 과일과 야채와 같은 다양한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리비아 정부는 농산물의 자급자족을 위해 대수로 용수를 이용한 농장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리비아 경제는 탄화수소(가스과 석유) 분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리비아 외화의 95%와 GDP의 30%를 담당하여 리비아 정부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리비아석유공사(NOC: The National Oil Corporation)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sup>22</sup> 리비아 정부는 70년대부터 탈 석유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을 육성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기초

---

<sup>20</sup> - 이란·리비아제재법은 1995년 클린턴 대통령이 발의한 법으로 1996년 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이란의 테러수출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도 가로막게 되었다. <<http://www.wws.princeton.edu/wws401c/1998/ilsa.html>> 참조.

<sup>21</sup> - <<http://www.economist.com/countries/libya/>> 참조.

<sup>22</sup> - <<http://www.arabdatanet.com/country/profiles/profile.asp?CtryName=Libya>> 참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리비아 정부가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없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2% 수준이다.

건설 분야는 전체 GDP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도로, 대수로, 항만, 병원, 호텔, 발전, 담수, 석유화학, 가스분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리비아는 UN 제재이후 그 동안 이 분야의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해 주택, 호텔, 플랜트, 도로 등의 신축 및 재 보수 계획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리비아 정부는 2011년까지 주택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sup>23</sup>

서비스는 전체 GDP의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리비아의 개혁 개방정책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주요 거리에 매일 새로운 상점들이 오픈 되고 있으며 간판들도 예전의 모습들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몰타와 리비아가 협력하여 투자한 CORINTHIA 호텔이 완공되는 등 호텔 건설 계획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관광산업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다피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사회주의정책으로 인한 경제악화로 1988년 초부터 시장자유화를 시작하였으며 민영기업, 소규모 산업과 농업에서 민영화 허락의 폭을 확대하는 등 개혁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9월 민영화법의 제정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민간부문의 호응부족으로 결과는 미미하였다. 혁명이후 7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여 농업의 자급자족과 제조업 생산기반확대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추진했으나 실질적인 경제 발전성과를 실현하지는 못하였다. 제7차 경제개발계획(1986~1990)은 석유수입 감소

<sup>23</sup>- <<http://www.economist.com/countries/libya/>> 참조.

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폐지되었으며, 1990~1995년 계획은 수립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2003년 유엔의 경제해제에 이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2004년 4월)를 계기로 리비아는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서방국과의 관계 복원은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국제 교역 및 투자활동의 재개가 가능해짐으로써 장기간의 국제 고립 속에서 침체되었던 리비아 경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

물가상승률도 경제제재 해제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했던 재정수지도 2004년에는 원유 수출 호조에 힘입어 GDP 대비 17.6%의 흑자를 기록했다. 경제제재 해제와 고유가로 인한 경제지표상의 변화는 대외 부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 주요 경제 지표

|                |   |
|----------------|---|
| GDP(2006년)     | 476억 달러   |
| 실질경제성장률(2006년) | 6.1%  |
| 1인당 GDP(2006년) | 6,076달러(BMI 추정)   |
| 실업률(2006년)     | 30%(실질적으로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                                   |
| 물가상승률(2006년)   | 2.7%  |
| 환율(2006년)      | 1달러 = LD 1.314  |
| 외채(2006년)      | 45억 달러  |
| 외환보유고(2006년)   | 593억 달러)  |
| 교역규모(2006년)    | 수출(337억 달러), 수입(123억 달러)                                  |
| 주요 교역품(2006년)  | 수출: 석유, 가스(97.3%)<br>수입: 자동차/기계류(47.6%), 원부자재(20.7%), 식품류 |

자료 : EIU, April 2007

<표 2-2> 주요 거시경제지표

| 주요 지표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실질 GDP 성장(%)    | 5.8  | 5.4  | 5.2  | 5.5  | 5.8  | 6.0  |
| 인플레이션율(av; %)   | 2.7  | 3.3  | 3.5  | 3.2  | 2.9  | 2.4  |
| 재정(% of GDP)    | 38.3 | 35.1 | 33.0 | 28.3 | 24.3 | 27.5 |
| 경상수지(% of GDP)  | 25.4 | 20.6 | 16.9 | 12.2 | 8.1  | 14.8 |
| 환율 LD: US\$(av) | 1.31 | 1.25 | 1.25 | 1.26 | 1.27 | 1.27 |

자료 : EIU, April 2007

1998년 60억 달러에 그쳤던 수출규모가 2004년에는 3.5배 가까이 증가한 202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무역 흑자도 1998년의 4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116억 달러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 밖에 외환보유고도 1999년 73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257억 달러에 달하는 등 리비아 경제가 전례 없는 호조 국면을 맞고 있다. 다만 여타 중동 산유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경제 성장이 좌우되는 특성을 띠고 있어 향후 국제유가 향배 등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제재 해제 후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는 단연 석유 개발 부문으로 현재 리비아에는 석유 이권 획득을 둘러싼 진출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1986년 미국원유업체들의 철수를 계기로 리비아 진출을 본격화해 왔던 유럽석유업체들은 미국의 제재 해제로 미국 업체들의 진출이 가시화되자 대규모 투자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등 에너지개발 이권 선점을 위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리비아와 경제 및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유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럽 각국의 정상 또는 장관들이 리비아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외교 관계 정상화를 통한 경제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함께 리비아 경제제재를 주도해 온 영국도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하게 리비아와의 통상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에는 수차례에 걸쳐 투자사절단과 의회대표단을 리비아에 파견하는 등 진출기회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과거 리비아의 식민 종주국이자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이탈리아 역시 협력 증진 조약을 체결하고 외채를 일부 탕감해 주는 등 경제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리비아의 석유자원 개발 잠재력에 주목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 큰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를 계기로 리비아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 기업들이 경제제재 해제 이후 공세적으로 리비아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자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리비아 석유산업 진출이 봉쇄되었던 미국 오일메이저들도 경제제재 해제 이후 진출 재개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한국, 인도, 터키 등 아시아 석유 개발 업체들도 리비아 원유 및 가스전 개발에 적극 가세하고 있어 리비아 석유자원 선점을 위한 국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제제재 해제는 리비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잠재되어 있는 성장력을 어느 정도 실현시켜 줄 것이다. 특히 그동안 봉쇄되었던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상당 규모의 외자 도입이 예상되어 리비아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비아는 이미 국영기업의 민영화, 외국인 투자유치, 자유경쟁체제 도입 등 혁명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리비아 정부가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석유는 리비아 경제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석유와 가스가 GDP의 30%, 수출의 95%, 정부 재정수입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가스는 리비아 경제를 이끌고 있다.

리비아의 확인된 원유 매장량만 해도 391억 배럴로 매장량으로만 세계 8위, 아프리카에서는 최대 산유국이다. 국제 석유메이저의 진출이 본격화하고 유전개발도 활발해지면 조만간 매장량은 1000억 배럴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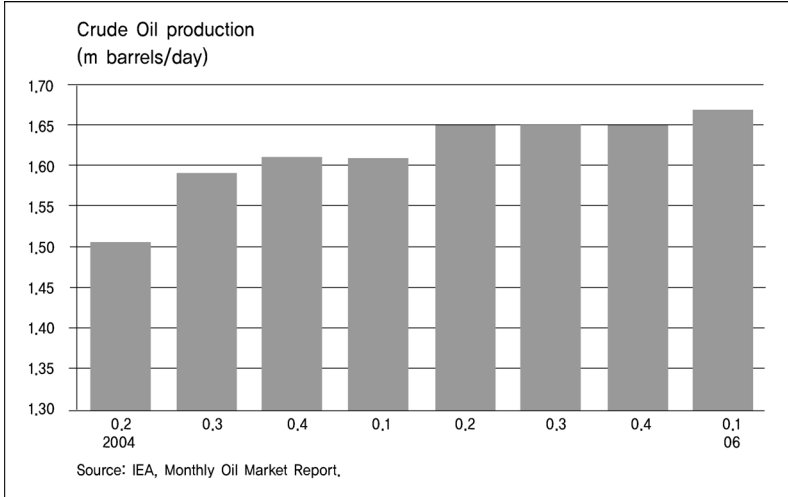
리비아의 개방정책은 석유부분에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까지 리비아의 원유생산량은 하루 330만 배럴 정도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원유생산의 추가 투자가 봉쇄되는 바람에 현재는 170만 배럴로 줄어들었다. 주 수입원이었던 원유생산이 급감하자 리비아 경제는 급격히 하락하였고 국민들의 삶도 궁핍해졌다.

카다피가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전격 선언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따라서 리비아 개방정책도 원유개발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 하루빨리 원유생산량을 늘리는 것만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리비아는 향후 매년 40억 달러를 투입해 2015년까지 일일 원유생산량을 300만 배럴까지 끌어올리고, 2019년에는 390만 배럴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100개에 이르는 광구 채굴권을 국제입찰에 부쳐 개발권을 배당했다. 리비아 유전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향후 다섯 차례의 추가 국제입찰을 통해 220여개의 광구 개발권을 배분할 계획이다.<sup>24</sup>

<sup>24</sup>-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Libya* (July 2007). pp. 28 ~ 29.

<그림 1-1> 리비아의 원유생산량



최근 리비아의 경제 개방 및 자유화 추세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리비아 정부는 그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1997년 해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에는 동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IMF 조사단을 받아들여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협의하고 IMF 조사단 권고에 따라 공정환율을 시장환율에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환율단일화 조치를 2002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이밖에 영국, 이태리, 네덜란드, 스위스에 대한 항공기 상호취항에 이어 2002년에 리비아항공의 파리취항 및 사우디항공의 트리폴리 취항이 재개되는 등 그 동안 항공제재에서도 완전히 벗어났다.

또한 리비아는 경제개발 계획(2002~2005년)을 수립하여 경제개발 추진하였는데 리비아는 69년 혁명이후 농업의 자급자족, 제조업 생산기반 확대,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에 주요정책목표를 두고 7차례의 경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었다. 그러나 이들 경제개발계획은 실질적으로 거의 완결을 보지 못하고 대부분 중도에 포기되었다.<sup>25</sup>

2002년 5월 경제여건 개선을 배경으로 2002~2005년간 실시될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개발의 기본목표로 경제구조의 다양화(특히, 수출산업의 육성), 자원의 절약(특히, OPEC과의 협력 하에 석유 자원의 일정수준 유지를 감안한 생산정책), 관광 진흥(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기능 강화), 연간 실질경제성장 5%이상 달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020년까지 국민소득의 배가, 교육의 질 향상,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사회경제정책 시행, 생산 및 경영 효율성 제고(특히, UN 제재로 낙후된 제조업 분야) 등이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는 정부예산을 수자원, 도로, 항만, 공항, 보건, 교육 등 인프라 분야에 집중투자(석유분야 60억 달러, 전력분야 60억 달러, 수자원 분야 80억 달러 등), 주택, 관광, 운송, 무역 및 일반영업 등의 분야에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 외국자본 유치(전체 프로젝트의 약 30% 차지)를 통한 공업, 관광 및 에너지(전력 등) 서비스 분야의 현대화 추진 등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약 350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투자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약 1,2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개혁·개방 정책으로 사회 분위기는 달라지고, 최근 몇 년간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리비아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다. 오랫동안의 국제사회의 제재와 40년 가까이 지속된 1인 지배체제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리비아 국민소득이 6,000

<sup>25</sup> - <<http://www.nationsencyclopedia.com/Africa/Libya-ECONOMIC-DEVELOPMENT.html>> 참조.

달러를 조금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실제 생활수준은 2,000 달러 정도이다.

리비아의 또 다른 경제 문제는 높은 실업이다. 인구 절반 이상이 20세 이하 젊은 층인 리비아는 극심한 실업난을 겪고 있다. 정부 통계는 20% 내외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5%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유 산업에 의존된 경제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낙후된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만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률 해소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 2. 리비아와 국제관계

미국은 2005년 5월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카다피는 국제무대에 재등장하였다. 최근 리비아는 아랍, 아프리카에서 리비아의 위치를 보다 확고하게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논리에서 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있으며 일정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다피는 아프리카 통합에 많은 관심을 보여 2007년 7월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 정상회담에서도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 단 일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sup>26</sup>

---

<sup>26</sup> - 리비아 국가원수 카다피에 의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합문제 제기로 2007년 아프리카연합 정상회담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 카다피는 수만 명이 모인 가나의 가나대학에서 향한 연설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되는 아프리카 합중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카다피의 이번 발언이 처음은 아니며 이미 수년 전부터 아프리카 합중국을 주창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단결을 주장하였으며 아프리카연합 태동 역시 카다피의 이와 같은 주장의 영향을 받았다. 아프리카 합중국 창설은 카다피의 지론이었다. <<http://blog.daum.net/unisa/12279721>> 참조.

## 가. 아랍통합의 추진

카다피는 아랍통합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는 전면적인 아랍통합의 구현이 아랍국가가 당면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수단이라고 주장하고 리비아와 아랍국간의 통합 및 합의 이행에 노력하였다. 즉 아랍인의 이전, 주거, 소유의 자유를 강조하고, 아랍국가간의 통합조약을 지지하였다.

아랍연맹이 아랍통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아랍은 한 가족이라는 명제 아래서 각종 분쟁을 해결하며 아랍국가간 상호보완성 및 호혜성을 지지하며 아랍국가의 안전보장 및 아랍국가간의 대결에 관한 사항의 후속사업 이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그는 범세계적인 경제블록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랍공동시장 설립, 교역량 증대 및 투자 장려 등 아랍의 경제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리비아 국민의 대아랍 투자, 특히 인근국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였다.

그러나 아랍의 일부 국가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친 서방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와 리비아의 테러 지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04년에 발생한 왕세자(현 국왕)에 대한 암살 사건에 리비아가 연루되었다는 증거로 인해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sup>27</sup>

## 나. 아프리카 통합 추진

카다피는 1998년 6월 와가두구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정상회의에서 로커비(Lockerbie) 사건에 관한 결의안 채택 등에서 나타난 바와

<sup>27</sup>-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Libya* (July 2007). p. 8.

같이 리비아에 대한 아프리카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비해 아랍권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실망감으로 종전의 아랍통합 우선주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통합우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9년 7월 알제리에서 개최된 제35차 OAU 정상회의에서 카다피는 ‘아프리카 합중국(United States of Africa)’건설을 제안하여 오늘날의 ‘아프리카 연합(AU)’을 만드는 기초를 마련하였다.<sup>28</sup> 이후 2000년 7월 토고에서 개최된 제36차 OAU 정상회의에서 53개 가맹국이 만장일치로 아프리카 헌법안(Constitutive Act Draft)을 채택하였고 2001년 3월 카다피의 고향인 리비아 시르테에서 개최된 제5차 OAU 특별정상회의에서 AU 창설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2001년 7월 잠비아에서 개최된 제37차 OAU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연합’ 출범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연합 출범과 함께 주도권을 두고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세네갈, 알제리 등이 아프리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 파트너십(NEPAD)<sup>29</sup>을 만들어 AU 보다는 NEPAD에 관심을 더 가짐으로써 리비아와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2002년 12월 트리폴리에서 AU 특별 외무장관회의(53개국 중 28개국 참가)가 개최되었고 AU의 헌장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하여 AU 정상회의 의장이 독자적 판단에 따른 산하기구 회의소집 등의 권한을 확대하고 현행 1년 임기의 의장직을 재임이 가능토록 하거나 1년 이상으로

<sup>28</sup> - 서상현, 『아프리카 이해』 (서울: 다해출판사, 2004). pp. 119~120.

<sup>29</sup>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뉴 파트너십’(NEPAD)은 2001년 7월 9~11일 잠비아의 루사카에서 개최된 제37차 OAU 정상회의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도의 MAP(Merger of the Millennium Partnership for the African Recovery Program)와 세네갈 주도의 Omega Plan을 합친 NAI(New African Initiative)를 승인하였다. NAI는 다시 2001년 10월 23일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서 개최된 AU 정상 평의회 발족 준비 회의에서 그 명칭을 NEPAD(New Partnership for the Africa’s Development)로 변경하였다. 서상현, 『아프리카 이해』, op. cit., pp. 162~163.

연장하는 법안과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통합된 입장을 취하게 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회원국의 개별적 조약 체결, 역외국에 대한 군사기지제공 및 군대접수를 금지하는 법안 등을 법제화 하였다. 또한 역내 무력 분쟁 발생 시 즉각적 개입을 통한 평화 회복을 위하여 아프리카 통합군창설과 AU 회원국 탈퇴조항을 삭제하는 일부 사항들이 수정되어 만들어졌다.

#### 다. 사헬 사하라(Sahel-Sahara) 그룹

리비아는 아랍 및 아프리카국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의 전단계로 사하라 사막 주변 국가들의 결속 강화를 통하여 대외적 발언권 강화 및 정치·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 4월 사헬 사하라 그룹 정상회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기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등 6개국 정상 간에 합의하였다.

1999년 4월 14일 트리폴리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000년 2월 차드 엔자메나에서 세네갈, 지부티, 감비아, 중앙아, 에리트리아 등 신규 국가들이 참가하여 11개국 제2차 정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1년 2월에는 수단 카르툼에서 제3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는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등 5개 신규 국가들이 가입함으로써 총 16개국으로 회원국이 확대되었다.

2002년 3월 리비아 시르테에서 제4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는 토고, 베냉 등 2개국이 신규로 가입하여 18개국으로 회원국이 확대되었다.<sup>30</sup> 이 회의에서는 AU 창설의 주도적 역할 수행, 역내국가의 분쟁조정·해결과 역내 인적 물적 교류확대 촉진을 합의하였다. 현재

<sup>30</sup>- <<http://www.arabicnews.com/ansub/Daily/Day/020307/2002030732.html>> 참조.



이 그룹은 인구 3억2천만 명이 포함된 아프리카에 가장 큰 경제단위체 중 하나이다.

### 라. 미국과의 관계

미국은 리비아를 국제 테러리즘을 조장·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테러 지원국가(state sponsor of terrorism)로 규정함으로써 양국간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다. 특히 1980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1981년 이후부터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조치가 개시되었으며, 1991년 걸프(Gulf)전 당시 리비아의 중립적인 입장 유지로 한때 관계개선 가능성도 보였으나 로커비사건 해결 지연, 미국주도의 대중동 평화정책 반대로 비정상적인 양국관계가 지속되었다.

1992년 4월 대리비아 유엔제재 이후,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비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3국을 통하여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1999년 4월 로커비(Lockerbie)사건 혐의자 인도 후에는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및 대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2001년 9월 11일 테러사건 이후 카다피가 테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고 인도적 지원금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정보협력과 로커비 사건 해결을 위해 2001년 10월 및 2002년 1월, 2002년 10월 등 수차례 미국, 영국, 리비아 고위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또한 로커비 사건해결을 위한 주요쟁점 중의 하나인 희생자유족 보상 문제는 리비아측이 27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양측 변호사간에 합의되었다.

이와 같은 양국의 정상화 노력으로 미국은 2006년 5월 15일 리비아와 26년 만에 외교관계를 다시 정상화 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리비

아와 외교관계를 완전히 복원한다면서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곧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제외시켰다.<sup>31</sup>

### 마. 유럽과의 관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등 5개국은 리비아의 주요 교역국으로 이들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는 리비아와의 교역비중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리비아산 원유의 높은 품질 및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인해 석유금수 등 미국의 추가제재 움직임에도 반대해 왔다. 또한 1999년 4월 유엔제재 해제 이후 대리비아 경제 진출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과거 리비아를 식민 지배한 국가로서 일면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인의 생활관습, 행정체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태리는 1998년 7월 양국 외무장관이 참석한 공동 위원회에서 과거 식민잔재 청산과 새로운 관계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 발표에 이어 로커비사건 혐의자 인도 다음날인 1999년 4월 6일 디니(Dini) 외교부장관이 트리폴리를 방문, 사건의 진전을 축하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강화문제를 협의하기도 하였다. 이태리는 정치·경제적으로 리비아의 최대 협력파트너로 리비아 내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프랑스와의 관계는 차드, 튀니지 등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인근 불어권 국가에 대한 리비아의 개입으로 양국관계가 수시로 악화되기도 하였으나 경제협력은 꾸준히 계속되었다. 시락(Chirac) 대통령 당선 후 리비아는 국제무대에서 프랑스가 리비아를 지지해 주기를 기대하며, 프랑스와의 관계 강화에 노력하였고 시락 대통령은 당선 이전 수차례 카

<sup>31</sup>-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Libya* (July 2007). p. 13.

다피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2002년 10월 18일에는 프랑스 빌팽(Villepin) 외교장관이 1985년 10월 두마스(Dumas) 외교장관이후 최초로 리비아를 방문하였고, 2002년 10월 21일 리비아 샬감(Shalgam) 외교장관이 프랑스를 방문, 양국 공동위원회를 통해 무역, 에너지, 경제, 산업, 수송분야에 관한 협력협정에 서명하는 등 실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과 리비아의 대외관계는 1984년 런던 여경 피살사건(Fletcher 사건) 발생으로 양국 외교관계 단절 등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1999년 7월 로커비 사건에 대한 리비아측의 사건책임 인정, 피해자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실시, 테러대처 협력 등의 성의 있는 조치 이행에 따라 양국 외교관계가 재개되었다.

2002년 8월 양국관계 재개이후 영국의 장관급인사로는 최초로 외교부 국무상이 리비아를 방문한 바 있으며, 로커비사건 해결을 위해 리비아의 책임인정 수준에 관한 문안협상과 관련하여 리비아와 미국간의 조정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다.

## 바. 이집트와의 관계

1973년 중동전쟁 이전까지는 국가통합을 추진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협정 이후 대이스라엘 정책을 둘러싼 이견으로 80년대 후반까지 관계가 계속 악화되었다. 그러나 1988년 관계개선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식·비공식 정상회담이 수시로 빈번히 개최되고 있다

이집트는 자국 인력 취업 및 소비재 판매 등 경제적 측면과 함께 리비아를 회교원리주의 세력에 대한 방패로 삼고자 하며, 리비아는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이집트의 중재역할을 기대하였다.

리비아에는 약 1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집트 근로자가 체재하고 있으며, 호텔, 석유화학 분야에서 리비아의 대이집트 직접투자 확대, 국경 지역 인적, 물적 교류 촉진, 양국 전기 및 석유·가스관 상호 연결사업 추진 등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 사. 튀니지와 의 관계

70년대 초반 양국은 한때 리비아-튀니지 연합(Libya-Tunisia Union) 결성에 합의하는 등 관계 긴밀화 추세에 있었으나, 70년대 중반이후 범아랍권 통합을 주창하는 카다피 지도자의 노선과 전통적으로 친서방정책을 우선시한 튀니지 부르기바(Bourguiba) 당시 대통령의 정치노선상의 차이, 리비아에 의한 튀니지 노동자 추방 및 가베스(Gabes)만 대륙붕 관할권 분쟁 등으로 양국관계는 전반적으로 긴장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1987년 11월 튀니지 벤 알리(Ben Ali) 대통령의 집권을 계기로 양국은 아랍·마그레브 연합(AMU) 결성 등 정치적으로 아랍권 통합 추진에 협력하는 한편,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인 상호보완성에 따른 실질협력관계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정상회담, 고위합동 회의 등 정기·비정기적인 협의채널을 활발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리비아에 대한 UN 제재 실시 이후에는 제재해제를 위한 튀니지의 협조와 인원 및 물자의 중계지로서의 튀니지의 위치 등 상호간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양국은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 III. 카다피의 이데올로기와 반체제

#### 1. 카다피의 이데올로기

##### 가. 이슬람과 카다피의 권력구조

혁명 성공 이후 카다피의 새로운 정권은 이슬람에 정통성을 두었던 왕정을 전복하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면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다. 카다피는 혁명이 살아남기 위하여 보수적인 기반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이슬람 성직자인 ‘울라마(ulama)’와 동맹관계를 맺은 카다피는 리비아의 전통을 중시하였다. 특히, 이슬람은 이전 엘리트의 사회적인 특권을 가지지 않았던 그를 선거에 무관심했던 일반인들과 연결을 만들었다.

혁명 후 처음 몇 년 동안, 카다피 정권은 수사학적인 제스처를 뛰어 넘어 많은 이슬람 개혁을 개시하였다. 카다피는 이슬람 사원에서 수시로 연설하였고 공중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하여 성직자들과 상담했다. 이슬람교 성직자는 법 및 교육 영역에 대해 많은 조언을 주었고 이슬람에 따라 리비아의 법률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하여 고안된 국가 지도 위원회(National Guidance Council)를 감독했다. 카다피는 샤리아 법(이슬람교 법률)에 확고하게 기반을 둔 사회경제적 및 정치 체제 건립에 노력하였다. 즉 정통 이슬람 설립이 정의한 이슬람의 새로운 시각에 기반을 두고 카다피는 전통적인 리비아 가치와 그것과 관련시켜서 혁명을 합법화하는 것을 노력했다. 이 모든 것은 카다피가 새로운 이데올로기 노선에 따라 리비아 사회를 재구성할 필요를 느끼며 변화를 시작하였던 것이다.<sup>32</sup>

1973년까지, 카다피 정권은 이슬람과의 힘을 결합하고 사회의 재건을

---

<sup>32</sup>- Raymond Habiby, “Qadhafi’s Thoughts on True Democracy,” *Middle East Review* (Summer 1978); “Mu’ammar Qadhafi’s New Islamic Scientific Socialist Society,” *Middle East Review* (Summer 1979).

위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였다. 그의 ‘그린 북’ 전3권에서 가다듬어 만들어진 카다피의 ‘제3의 이론’은 새로운 리비아의 기둥으로, 평등주의, 사회주의, 아랍주의(Arabism) 그리고 반제국주의(antiimperialism)를 선언하고 있다.<sup>33</sup> 카다피는 새로운 혁명 강령의 부과를 방해할 수 있었던 전통적인 제도들의 영향을 근절하려고 모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카다피는 모델로써 중국의 문화혁명을 수용하였고 혁명의 진전에 단지 방해물이 되는 시민자유와 법적인 보호로써 마오쩌퉁 주의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카다피와 이슬람과의 충돌은 ‘제3의 이론’에서 시작되었다.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제3의 이론’은 종교기관으로부터 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만들어졌다. 주어진 리비아의 보수주의적 문화 환경하에 카다피는 그의 사상이 이슬람에 의해 고무되었으며 그의 진보하는 이데올로기 지위를 위해 이슬람의 동참을 추구하는 것도 계속하였다.<sup>34</sup> 이슬람 성직자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그린 북’의 내용들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또한 이슬람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그린 북’의 사회주의 처방전은 상업과 재산권을 취급하는 이슬람교 법적 원리와 특히 다툼이 많았다.<sup>35</sup>

카다피는 성직자에 의해 이론이 거절되자 종교 기관들에 대한 공격에 착수했다. 카다피는 “그린 북이 복음이다. 새로운 복음이다. 새로운 시대의 복음이자, 대중 시대의 복음이다.”라고 선언하였다.<sup>36</sup> 카다피는 그

<sup>33</sup>- Mu'ammar Al-Qaddafi, *The Green Book* (Tripoli: The Green Book World Center, 1980); Sami Hajjar, "Qadhafi's Social Theory as the Basis of the Third Universal Theory,"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1982). p. 17, pp. 3~4.

<sup>34</sup>- Francois Burgat, "Qadhafi's Ideological Framework," in Dirk Vandewalle, ed. *Qadhafi's Libya, 1969~1994*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sup>35</sup>- Berman, *Qadhafi's Libya*, p. 162.

의 새로운 급진적 이데올로기의 구성요소로서 이슬람 주의들을 재구성하기 시작하였고 종교적 상징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중주의, 아랍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들이 이슬람의 진보적인 재해석으로 도출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제시하였다.<sup>37</sup> 국가와 종교사이의 이분법은 국가가 종교 영역을 몰수함으로써 끝이 난다고 여겼다. 문화혁명의 기치아래 대중적인 위원회는 사원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국가가 종교 재산들을 몰수하는 동안 일부 성직자들은 추방당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성직자 재산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카다피는 “이슬람은 성직자의 계급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중간 매개자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sup>38</sup> 심지어 카다피는 자신이 하디스(hadiths)<sup>39</sup>를 없앴으로써 이슬람 창시자에 대한 도전을 하기도 하였다.<sup>40</sup>

문화 혁명의 시작과 ‘그린 북’의 간행물은 카다피의 종교 기관들에 대한 탄압이라는 위협스런 전략을 취했다. 카다피의 문제에 대해 전통적인 이슬람교에서는 카다피가 이슬람의 원리를 위장하고 괴상한 ‘그린 북’을 만들었다며 전통 이슬람이 보다 더 튼튼한 기초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리비아 대중들은 존경을 받는 성직자 계급들에 대한 카다피의 학대와 이슬람에 대한 교란에 대해 재평가를 시작했다.

<sup>36</sup>- Qriana Fallaci, "An Interview with Colonel Muammar al-Qaddafi of Libya," *New York Times Magazine*, (December 16, 1979).

<sup>37</sup>- Mu'ammarr al-Qaddafi, *The Green Book Part III: The Social Base of the Third Universal Theory* (Tripoli: Green Book World Center, 1980).

<sup>38</sup>- Marius Deeb, "Islam and Arab Nationalism in Al-Qaddhafi's Ideology," *Journal of South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Vol. II, No. 2 (Winter, 1978), p. 16.

<sup>39</sup>- 하디스는 무함마드가 말하고(Qaul), 행동하고(Fi'ul), 다른 사람의 행위를 묵인한(Taqreer) 내용을 기록한 책이며 꾸란(코란), 이즈마,끼야쓰와 함께 샤리아(이슬람 법)의 4대 원천이다.

<sup>40</sup>- Al-Fajar al-Jadid, February 20, 1978, p. 3.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성공적인 카타피의 정치적 실험을 위해 리비아 인들은 그들의 기존 규범과 사회적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혁명적인 정체성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반면 완고한 전통주의는 이슬람에 의해 생존되었고, 카다피는 간단하게 그의 혁명을 제도화하거나 그의 시각을 영속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기초를 창조하지는 못했다. 카다피의 입장에서는 그의 절대적 권력 통제를 제공하는 유일한 정당성은 혁명정부의 경제 수치로 보여주는 것 외에 없었다.

### 나. 아랍주의와 반제국주의

“승리가 아니면 죽음이다. 우리에게겐 결단코 굴복이란 없다.” 리비아의 대이탈리아 식민투쟁의 영웅 오마르 알 무크타르의 이 유언은 카다피의 좌우명이다. 그는 저항가이자 투사였고, 혁명가였다.<sup>41</sup>

카다피는 자신의 혁명 구상을 ‘그린 북’을 통해 정리하고 전파했다. ‘그린 북’의 이상은 ‘아랍식 사회주의’로 부를 만하다. 카다피는 서구의 정당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산시키는 제도로 규정한다. 동일한 정책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민주주의적 통치기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sup>42</sup>

카다피는 반제국주의, 반미의 선봉장으로 아랍민족주의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자임했다. 모든 아랍인들을 하나의 민족국가로 통일시키겠다는 아랍민족주의는 1924년 오스만제국이 공식적으로 해체된 이후부터 중동을 지배한 강력한 이데올로기였다.

아랍민족주의의 이념이 정치적인 힘으로 등장한 것은 이집트의 나세

<sup>41</sup> - 이왕재, “카다피의 새로운 선택”, 시대정신<<http://www.zeitgeist.co.kr>>, 2004년 7월 6일자.

<sup>42</sup> - Muammar Qadhafi, *The Green Book* (Tripoli: Public Establishment for Publishing), Advertising and Distribution, 1977, p. 11.



르에 의해서였다. 나세르는 유럽이 임의로 그어놓은 국경선에 따라 세워진 중동의 현대 민족국가들은 아랍 민족의 분열된 실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고 아랍인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이념이 나세르에 의해 제시되었을 때 중동의 아랍인들은 열광했다. 1958년 이집트와 시리아가 통합을 선언하고 통일아랍공화국을 만들었다. 초대 대통령으로 나세르가 선출되었다. 그리고 1963년에는 이라크에 바스당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3개국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통일아랍국가 창설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한정된 엘리트 주도의 통합 시도로는 이기적인 지역민족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고, 결국 아랍통합의 꿈은 무산되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1967년 아랍연합국과 이스라엘간에 벌어진 6일전쟁에서의 패배이다.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체결한 평화협정은 아랍민족주의를 지탱해온 반시오니즘의 약화를 의미했고, 개별 아랍국가들의 자국 이익 추구, 서구에 대한 경제 의존도 증가의 경향성은 더욱 커졌다.

카다피는 이렇게 꺼져가는 불씨였던 아랍민족주의를 집권의 새로운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그는 집권 초기부터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강력히 반대하는 ‘거부전선(rejectionist front)’의 지도자 역할도 자임하기도 했지만, 리비아를 다른 아랍 국가들과 통합하려는 끈질긴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카다피는 혁명 성공 후 곧 아랍주의와 반제국주의의 가치를 내걸고 혁명정부의 정당성을 시도하였다. 특히 그가 혁명의 영감을 받았던 나세르 주의로 대표되는 범아랍민족주의는 리비아 국민들에게 반이스라엘, 반제국주의를 심어주었다. 카다피는 이스라엘은 아랍 형제국인 팔레스타인의 땅으로 반드시 되돌아갈 것이라고 믿었다. 카다피는 “아랍국가들은 하나의 동일한 실체이며 아랍의 힘을 단결함으로써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랍주의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카다피는 혁명을 통해 권력을 잡은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리비아, 이집트 그리고 수단과 정치적 유대를 제안하였다.<sup>43</sup> 새로운 아랍공화국연방(Federation of Arab Republics: FAR)이 1969년 12월 25일 트리폴리 헌정(Tripoli Charter) 하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sup>44</sup> 나세르가 지도자가 되고 카다피와 수단의 누메이리(Numeiry)가 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나세르가 뜻밖에 사망하고 사다트(Anwar Sadat)가 이집트 대통령으로 대체되자 이 정치 동맹체는 곧 와해되었다.<sup>45</sup> 이는 사다트의 친미주의로 인해 동맹체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카다피의 혁명 목적 중의 하나는 식민주의에 대한 반감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증오와 함께 형성된 반제국주의이다. 카다피는 자신이 반제국주의의 선봉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해방운동단체들과 연결되었다. 카다피는 테러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미국은 카다피를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주요 인물로 지목하고 대립하게 되었다. 결국 카다피는 국제적 고립 속에 리비아가 필요로 하는 무기구입과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친미 성향으로 또 다른 제국주의로 불리었던 소련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갖게 되었다.<sup>46</sup>

1969년 8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소련 해군이 키레나이카 해안에

<sup>43</sup>- Joseph T. Stanik, *El Dorado Canyon: Reagan's Undeclared War with Qaddafi* (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3), p. 16.

<sup>44</sup>- Janice Monti-Belkaoui and Ahmed Riahi-Belkaoui, *Qaddafi: The Man and his Policies* (Brookfield, VT: Ashgate Publishing Ltd., 1996), p. 66.

<sup>45</sup>- Janice Monti-Belkaoui and Ahmed Riahi-Belkaoui, *Qaddafi: The Man and his Policies*, p. 65.

<sup>46</sup>- Mansour O. El-Kikhia, *Libya's Qaddafi: The Politics of Contradiction* (Gainesville, FL: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7), p. 131.

서 주요 해군 훈련을 실시하였다. 소련은 새로운 카다피 정권의 탄생으로 좋은 군사 파트너를 얻었다고 간주하였다.<sup>47</sup> 1972년이 시작되자 이집트가 사다트 등장 이후 소련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양국은 더욱 밀접한 군사 관계를 지속하였고 특히 1974년 이후 소련은 리비아의 항구와 비행기지를 이용할 수 있어 서부 지중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소련은 또한 리비아에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리비아의 석유와 석유달러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양국 관계도 소련이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에 대해 이슬람 형제국인 파키스탄보다 인도를 지지하고 이집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 때문에 리비아는 소련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다.<sup>48</sup>

## 2. 카다피의 권력구조와 반체제

### 가. 카다피의 권력구조

카다피는 1969년 9월 1일 서구와 결탁해 국민을 착취하는 왕정체제를 타도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무혈혁명을 일으켜 성공했다. ‘자유통일장교단’이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이끌었던 카다피는 집권 후 ‘그린 북’이라는 저서를 통해 자신의 철학과 이념을 설파하고 이를 토대로 1977년 3월 2일 자마히리야 체제를 선포했다.

1969년 군사 쿠데타 이후 집권 초기에 카다피는 그 자신만의 정치 시스템인 제3세계 이론을 채택하였다. 이 시스템은 이슬람 부족의 훈련에서 유래하였는데 이후 리비아 사회주의와 결합되었고 리비아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 간주되었다.<sup>49</sup>

<sup>47</sup>- Belkaoui, Qaddafi: *The Man and His Politics*, p. 16.

<sup>48</sup>- *Ibid.*

<sup>49</sup>- Mu'ammār Al-Qaddafi, *The Green Book* (Tripoli: The Green Book World Center, 1980).



이 체제에서 리비아의 모든 국민은 기본 국민회의 멤버가 되고, 기본 국민회의가 뽑는 서기들로 구성되는 총 인민회의가 국민의 대표로서 최고통치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제도가 카다피의 장기독재를 합리화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카다피는 공식 직함 없이 혁명지도자, 국가원수 등의 자격으로 리비아를 38년째 통치하는 최고실권자로 군림하고 있다.

카다피는 리비아 통치를 위해 혁명 평의회를 해체하고 총 인민회의(GPC: General People's Congress)가 국가 최고기관의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또한 그는 국호를 「리비아 아랍공화국」에서 「리비아 인민사회주의 아랍 공화국」(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으로 변경하였고 내각(Council of Ministers)을 폐지하고 26명의 비서로 구성된 총 인민위원회(General People's Committee)를 설치하여 각 비서가 행정 각부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카다피는 총 인민회의 총서기국 서기장(국가원수직)에 취임하였고 각지방 수준에서 인민위원회를 구성하며, 주민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정치시스템을 만들었다.<sup>50</sup>

또한 그는 해외 공관들에 개혁 작업을 1979년 9월에 시작하였다. 개혁의 주 내용은 직접민주주의 철저와 체제 견고화를 위해 해외공관 명칭을 인민사무소로 개칭하였고 해외 유학생, 교민들로 하여금 해외공관을 접수케 하여 인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아랍 민족주의에 심취해 있던 그는 혁명 이후 반제국주의, 반 서방 외교노선을 추구했다. 그는 1970~1980년대 동안에 오일 자금을 이용하여 그의 이데올로기를 리비아 외부로 진전시켰고, 특히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외부 세계로부터 많은 비난에 직면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유엔은 1992년 스코틀랜드 로커비에서 발생한 팬암 항

<sup>50</sup>-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Libya* (July 2007). p. 4.

공 103기 폭파 사건을 리비아 정부가 개입했다며 카다피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제재를 가했다. 카다피는 또한 1985년에 자국에 근로자로 파견된 이집트, 튀니지, 말리, 모리타니아 근로자 약 5만 명을 추방함으로써 이집트, 튀니지와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1990년 말부터 경제개혁과 대외노선으로 실리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2003년 12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량살상 무기의 완전 포기를 선언해 미국 등 서방권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리비아의 국부를 창출하는 석유산업에 대한 개방을 추진하는 등 국수주의적인 모습을 떨쳐내는 변신을 계속했다. 리비아는 또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지분 매각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금융 산업 개방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카다피는 그런 변신 속에서도 30년 전 채택한 자마히리야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한 언론 회견에서 “리비아는 완벽한 자유와 참정권이 보장된 인민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마히리야 체제를 옹호하면서 자신이 독재자로 통치했다면 리비아는 지금 지상낙원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나. 반체제

리비아의 카다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동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그가 집권한 38년간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강력한 반체제가 리비아에서 형성되지 않았다. 이는 보안군과 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반체제에 대한 감시와 아랍민족주의와 반제국주의로 일반 국민들을 외세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상대적으로 국내문제는 철저히 통제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 냉전이 종식되고 리비아의 가장 큰 수익원인 석유가격의 하락으로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자 1990년대에 카다피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급증하였다. 중산층 계



급의 권리를 빼앗긴 구성원들, 불평을 품은 혁명세력들 그리고 혁명이 후에 태어난 리비아의 새로운 세대들이 카다피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류들에 편입하였다.

유명한 역사학자 칼 브라운은 한때 “단결과 정체성의 상징으로써 이슬람은 북아프리카에 존재하고 있으며 반면 아랍 민족주의는 아랍 동부에 있다”라고 주장했다.<sup>51</sup> 대부분의 중동 통치자들이 세속적 민족주의를 공언한 다양한 유형들이 있었던 반면, 리비아 지도자들은 대개 이슬람에 의존하였다. 리비아의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은 이드리스 군주와 심지어 카다피 혁명의 초기 단계조차 전통적 이슬람에 의존하였다. 종교는 리비아 정치문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집단 행위를 불러일으키게 하며 그리고 정통성을 지닌 정부 권한을 지니게 한다. 이슬람의 힘은 대안적인 세속적 철학의 발전을 방해하기도 한다.

리비아에서 반체제의 선봉에는 이슬람 성직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슬람 세력의 카다피에 대한 반대는 단편적이었고 이들은 정권의 보안 기관에 의해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이슬람 실체들은 지지자들을 넓혀갔다. 올라마는 항상 급진노선에 따라 이슬람 원리를 바꾸려는 카다피의에 대해 교란하기도 하며 ‘그린 북’의 집요한 비평가들이었다. 정권의 제제에도 불구하고 사원들은 사회 정치적 논평의 장소로써 남았다.

‘이슬람 해방 정당(Islamic Liberation party)’과 ‘이슬람 형제애(Muslim Brotherhood)’는 카다피 정권을 흔드는 중요한 조직 중 하나이다. 이슬람 해방 정당의 강령은 국가의 무력과 부패를 비판하고 부의

<sup>51</sup> - L. Carl Brown, “Islam’s Role in North Africa,” in William Zartman ed., *Man,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North Africa* (New York: Prager, 1973), p. 32.

공정한 재분배의 진보적인 아젠다를 주장하였다. 무장 저항에 대한 ‘이슬람 해방 정당’의 승인과 대학교와 사관학교 학생들의 성공적인 무장 훈련은 카다피 정부와 대결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비록 카다피 정권에 의해 오랫동안 탄압받기도 했지만 ‘이슬람 형제애’는 부활을 경험하였다. 광대한 사회 복지 프로젝트의 설립을 통해, 형제애는 경제적 빈곤과 과도 인구로 고통 받는 도시 중심에서 사회적인 결속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이슬람 순교자 운동(Islamic Martyrs’ Movement)’과 ‘리비아 이슬람 단체(Libyan Islamic Group)’들은 최근 정치 국면에 나타난 두 조직이다. 두 조직 다 베일에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리비아 군인들로 대개 이루어져 있다. 두 조직 모두 폭력의 개입에 이미 숙달된 단체들이다.

이슬람교도들의 폭력 수준은 지난 수년간 격렬함의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였는데 특히 중부와 동부 리비아에서는 정부 보안군과 이슬람단체들 사이에 매일 충돌이 벌어졌다는 보도가 있다. 이슬람 활동가들은 리비아 전역에서 정부 보안군과 싸웠는데 특히 리비아의 두 번째 큰 도시인 벤가지에서는 경찰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사이에 격렬한 대치 상황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1996년 6월에서는 카다피 경호원 한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1998년 6월에는 이슬람 신비주의 운동단체가 벤가지 인근에서 카타피의 호송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카다피가 부상을 당하고 이집트 방문을 취소하는 등 카다피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었다.<sup>52</sup>

이슬람 조직들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군은 카다피 혁명의 미래를 결

---

<sup>52</sup> - Middle East International, October 6, 1995, p. 10; Middle East International, July 19, 1996, pp. 12~13.

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군도 쿠데타 시도를 시도하는 등 군이 카다피를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다.<sup>53</sup> 보안군 역시 1996년 9월과 11월에 시도된 쿠데타를 사전에 막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 시켰다.<sup>54</sup>

비록 군이 카다피의 지배를 끝내는 힘이 있더라도, 군은 통치할 합법적인 이데올로기가 결여되어 있다. 반대로, 이슬람주의자들은 카다피의 사망을 가져올 만한 역량이 부족하지만 통치를 위한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확실성을 약속할 수는 있다. 이 두 단체가 동맹을 하면 힘과 적절한 이데올로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는 있다.

이처럼 리비아에서 간헐적으로 카다피에 대한 도전이나 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있지만 리비아에서의 정치 위협은 극소수로 현재 카다피의 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들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현재 리비아 보안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에 의한 정권 정복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시민들의 분규가 2000년 10월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리비아인들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주의적 공격을 한 것이다.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국으로 떠났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지만 카다피 정권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리비아의 서구 국가들과의 개방정책은 고유가와 결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의 결과로 더욱 공고화 되고 있으며 카다피 정권의 권력 유지도 보다 공고히 지켜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리비아의 가장 중요

<sup>53</sup>- Francois Burgat, "Qadhafi's Ideological Framework," in Dirk Vandewalle, ed. *Qadhafi's Libya, 1969~1994*, p. 60.

<sup>54</sup>- Al-Watan al-Arabi, December 1, 1986, p. 28.



한 정치위협 요소는 권력 승계 문제라 할 수 있다. 비록 현재 카다피의 장남 사이프 알 이슬람(Saif al-Islam)이 다음 후계자로 유력하지만 공식적인 계승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카다피 이후의 시나리오는 카다피 사후 그의 권력 중추부의 측근 그룹에서 권력 공백을 막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다피 사후 정치권력을 다투는 경쟁 단체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

## IV. 카다피체제의 변화

### 1. 변화요인

카다피는 미국 부시정권에 의해 악의 축으로 지정된 리비아의 지도자였다. 그러나 최근 카다피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미국이 볼 때 리비아가 택한 길은 이라크 방식보다 훨씬 바람직한 갈등해소법이 되었다.

그 동안 카다피는 극단적인 반 서방, 반 유대정책을 추진하며 서방과 대결해 왔다. 그는 구호를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테러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행동으로 서방에 대한 반감을 표시했다.

카다피는 반 서방 성향을 띤 전 세계의 다양한 혁명단체와 테러단체에게 재정지원을 했다. 미국과 서방에 대한 리비아의 적대심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서구 세계 특히 미국에 있어서 1970~1980년대는 악몽의 테러시대였다. 1970년 3백 건이었던 테러발생 빈도는 1985년에는 3천 건이 넘었다. 미국은 테러를 지원하는 인물이 리비아의 카다피라고 믿었다. 카다피가 연간 8천여 명의 테러리스트를 훈련시키고 장비와 자금을 제공했으며 유럽에 거점거점을 제공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었다. 일부 서구의 테러 전문가들은 만약 테러리즘에 대한 노벨평화상이

있다면 이는 카다피가 가장 유력한 후보일 것이라는 조롱을 하기도 하였다.<sup>55</sup>

특히 카다피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다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레이건은 카다피와 같은 급진적인 지도자들은 미국의 힘으로 권좌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카다피 정권은 레이건 행정부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sup>56</sup> 즉 카스트로가 케네디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듯이 카다피는 레이건과 적대관계가 형성하였고 이들은 미국과 영국이 주장하는 혁명을 수출하는 국제적 불량아로 취급하였다.<sup>57</sup>

1981년 1월 레이건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리비아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행동에 착수했으며 카다피를 그의 권좌에서 축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sup>58</sup> 미국은 리비아에 대해 외교적 고립을 시도하였고, 석유 수입 감축과 리비아 자산의 동결 그리고 국제무역 관계들을 붕괴시키기 시작하였다.<sup>59</sup>

1천 5백 명의 미국 원유 근로자들을 리비아로부터 철수시켰고 리비아 석유 금수를 시작하였다. 레이건은 카다피를 ‘중동의 미친 개’로 표현하였고 심지어는 ‘여우와 같은 교활한 인간’이라고 주장하였다.<sup>60</sup>

<sup>55</sup>- Belkaoui, Qaddafi: *The Man and His Politics*, p. 25.

<sup>56</sup>- Martha Crenshaw, “Theories of Terrorism: Instrumental and Organizational Approache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10, No. 4 (December 1987), p. 28.

<sup>57</sup>- *Ibid.* p. 140.

<sup>58</sup>- Claudia Wright, “Libya and the West: Headlong into Confrontation,” *International Affairs*, Vol. 58, Issue 1,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Winter 1981~82), p. 13.

<sup>59</sup>- Ronald Bruce St. John, *Libya and the United States: Two Centuries of Strif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p. 132.

<sup>60</sup>- Brian L. Davis, *Quaddafi, Terrorism, and the Origins of the U.S. Attack on Libya* (New York: Praeger, 1990), p. 22.

첫 번째 공개적인 적대적 충돌이 1981년 8월 19일 발생하였는데 리비아의 SU-22 전투기 두 대가 리비아 영공에서 미국 F-14 톱캣 전투기와 교전을 벌이다 두 대 모두 격추되었다.<sup>61</sup>

1985년에는 긴장이 보다 더 높아졌는데 이는 서구에 대한 일련의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리비아와 연루되어 있다고 서방과 미국이 비난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사의 코펜하겐 사무소가 폭탄테러를 당했으며 또한 로마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인근 카페에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85년 10월에는 이탈리아 유람선이 이집트 영해에서 납치당해 미국인 인질 한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들 납치범들은 리비아에서 영웅대접을 받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카다피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치르려던 리비아 14회 독립기념식 참석 계획을 취소하였는데 카다피는 “유엔 본부가 국제 테러리즘의 지도자와 인권에 적대적인 나라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라며 미국 또한 테러리즘 국가로 지목하였다.<sup>62</sup>

1986년 레이건 행정부는 카다피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백악관 안보회의에 테러대비정책 입안을 지시했고 동시에 리비아의 시드라 만에서는 압력행사를 위한 해군력 시위가 있었다. 1986년 3월 24일 리비아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200해리 영해를 — 카다피가 선정한 소위 ‘죽음의 선’ — 미국 제6항공모함이 넘어 들어서자 리비아의 공격이 있었다.<sup>63</sup> 리비아 방공군의 SA-5가 초계중인 미 해군 톱캣에 발사되었고

---

<sup>61</sup>- Belkaoui, Qaddafi: The Man and his Politics, p. 37; Scott Anderson, “The Makeover”, *New York Times Magazine* (New York: New York Times, Section 6, January 19, 2003), p. 47.

<sup>62</sup>- Ronald Bruce St. John, *Libya and the United States: Two Centuries of Strife*, p. 131.

<sup>63</sup>- Boaz Ganor, “Libya and Terrorism”, from *Survey of Arab Affairs - A Periodic Supplement to Jerusalem Letter/Viewpoints* (SAA: 28 29 Iyar

툼캣은 항모전단에 접근한 두 대의 미그 25를 격추시켰다. 다음날도 충돌은 계속되어 미군의 A-7이 리비아의 샘 기지를 공격하고 항모에 접근하려는 리비아 함정 3척을 격침시켰다.<sup>64</sup> 1986년 4월 2일 그리스에서 미 항공기가 폭파되어 미국인 4명이 사망하고 사흘 후 베를린의 디스코텍에서 폭탄테러로 미군 2명 사망, 미국인 79명이 부상했다.<sup>65</sup> 미국은 이것이 리비아의 복수라고 믿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선택은 분명해졌다.

1986년 4월 14일 그리니치 표준시 오후 5시 36분, 영국의 레이큰히스 기지에서 24대의 F-111F와 5대의 EF-111이 이륙했다. 2차 대전 이후 영국에서 이륙하는 미군의 첫 번째 폭격이 시작된 것이다. 작전의 내용은 미군 공군기가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 지중해의 미 함대 함재기와 합류하여 벵가지와 트리폴리의 목표를 타격한다는 것이었다. 이 작전의 목표에는 테러리스트 캠프와 카다피의 숙소가 포함되었다. 1기의 전투기를 잃고, 목표를 빗나간 폭탄이 프랑스 대사관 근처에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목표를 파괴하였다는 점에서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카다피를 사살하지는 못했지만 카다피 양녀를 포함 37명이 사망하고 13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sup>66</sup>

1988년 12월 21일 영국발 뉴욕행 미국의 팬암기가 스코틀랜드 로커비(Lockerbie) 상공에서 폭파되어 탑승자 259명, 지역주민 11명 등 총

5752, June 1, 1992), p. 13.

<sup>64</sup>- Austin Granville, "The Libya Raid and the Arab-Israeli Dispute",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Vol. 15, Issue 4 (Summer 1986), p. 100.

<sup>65</sup>- Alexander M. Haig, *Caveat: Realism, Reagan, and Foreign Policy* (New York: Macmillan, 1984), p. 116.

<sup>66</sup>- Boaz Ganor, "Libya and Terrorism", from *Survey of Arab Affairs - A Periodic Supplement to Jerusalem Letter/Viewpoints* (SAA: 28 29 Iyar 5752, June 1, 1992), p. 3.

270명이 사망하는 팬암기 테러 사건(일명 ‘로커비 사건’)이 발생했다.<sup>67</sup> 영국은 이를 1986년 트리폴리 폭격에 대한 보복 테러로 규정하고, 2명의 리비아인 용의자를 영국 법정에 인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1989년 9월 프랑스 UTA 항공사의 항공기가 폭발하여 171명이 사망하는 ‘UTA 사건’이 발생했고, 프랑스 정부는 이 사건의 배후조종자로 4명의 리비아인을 기소했다.<sup>68</sup>

<표 2-3> UN의 대 리비아 경제제재 주요 일정

| 1988. 12. | 뉴욕행 미국팬암기 103편, 로커비 상공에서 폭파          |
|-----------|--------------------------------------|
| 1989. 9.  | 스코틀랜드, 리비아 정보요원 2명을 여객기 폭파 혐의로 기소    |
| 1992. 1.  | UN, 리비아 정부에 여객기 폭파 용의자 2명의 신병인도 요청   |
| 1992. 3.  | UN, 제1차 리비아 경제 제재 결의                 |
| 1992. 4.  | UN, 제1차 경제 제재 발효                     |
| 1993. 12. | UN, 제2차 경제 제재 결의 및 시행                |
| 1996. 2.  | 리비아 의회, 여객기 폭파 용의자 인도 거부 의결          |
| 1998. 12. | 미국 클린턴 대통령, 로커비 사건 추도사에서 기존 입장 고수 천명 |
| 1999. 3.  |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로커비 사건 증재차 리비아 방문       |
| 1999. 3.  | 리비아 정부, 서방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최종안을 UN에 전달  |
| 1999. 4.  | 리비아 정부, 여객기 폭파 용의자 2명 UN측에 인도        |

출처: 본인 작성

<sup>67</sup>- Ronald Bruce St. John, *Libya and the United States: Two Centuries of Strife*, p. 148.

<sup>68</sup>- Boaz Ganor, “Libya and Terrorism”, p. 3.

리비아는 이러한 사건 규정에 크게 반발하고 리비아인에 대한 모든 인도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경제제재를 연장했음은 물론 UN 안보리도 1992년 4월 15일부터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행한다는 결의 748호를 채택했다.<sup>69</sup> 1980년대 리비아의 연간 석유 수익은 15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는 유엔의 제재로 70억 달러로 급격히 하락하였다.<sup>70</sup>

이처럼 미국과 리비아는 1980년대 중반이후 많은 충돌이 있었다. 리비아는 냉전시대의 한 축이었던 소련의 지원을 바랬지만 소련은 리비아 사태에 대해 방관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미국과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한 이집트와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카다피는 소련에 대해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는 더이상 미국과의 대결 구도로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카다피는 1988년 팬암기 폭파 사건의 범인 2명을 사건 발생 10년여 만인 1999년 4월 5일 서방에 인도한 뒤 리비아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선언하면서 서방과의 화해를 가시화했다. 2002년 3월 스코틀랜드 고등법원은 팬암기 폭파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인 알메그라히(Maghrabi)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한명인 피마(Fhimah)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언하였다.<sup>71</sup> 리비아 정부는 2003년 5월 28일 팬암기 폭파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270명의 유족들에게 1인당 1,000만 달러, 모두 27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8월 13일 이에 서명했다.<sup>72</sup> 이에 따라 UN은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sup>69</sup>- Mansour O. El-Kikhia, *Libya's Qaddafi: The Politics of Contradiction* (Gainesville, FL: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7), p. 1.

<sup>70</sup>- Arnold Beichman, "Qaddafi's Safe House for Terrorism," in *National Review*, Vol. 34, Issue 3, February 19, 1982, p. 164.

<sup>71</sup>- Ronald Bruce St. John, *Libya and the United States: Two Centuries of Strife*, p. 188.

해제했고, 리비아는 10년여에 걸친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리고 2003년 3월 리비아는 미국과 영국에게 먼저 비밀리에 대량 살상무기를 모두 폐기기로 했음을 발표했다.<sup>73</sup> 그리고 2003년 12월 19일 카다피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의 자유지대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공식적으로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폐기를 선언하였다.<sup>74</sup>

리비아측의 발표가 있는 직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리비아의 결정을 환영했다. 리비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리비아 핵 시설 사찰을 허용한다고 2004년 1월 14일 밝혔다.<sup>75</sup> 이로써 리비아와 서방국가들은 대결 국면에서 화해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하게 되었고 최근 리비아의 경제개발 특히 유전개발에는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왜 카다피는 미국 및 서방과의 대결국면에서 화해국면으로 변화하였을까? 카다피가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UN 제재로 심화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돌파구가 절실히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석유 매장량 세계 3위인 리비아는 UN 제재로 1,080억 달러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세계은행은 추정하고 있다. 1992년에 시작된 UN 제재로 연속 타격을 입은 리비아는 실업률이 30%, 인플레이션율이 연 50%를 육박하는 등 심각한 경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

<sup>72</sup>- Khalil I. Matar and Robert W. Thabit, *Lockerbie and Libya: A Study in International Relations* (Jefferson, NC: McFarland and Co., 2004), p. 239.

<sup>73</sup>- “U.S./UK Negotiations with Libya Regarding Nonprolifer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8, No. 1 (Winter 2004), p. 195.

<sup>74</sup>- *Ibid.*, p. 196.

<sup>75</sup>- *Ibid.*, p. 197.



둘째, 이로 인한 체제불안의 가속화 속에서 실용주의 노선이 권력 투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다. 리비아 정부 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실용주의 노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마르 알문타시르 전 총리와 압달라 살림 알바드리 에너지 장관이 실용노선의 대표주자로서 이들은 리비아의 장기적인 경제 활력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경제개혁과 함께 외국으로부터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파는 정권의 정통성을 위해 과거의 극단주의를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카다피는 1990년대 말 실용주의를 선택했다. 1999년 4월 카다피가 UN이 요구하던 팬암기 폭파 사건 용의자를 인도하겠다고 밝힌 뒤, “세계는 격렬하게 변하고 있어 생각과 통치 방식을 바꾸어야 하며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세계의 흐름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연설했다.

셋째, 이러한 카다피의 선택을 강요했던 국제질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11 테러 이후 반테러, 반야만의 국제정서 확산과 세계시장의 통합 경향 속에서 고립주의 노선은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소 대결의 양극 세계 체제 속에서는 일방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표출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후견 하에 세계 속에서 일정한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었던 반면, 냉전 질서 해제 이후 미국의 일극 체제 하에서 반미는 곧 고립과 침몰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넷째, 서방 당국이 런던 정경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한, 무아마르 카다피의 아들이자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를 주요 협상 채널로 활용한 것도 아주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웰턴 의원은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를 통해 그의 아버지 카다피가 WMD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방 세계는 강은 양면 정책을 활용하면서 리비아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전개했다.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중동담당 프린트 레브렛에 의하면 리비아는 오랜 경제제재와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90년대 말부터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리비아가 19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발생한 팬암기 폭파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한 관계개선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부시 행정부 들어와 미국은 리비아측에 로커비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배상하고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면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거래의사를 밝혔다. 이 제안은 콘돌리사 라이스 안보보좌관과 콜린 파월 국무부장관이 주축이 되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낸 것이었다.

영국은 미국을 대신하여 리비아와의 양자접촉을 9개월 이상 집요하게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 양자협상은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니라 양국 정보기관을 통해 은밀히 이루어졌다. 리비아 문제의 전향적 타결은 이 같이 물밑 접촉을 통한 ‘조용한 외교’가 만들어낸 승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 지원 하에 비밀 협상을 추진하면서 관료정치의 이전투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성공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카다피에게 세계의 변화를 읽는 능력이 없다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는 이미 2000년 5월 미 언론과의 회견에서 “오늘의 세계는 어제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리비아도 과거의 리비아가 아니다.”라며 “집권 이후 전 세계가 급변했으며 나도 그 과정에 부응했다.”고 말했다. 이는 리비아의 변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경제실패와 실용주의로의 전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리비아는 막대한 석유보존 자원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미국의 경제제재로 경제는 침체되었다. 이에 카다피는 ‘그린 페르스트로이카(Green Perestroika)’로 불리어지는 녹색현장을 1988년 6월 선포하였는데 이는 유가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민생활이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고 국정쇄신을 위해 취한 정책이었다.<sup>76</sup> 이 정책을 통해 여행자유화 조치, 소규모 사기업 인정, 체포·구금 제한 등 인권존중 조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이 이루어 졌다.

카다피의 경제 정책은 혁명의 정치적 실험 보다는 훨씬 실망스러웠다.<sup>77</sup> 이것은 경제의 정치적인 파생효과가 농후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카다피 정권은 대중적인 지지도 없이 경제정책을 수행하였다. 카다피는 소규모 거래와 임대업을 없애고, 은행 계좌 압류와 부르주아 계급의 일소 등을 이끌어 냈다. 민간 부분은 효과적으로 국유화가 되었으며 근로자 스스로의 경영 위원회 감독관을 통해 경제를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의 효과는 비능률적이고 또한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 귀중한 자원의 다량 낭비로 이어졌고 경제실적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농업과 산업 분야의 세밀한 조사를 보면 카다피 경제 접근의 구조적 부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농업 분야는 1970년 이래 정부지출에서 약 350억 달러를 흡수했다. 모든 리비아 통치자가 만나는 첫 번째 문제 중 하나는 자연적인 한계이

<sup>76</sup> - <http://www.arabdatanet.com/country/profiles/profile.asp?CtryName=Libya&CtryAbrv=li&NavTitle=Economic%20Review>.

<sup>77</sup> - Dirk Vandewalle, “The Libyan Revolution After Twenty Years, Part I: Evaluating the Jamahiriyyah,” *Universities Field Staff International, Africa/Middle East*, No. 2 (1990~1991); Dirk Vandewalle, “The Libyan Jamahiriyya since 1969,” in Dirk Vandewalle (ed.) *Qadhafi’s Libya, 1969~1994*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p. 20~41.

다. 리비아 강우량의 90%는 농업을 지탱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카다피 정권은 이 요인들을 초월하는 혁명적인 엘리트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자원 부족 지방에서 자랑스러운 프로젝트들을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타협하게 했다. 정권의 야심찬 노력은 270억 달러를 이용한 인공적인 강을 만드는 것으로 지하의 수자원을 끌어올려 4천 마일이 넘는 수송관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그 결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득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리비아 도시는 지금 물이 부족하다. 더운 여름에는 물 배급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값 비싼 관개 프로젝트를 통해 사막에 꽃을 피우는 것과 이익이 없는 국가 농장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경제 운영은 필수 식료품의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다. 이는 충분한 강수를 확보한 동부 리비아에 대한 농업 투자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계획과 투자가 이루어진 25년 후 오늘날 리비아는 필요한 식량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을 자급자족할 뿐이다.<sup>78</sup>

우선권과 비용 지출의 잘못은 산업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혁명 정권은 자본집약적인 중공업에 특별한 강조를 두고 산업 인프라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리비아는 수입대체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적으로 훈련된 토착 노동 인구가 결여되었다. 산업 엘리트들에 대한 카다피 정권의 억압과 정치적 불신으로 인해 소규모 기술관료 계급조차 제거함으로써 산업 부분의 장기적 번영을 가로막기도 했다. 그러므로 정책 지속과 산업부품의 부족 그리고 많은 정책의 혼돈은 석유화학과 제철 공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리비아에는 많은 산업 공장이 있다. 그러나 여러 생필수품들은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sup>79</sup>

---

<sup>78</sup>- Dirk Vandewalle, "The Libyan Jamahiriyya since 1969," in Dirk Vandewalle, *Qadhafi's Libya, 1969~1994* (New York: St. Martin, 1995), p. 29.

오랫동안 카다피는 석유판매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1980년대 말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은 리비아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켰다. 때문에 이데올로기의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고 단지 대중적인 동원으로 정권을 유지하던 카다피 정권은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카다피는 1990년대 초부터 새로운 자유화 조치를 시작하였다.<sup>80</sup> 새로운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의 지출과 지출 규모를 크게 감소하였다. 1999년 엄격해진 예산은 80%까지 감소시켰으며 심지어는 보건과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도 대폭적으로 삭감하였다.<sup>81</sup> 농업 정책은 일부 토지 재분배 계획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국가는 또한 소매 무역 및 개인 은행의 부분적인 재출현을 받아들이고 선진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시도했다.

또한 가시적인 자유화 조치들을 방해하는 심각한 정치 요소들도 있다. 정권 출신들에 의한 많은 공공 기업의 탄생은 엘리트들의 비대화를 가져왔다. 또한 많은 자유화 조치들은 정제된 공공 분야에 혼란을 야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자유화와 혼란을 지닌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다. 분배 경제에서 국가 정당성의 주요 원천은 부의 분배를 위한 수행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그러므로 임금과 가격은 인위적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 부담스러울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한계와 부족으로 결국 정권의 정통성

<sup>79</sup>-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bya*. Quarterly Report (1981~1996).

<sup>80</sup>- Dirk Vandewalle, "Qadhafi's 'Perestroika.' Economic and Political Liberalization in Libya," *Middle East Journal* 45 (Spring, 1991).

<sup>81</sup>- "Libya's Congress Passes 4.9 Billion Dinars Budget," *Reuters* December 16, 1998.

은 비례하여 줄어들었다.

역설적으로, 대폭적인 개혁은 정권의 생존에 위기를 가져왔으나 정권은 유지되었는데 이는 정치적 그리고 제도적 이유들 때문이었다. 국가는 농산물 할당량을 계속하였다. 산업 개혁은 중앙 통제 하의 중공업을 우선시하였으나 경공업에 집중했다. 중요한 대외무역은 아직도 국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무역의 개방화 역시 제한되었다. 더구나 필수적인 신뢰할 만한 은행과 신용 시스템의 안정적인 성장이 없었다.

카다피의 제한된 개방화 드라이브는 예상했던 경제 부흥으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 국가 보조금의 감소 및 허약해진 통화는 30% 실업율과 50%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으며 리비아의 평균 구매력을 하락시켰다.<sup>82</sup> 국가 통제의 이완은 부패한 고위 공무원들에 의해 종종 중요한 암시장을 출현하게 했다. 반면에, 정권의 긴축 경제 계획은 급료의 감소와 지연을 가져와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두 번째 직업을 가져야 했다.<sup>83</sup>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장기 전망은 국가의 재원 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의 급증(리비아인의 70%가 20대 이하의 나이인 젊은 층이다)과 같은 문제들을 막는 것이다.<sup>84</sup>

리비아의 경제 어려움은 마지막으로 카다피가 로커비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였다. 카다피와 그의 고위 조언자들은 리비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의 발길을 되돌려야 하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제거하는 것임을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로커

---

<sup>82</sup> - *Middle East International*, December 6, 1996, p. 14.

<sup>83</sup> - Francois Burgat, "Qadhafi's Ideological Framework," in Dirk Vandewalle, ed. *Qadhafi's Libya, 1969~1994*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 59.

<sup>84</sup> - Lisa Anderson, "Qadhafi's Legacy: An Evaluation of a Political Experiment," in Dirk Vandewalle, ed. *Qadhafi's Libya, 1969~1994*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 228; Dennis Sammut, "Libya and the Islamic Challenge," *World Today* 50 (October, 1994), p. 200.

비 사건의 해결로 석유와 가스 산업의 보다 발전이 있었지만 리비아의 구조적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리비아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던 1969년의 혁명 이후, 카다피의 정치 및 경제 실험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의 이데올로기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실패와 리비아를 괴롭히는 경기 침체를 종식시키는 데 대한 무능력이 그의 정통성을 침해했다. 정치지도자는 광범위한 지지기반이나 설득력 있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경제적 번영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카다피의 집권은 위태로워 보였다.

카다피는 경제 자유화, 개방화 정책 추진을 지속하였다. 그는 1997년 도 해외투자촉진법의 제정 및 2002년 동법 개정을 통해 지난 30년간 외국인 혐오증에서 벗어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2001년과 2002년에는 IMF 조사단을 받아들여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협의하고 조사단 권고에 따라 2002년 1월 환율의 단일화 조치로 공정 환율을 시장 환율에 접근시켰으며, WTO 가입추진, 공기업 특혜철폐 및 사기업 진작 등 경제자유화 시책을 가속화하고 있어 개방사회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2003년 6월 13일 카다피는 개혁·개방론자인 가넴(Ghanem) 경제무역장관을 총리에 발탁함으로써 경제자유화, 개방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

특히 카다피는 1998년 이후 기존의 사회주의 노선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노선에 따라 과거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기치아래 시행하던 반정부단체 및 테러집단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는 한편, 이슬람국가로서 종교와 인종을 초월하여 아프리카 연합(AU)창설 등 지역협력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아시아 등 각국의 분쟁해결 노력을 지원, 평화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대외관계에도 새로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그러나 카다피는 2003년 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고 개방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지만 내부의 정치개혁 수위를 놓고 리비아 정부는 최근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다피는 30년 전 채택한 자마히리야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TV 연설에서 분명히 밝혔다. 그는 “리비아는 완벽한 자유와 참정권이 보장된 인민 민주주의의 국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우리를 정탐하고 국부를 훔치려는 식민세력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서방에 대한 경계와 내부 결속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치적 개혁 없이는 사회·경제 번영을 이룩할 수 없다.”는 말들이 리비아 경제 지도자들은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 알이슬람 주도로 경제 및 사회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에 기초해서이다.

인구의 절반이 20세 이하 젊은 층인 리비아는 빠른 개혁을 원하고 있다.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정치개혁이 경제개혁과 동반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

리비아 정부 자문 자격으로 포럼에 참여한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는 “2003년 이후 미국 등 서방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석유산업과 금융 산업까지 개방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치 변화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리비아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 3.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선언

리비아는 2003년 12월 성명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를 폐기하기로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이날 관영 JANA 통신에 발표한 성명에서 WMD 개발을 포기하기로 “현명

한 결정과 용기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제 사찰을 받아들일겠다고 선언했다.

카다피는 이번 결정으로 “국제평화와 안보 및 인류의 번영을 지키기 위해 WMD와 모든 종류의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운 지구를 건설하는데” 리비아가 앞장서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구상에서 WMD를 제거하는 것은 “자마히리야”를 촉진하고 “녹색이 지구상을 뒤덮도록 하기 위해 생태학적 도전들에 대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다피의 공식 선언에 앞서 리비아 외무부도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량살상무기를 ‘자유 의지’에 의해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이어 리비아가 이미 미국과 영국 무기 전문가들에게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질과 장비 및 프로그램’을 공개했다면서 여기에는 ‘원심분리기와 화학물질 운반 장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리비아가 오래전부터 중동 및 북아프리카를 WMD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진지한 반응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리비아도 방위능력 증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카다피의 공식 발표에 앞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거의 동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리비아가 WMD 포기를 선언했음을 확인하고 이는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카다피의 선언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핵무기 프로그램이 중국과 파키스탄의 도움으로 개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안보리는 리비아 정부가 로커비 사건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에 합의함에 따라 2003년 9월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으며 미국도



2004년 리비아에 대한 모든 제재조치들을 해제했다.

그동안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단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장비와 자료들은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번 WMD 폐기 선언으로 리비아는 핵 관련 장비들을 국제 감시기구에 넘겼다. 그리고 국제원자력에너지에 의한 규정적용과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등과 같은 다양한 무기관련 조약들에 부합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그렇다면 리비아는 WMD 폐기 선언 이후 얻은 것은 무엇이었나? 리비아는 WMD 선언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WMD를 폐기한다고 선언하였지만 실질제로는 악화되어가는 경제사정과 미국의 지속적인 대리비아 제재를 해제하기 위함이었다. 1999년 유엔은 리비아가 ‘로커비’사건 용의자 두 명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인도한다고 발표한 후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엔의 대리비아 제재해제는 ‘로커비’사건 용의자 중 한 명이 기소된 2003년 9월에야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1999년 7월 영국은 리비아와 외교관계를 복원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2004년 2월에 리비아에 대한 여행금지 해제와 미국 석유기업들의 리비아에서의 활동 재개를 승인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리비아는 WMD 폐기 선언 이후에도 경제제재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가하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제재조치 해제 그리고 리비아와의 정치관계 회복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리비아 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는 리비아의 석유와 가스전 개발을 위해 미국 회사들의 리비아 투자를 가속화 하였고 리비아 경제상황을 개선시켰으며 또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카다피 정권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최근 로열 터치/셀 그룹은 리비아정부가 180개 오일유정을 분양하는 것 중 하나인 1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유정에 계약하였다. 이처럼 리비아는 WMD 선언이후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리비아는 국가존립 뿐만 아니라 카다피 정권의 붕괴를 막는 성과를 거두었다.

#### 4. 체제변화 이후의 현황들

##### 가. 리비아 정치개혁

리비아의 정치개혁은 리비아가 국제경제로의 재편입을 원하기 때문에 카다피 지도자가 일부 정치개혁들에 대한 요구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개혁이 정치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서구의 가정은 의문스럽기도 하다. 리비아정부와 외국인 투자가 모두 리비아에서 개혁의 그릇된 생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며 정치개혁의 어떠한 실질적 논의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 단지 리비아에서 경제개혁의 약속은 기존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경제개혁 정당성의 어떠한 문제도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경제개혁의 정렬을 위한 필요성 혹은 대안적 구조에 대한 어떠한 논의들을 강화하는 것이다.

언론에 대한 자유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의 자유도 리비아에는 없다. 모든 사회와 기구들은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성문화된 헌법이 존재하는지 혹은 인권현장은 지켜지고 있는지도 논쟁거리다. 리비아는 여전히 혁명의 정당성에 의존하고 있다. 정치개혁의 열망에 대해 카다피가 분명한 지지도 없으며 심지어 그는 경제개혁 문제들에 대해서도 주저하고 있다.

리비아의 개혁가들은 슈크리 가넴(Shukri Ghanem) 수상과 카다피

재단을 설립한 카다피의 장남 에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 주위에 포진해 있다.<sup>85</sup> 그러나 에이프 자신은 정치적 입지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개혁운동을 위한 잠재적 고려 점은 논의가 되었으나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정치적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개념은 단지 최근에 논쟁으로서 소개가 될 뿐이다. 시민사회의 개념은 카다피의 ‘그린 북’과 결합된 교리론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반역으로 기소된다는 것도 의미한다.

진정한 개혁을 위한 전망은 아직 무의미해 보이며 개혁에 대한 신호들은 오지 않고 있다. 정치적으로 카다피는 표면적인 변화에 보다 저항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록 개혁에 대한 압박들로 정치개혁들이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절망적이다.

## 나. 교육

리비아 교육부문의 발전은 특히 영국과의 생산적인 양자관계를 긍정적으로 증명하는 분야이다. 현재 약 3,500명의 리비아 학생들이 영국에서 유학 중인데 아랍 학생 공동체에서 가장 큰 구성을 차지하고 있다.<sup>86</sup> 이들 대다수 학생들은 리비아 고등 교육부나 관련 기관들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유학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비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리비아는 영국 교육부문의 중요한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리비아인들에 대한 교육의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 학교에서의

---

<sup>85</sup>- Robert Lowe, “Libya: Fulfilling potential at home and abroad,” Wilton Park Conference WP810, 16~19 February 2006, p. 9.

<sup>86</sup>- Robert Lowe, “Libya: Fulfilling potential at home and abroad,” p. 10.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리비아에서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1986년 외국어 교육이 정부법령에 의해 포기되었고 최근인 2004년에야 이 법령이 무효화되었다. 아랍어는 리비아 학교에서 가르치는 유일한 합법 언어였으나 현재에는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커리큘럼의 한 부분이 되었다.

리비아에는 사설 외국인 학교들이 있는데 이들 학교들은 아랍어를 필수적인 언어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들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외국인학생들이거나 혹은 리비아 학생들이 외국에서 돌아와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의 교육의 질은 좋지 못하다. 이것은 훈련 받지 않은 교사들이 대부분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가르침에 대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 투자가와 외국 기업들의 투자 잠재 영역으로써 사립학교의 인수나 투자를 하는 것은 사업성이 높지 않다. 영국이나 미국 대학들의 리비아로의 ‘자매(sister)’ 캠퍼스의 설립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은 단지 리비아 교육 부문이 개선되고 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영국은 리비아 대학들에 22명의 영국인 언어 전문가를 배치하기 위해 리비아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2006년 9월 영국은 언어 과정의 질을 강력히 요구하는 리비아 측을 만족시키기 위해 트리폴리에 영어 티칭센터를 설립하였다.

교육에 있어 베르베르 공동체의 교육에 대한 권리 이슈들도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언어를 정식으로 교과목에 넣어 줄 것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다. 보건

리비아에서 보건 장비와 기술자는 긴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보

헌법 106은 ‘국가에 의해 모든 보건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리비아의 보건 인프라는 아주 빈약하다.

현재 리비아에는 102개의 병원과 154개의 기본 보건 센터가 있으며 또한 177개의 개인이 운영하는 보건 클리닉과 439개의 약국들이 있다.<sup>87</sup> 민간 보건의 보건의 대안적 원천을 제공하며 약품에 대한 접근을 개선시켜 주고 있다.

리비아 의료진의 60% 이상이 영국에서 교육 받았으며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약 3천명의 의사들이 현재 국가 의료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리비아 정부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두뇌 유출의 문제는 해외의 리비아 의사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강한 리비아의 열망이기도 하다. 보건 시스템의 발전과 의료장비의 개선은 이들 해외에 있는 리비아인 의사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보건 관련 티칭 프로그램은 현재 리비아에서 진척되고 또한 강화되고 있다.

보건 서비스와 연구시설 그리고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는 교육성과의 발전 등을 포함하는 협력 분야들이 제시되었다. 이들 영역에 있는 의료 및 의약품 관련은 병원들에 대한 외국인이나 민간 투자의 잠재성을 보다 많이 갖게 한다.

## 라. EU와의 관계

2004년은 유럽연합과 리비아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전환점이었다. 1992~1993년에 강제된 제재조치들에 대한 폐지가 이루어진 이후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을 지속하였다. 에너지, 테러리즘, 지역안정 그리고 아프리카와 같은 협력 분야들이 기획되기도 하였다.

---

<sup>87</sup>- Robert Lowe, “Libya: Fulfilling potential at home and abroad,” p. 15.

EU는 리비아의 국내 개혁을 지원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금까지의 성과들은 리비아의 HIV/에이즈문제와 이민문제 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EU는 만약 리비아 정부가 승인한다면 리비아에서 시민사회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꺼이 할 준비를 하고 있다.

EU는 리비아의 벤가지 병원을 개선하기 위해 1백만 유로를 제공하였다. EU 위원회는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지원 제공과 불가리아 의사와 팔레스타인 의료진들의 HIV에 감염된 환자들의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 환자와 병원 스태프들에게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리비아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였다. 이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협력은 EU가 리비아 에이즈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sup>88</sup>

EU는 리비아와의 회담에서 이민문제에 있어 협력을 위한 공동 행동 강령 채택을 진행 중이다. 리비아와의 기술적 협력을 위한 예산 역시 논의 중이나 그것이 곧 이루어질지에 대한 확증은 없다. 그러나 EU는 현재 아프리카로부터의 불법 이민에 대해 공동대처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일들에 대한 리비아의 점진적인 연관에 대해 EU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는 리비아의 아프리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중요성의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또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밀접한 파트너십을 기대하고 있다.

EU가 리비아와의 관계에 적극적인 이유는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은 리비아

<sup>88</sup>- Robert Lowe, "Libya: Fulfilling potential at home and abroad," p. 16.

원유의 품질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또한 지리적 근거리와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리비아 원유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EU의 경우 리비아와의 관계 개선에 있어 가장 선결문제는 일관된 에너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양측의 하나의 공동성과로는 EU와 마그레브의 통합에 있어 리비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EU와 리비아 관계의 장래는 양측이 기꺼이 논의된 연관성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버터 나가야 하는 것이다. EU는 리비아와의 관계에 있어 이슬람과 기독교 등 서로 이질적인 문화적 어려움에도 직면해 있다. 양측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 교환을 통해 서로에 이익을 가져다주길 희망하고 있다. 또한 EU와 리비아와의 정치적 불일치에 대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과의 연관은 문제시되지 않고 있다.

#### 마. 미국과의 관계

리비아와 미국은 과거 20여 년간 좋은 외교관계 관계를 이루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 양국은 짧은 시간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미국과 리비아간의 외교적 재정립이 시작되었을 때 공동협조를 위한 자연스런 분야는 과학협력이다. 미국은 리비아가 WMD의 폐기를 결정했을 때 폐기를 위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보내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였다.

현재 리비아 트리폴리에 미국의 연락사무실이 있으며 미국은 완전한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조만간 미국 대사관도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또한 라이스 국무장관이 미 국무장관으로는 54년 만에 곧 리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현재 양측은 기업, 정부 그리고 교육의 상호 교류를 통한 리비아와 미국의 사회단체들 사이의 접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은 인도적 프로젝트, 보건과 질병 예방 프로젝트 그리고 리비아 학생들의 미국에서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증가시켜 주는 등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sup>89</sup>

미국과 리비아간의 완전한 정상적인 외교관계 복원의 걸림돌이었던 국제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리비아를 삭제함으로써 양국간의 관계는 한층 더 밀접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로커비사건’에 대한 보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리비아 주재 미 대사관의 재개관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sup>89</sup>- Robert Lowe, "Libya: Fulfilling potential at home and abroad," p. 17.





## 제3장

# 사례연구(Ⅱ): 쿠바 사회체제의 구조와 변화





# I. 쿠바의 정치체제

## 1. 쿠바 정치체제의 변화과정

### 가. 쿠바사회주의의 형성과정

1959년 카스트로가 이끄는 반 바티스타 운동이 성공하면서, 쿠바 사회주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혁명의 성공이후 1959년 3월 미국계 자산을 국유화했고, 6월에 농업개혁법을 통과시켰다. 1959년 당시의 쿠바 혁명은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59년 헌법에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민주민족혁명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sup>90</sup> 1976년 헌법에 이르러서야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를 천명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쿠바는 소련식 정치경제 모델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게 된다. 1976년 헌법은 1936년 소련의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계획경제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1960년대 중반, 코시긴 개혁과 리베르만 방식의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했으며, 경제지도계획 체계(the System of Direction and Planning of the Economy: SDPE)라고 불리는 소련식 경제개혁 제도를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은 정책결정의 분권화(지배인의 권한 강화), 시장 메카니즘 활용<sup>91</sup>, 기업의 독립채산제와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경제적 인센티브의 확대(임금 차등, 생산보너스, 상금)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Carmelo Mesa-Lago, 1994, 207~8). 계획경제를 유지하면서 인센티브 정책을 개선한 것이다.

쿠바는 이른바 ‘사회주의 종속적 발전 국가<sup>92</sup>의 대표사례다. 구조적

<sup>90</sup>- 카스트로 정권의 초기 성격에 대한 검토는 김달관, “쿠바의 딜레마: 이상과 현실,” 『라틴아메리카 연구』, 17권 3호 (2004) 참조.

<sup>91</sup>- 경영성과의 기준으로 이윤개념이 강조되었으며 자유 농민시장이 허용되었고, 사적 고용도 어느정도 인정되었다.

중속의 근거로는 단일경작, 무역의존, 무역상대국 집중, 단일품목 수출, 자본중속, 외채, 에너지 중속, 기술 중속 등이다. 혁명이전 쿠바는 미국의 휴양지였지만, 혁명(1959년)이후에도 쿠바는 설탕이라는 단일경작 산업구조가 계속되었고, 무역의존도도 매우 높았다.

설탕 및 설탕제품의 수출은 1984~1989년 사이 총 수출의 77%를 차지했으며, 쿠바 무역의 70%는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이었다. 사회주의 혁명이후에도 쿠바는 단일수출품목 의존과 수입자본재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중속적 발전의 길을 걸었다. 수출에서 설탕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평균 81%였다면, 1959년부터 1976년까지 평균 82%였다. 무역상대국 역시 혁명이전(1946~1958년)에 미국이 무역의 69%(수입은 77%, 수출은 63%)를 차지했다면, 혁명이후(1961~1976년) 소련은 48.5%(수입은 52%, 수출은 43%)를 차지했다. 물론 CMEA국가들까지 포함시킨다면 73%에 이른다. 자본, 기술, 에너지 중속도 마찬가지다.<sup>93</sup>

특히 대소 의존도는 매우 높았다. 우호무역으로 소련은 쿠바에 1980년대 연간 10~40억 달러를 지원했다. 1960~1985년 사이 소련은 쿠바에 개발원조로 38억 페소를 지원했으며, 1980년대 중반 소련의 원조로 건설된 기업은 총 공업생산의 15%를 차지했다. 1989년 11월 쿠바의 대소 부채는 145억 9천 루블이며, 이는 소련의 개발도상국 부채의 18.1%를 차지하는 것이었다(Jorge F. Pérez-López: 1992, 120).

<sup>92</sup> - 전통적인 중속이론은 삼자동맹(외국자본, 국내자본, 국가엘리트)을 통한 중심부 자본의 주변부에 대한 착취 메커니즘이 부재하기 때문에, 쿠바와 같은 사회주의에 중속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Robert A. Packenham(1995) 등은 ① 쿠바의 소련에 대한 구조적 경제의존이 정책적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② 쿠바와 소련의 5개년 계획이 연동될 정도로 제도적 연계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③ 쿠바와 소련 지배엘리트의 이해가 공유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중속성은 다른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Robert A. Packenham (1995). pp. 150~155.

<sup>93</sup> - 자세한 내용은 Robert A. Packenham (1995), pp. 143~148 참조.

쿠바의 소련 의존은 비효율적인 산업구조와 높은 유류소비 패턴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수입구조에서 중간재의 대외의존도는 매우 높았다. 자본재 및 중간재는 1958년 수입의 60.9%에서 1984~1989년 89.6%로 증가했다(Manuel Pastor, JR; Andrew Zimbalist: 1995: 706).

1980년대 후반이후 사회주의 국제무역체계 체계의 붕괴는 이른바 ‘사회주의 종속적 발전 국가’인 쿠바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의미했다. 종속적 발전국가인 쿠바 경제는 외부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외부충격은 수출감소, 무역구조 악화, 금융위기로 나타났다.<sup>94</sup> 소련의 대쿠바 경제원조는 1986~1990년 사이 연평균 20억 달러였으며, 차관규모는 연간 23억 달러에 달했다. 쿠바 GDP의 15%에 해당하는 것이었다.<sup>95</sup> 소련의 원조는 1989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고르바초프는 대쿠바 설탕수입 가격과 원유수출 가격에 대해 경화결제를 요구했다. 이후 국제무역체계 붕괴는 독일통일(90. 7)<sup>96</sup>과 코메콘의 해체<sup>97</sup>, 마지막으로 보리스 옐친의 집권으로 종결되었다.

<sup>94</sup>- 쿠바가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일반적 경제위기로부터 비껴갈 수 있었던 것은 대소의존성이 세계적 경제변동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수출시장은 구상무역(쿠바의 대소련 석유가격의 저평가와 쿠바산 설탕제품의 고평가)으로 보장되었고, 소련과의 무역적자는 원조와 차관의 형태로 자동적으로 보완되었다.

<sup>95</sup>- 공식환율로 계산할 때가 그렇다는 것이며, 국제시장환율로 환산하면 소련의 대쿠바 경제원조가 쿠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진다. Ernesto Hernández-Catá(2000), p. 25을 참조.

<sup>96</sup>- 독일통일이 쿠바 경제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동독은 소련에 이어 쿠바의 제2무역국이었던 때문이다. 1989년 11월 기준으로 쿠바의 대동독 외채는 20억 동독 마르크(4억 3천만 루블)였다. 독일통일로 그동안 동독으로부터 수입해온 기계, 컴퓨터, 화학제품등에 대해서는 경화인 도이취 마르크(DM)로 결제를 해야 해야했기 때문에 무역관계는 극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Jorge F.Pérez-López (1992), pp. 120~123.

<sup>97</sup>- CMEA는 1991년 1월 13차 총회(모스크바)를 마지막으로 해체되었고, 동유럽 국가들은 이때부터 쿠바와의 무역을 우호무역에서 상업거래로 전환했다.

## 나. 고르바초프 집권과 쿠바의 위기

1980년대 후반 쿠바는 위기의 초기단계에서 전통적 사회주의의 방식으로 대처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위기의 신호가 왔다. 쿠바는 일단 초기에 분권화보다는 집권화전략을 선택했다. 바로 1986년 2월 쿠바공산당 3차대회에서 선택한 교정정책(Rectification Process)이 그것이다.<sup>98</sup>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운동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규칙위반, 부패, 냉소주의, 낭비 등을 비판하기 위한 캠페인이었다. ‘오류를 교정하고 관행을 부정하는 캠페인(a campaña de rectificación de errores y tendencias negativas)’으로 명명된 이 정책은 중앙집권화의 강화와 동원정치의 확대를 의미했다.

주요 경제정책으로는 ① 경영성과의 주요지표인 이윤부정 ② 농민시장 폐지 ③ 개인상공업, 개인 주택건설 폐지 및 제한 ④ 생산대의 재도입 ⑤ 잉여노동자 축소, 노동기준 강화, 정신적 자극 강조 ⑥ 무역적자 축소와 적자예산 축소 등 거시경제적 안정 시도 ⑦ 경제범죄 및 부패척결 등이었다(Jorge F. Pérez-López, 1992: 115~116).

1986년부터 시작한 교정정책은 이론적으로 게바라-카스트로 모델(1966~1970년)의 이상주의적 실수와 경제지도계획체계(SDPE)의 경제주의적 실수의 중간쯤으로 평가된다. 교정정책은 실패했다. 첫째, 자

---

<sup>98</sup>-Carmelo Mesa-Lago는 ‘교정과정(Rectification Process)’을 비상조치로 보고 있으며, 그 성격을 1960년대 이상주의적 오류와 ‘경제 지도계획 체계(the System of Direction and Planning of the Economy: SDPE, 1976~1985년)’의 경제주의적 오류의 중간쯤으로 평가하고 있다. 참고로 그는 혁명 이후 1992년까지의 쿠바 경제를 다음과 같은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① 1959~1960: 자본주의와 시장의 금지 ② 1961~1965: 정통 중앙계획경제 모델의 도입실패 ③ 1964~1966: 대안적 사회주의 모델의 논쟁(게바라적 접근과 리베르만 개혁) ④ 1966~1970: 카스트로에 의한 게바라적 방식의 도입과 급진화 ⑤ 1971~1985: 온건경제개혁 모델 ⑥ 1986~1992: 외국인 투자 개방과 교정과정(시장금지) 등이다. Carmelo Mesa-Lago (1994), p. 207.

유시장을 폐지하고, 소규모 사적 농장을 통합시킨 이 제도는 국영기업과 국영농장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었다. 수매제도 또한 시장반응을 반영하지 못했다. 둘째, 국가유통망과 사적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시장 체계가 사라지면서, 배급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되었지만, 국가의 공급 능력은 한계가 있었다. 셋째, 소규모 사적 수공업을 금지하고, 대중 동원적인 건설대가 등장했지만, 생산 효율성을 올리지는 못했다.

쿠바는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처럼) 이 시기 새로운 충격에 낡은 방법으로 대처한 것이다. 국제무역 체계의 붕괴는 더욱 가시화되었고, 쿠바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악화되었다.

## 2. 정치체제의 특징과 후계체제

### 가. 권력구조의 특징

쿠바의 엘리트 구조는 중앙집권적 정책결정구조와 중층적 겸직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카스트로는 쿠바 공산당 총비서이면서, 국가평의회 의장 겸 각료회의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엘리트 구조 역시 겸직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국과 각료회의, 그리고 국가평의회를 겸직하고 있는 7명이 핵심엘리트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평의회 의장은 국가수반으로 부를 수 있으며, 각료회의 의장은 정부 수반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고지도자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을 경우, 엘리트들의 경쟁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설득 경쟁(lobbying a single decision maker)으로 이루어진다. 피델 카스트로의 후계자는 그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다. 그와 함께 지도자 그룹으로 거론될 수 있는 인물들로는 1993년 국가평의회 부의장을 지낸 개혁파의 상징인 Carlos Lage Dávila, 기간산업 장관을 지냈으며 라울



의 조카사위인 Marcos Portal Leon, 내무장관이면서 라울이후 국방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Abelardo Colomé 장군 등을 들 수 있다 (Ericson, 2005).

쿠바는 다른 권위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권력엘리트층 내부에 개혁 주체가 허약하고,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반정부 단체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 우선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쿠바는 지속적으로 개혁파를 숙청해 왔다. 1980년대 중반이후 세 번의 대규모 숙청이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1989년 중반의 Ochoa 사건이 있다. 당시 고르파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래스노스트에 동조하는 쿠바 내 고르바췌프주의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다. 4명의 군 고위장성이 처형되었고, 20여명의 고위관료들이 감옥에 갔다. 1985~1986년과 1993년~1995년의 권력 엘리트 교체는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대 중반 2년 동안 내각 각료 중 16명이 교체되었으며, 이는 연간 23.5%의 각료가 교체되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중반 3년 동안에도 20여명이 교체되었으며, 이는 연평균 20%의 교체율을 보여주고 있다(Corrales, 2004: 40~42). 물론 세 번의 숙청 모두 개혁파의 숙청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규모 내각교체는 개혁 지향적 분파의 형성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나. 카스트로 이후 후계체제 전망

카스트로가 사망한다면, 그의 동생인 라울이 공식 후계자로 그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울체제는 현재의 카스트로 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울은 세계최장기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1931년생인 그는 대학생 시절 쿠바 내의 청년당원들을 이끌었으며, 1953년 몬카다 전투에 참가하다 투옥된 경험이 있다.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 라울은 멕시코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체 게바라를 알게 되었고, 피델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쿠바혁명이후에는 주로 군부에서 경력을 쌓아 왔다. 그의 성향을 실용주의로 분류하는 이유는 1986년 군이 통제하고 있었던 몇몇 기업들에서 그의 주도로 경제개혁을 시도한 사실 때문이다. 그는 이들 기업에서 해고를 허용했으며, 기업의 처분권을 허용하는 등 자유화조치를 취했다. 1991년 4차 당대회에서는 경제개혁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Ericson, 2005: 94~5).

대체로 라울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군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리더십 스타일도 피델에 비해 대중성이나 카리스마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라울역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라울 체제 역시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울이 후계자가 되었을 때, 쿠바의 정치체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울은 피델과 함께 쿠바혁명의 역사적 현장을 경험했지만, 피델이 누려왔던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리더십이나 정책 결정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라울은 권력을 장악하겠지만, 권력의 행사는 협의와 분권의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김영남에게 맡기고, 정부수반의 자격으로 정상급 외교업무를 수행하듯이, 라울 역시 각료회의 의장을 테크노크라트에게 넘기는 역할분담 체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당내 권력형태도 집단지도체제에 버금가는 분권적 형태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경제개혁을 보다 확대하면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조심스럽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새로운 쿠바의 지도자와 새로운 미국-쿠바 관계의 재형성은 미국의 대쿠바 정책의 방향에 달려 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라울체제의 임시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카스트로 이후의 쿠바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공산당 후계 정권이다.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의 우위를 지속하고, 경제적으로는 현재의 제한적인 경제개혁체제를 유지하는 형태이다. 현재 쿠바 공산당 내의 권력관계를 분석해 보면, 강경파, 중도파, 개혁파로 분류할 수 있다. 강경파는 혁명 1세대와 보수적 신진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정치·경제적 변화에 반대하는 세력이다. 중도파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혁에 찬성하지만, 전면적인 서구식 자본주의 도입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성향역시 공산당 우위에 도전하지 않고, 정치개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라울과 개방경제를 추진해 온 군부는 중도파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공산당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적극적 시장경제와 정치적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혁파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적극적 개혁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권력내부에서 축출되어 왔다는 점에서 구심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외부적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라울과 라울 이후의 체제는 공산당 후계정권이 지속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다. 다만 당내 새로운 지도부의 이념 성향과 정책성향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중국 후진타오 체제를 공산당 후계정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당의 영도라는 레토릭을 넘어서면 엘리트 층원제도나 시장경제의 수준으로 보아, 공산당 정권이라고 부르기에는 과거와의 단절적 측면이 훨씬 크다.

둘째는 군부정권의 가능성이다. 공산당 후계 정권이 불안정해지거나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때, 전·현직 군부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권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라울체제에서는 군부가 핵심세력이지만 동시에 당과 정부의 검직구조를 고려할 때, 군사정권의 형태보다는 전통적인 공산당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라울체제에서 국내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거나, 라울 사후 새로운 권력투쟁에서 군부가 전면에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제3세계형 군사정권의 가능성은 현실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쿠바의 정치체제가 이미 어느 정도의 위기관리형 ‘선군 정치’의 모습을 띠어 왔고, 경제개혁 과정에서 가장 큰 기득권 집단으로 부상한 것이 군부이기 때문에,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굳이 정체를 변형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민주정부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외부적 이식의 가능성과 내부적 형성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지만, 마이애미 정치의 국내적 정당성기반이 협소하기 때문에, 무력을 통한 개입이 아니라면, 외부 이식의 가능성은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 내부적인 민주화 형성의 경로 역시 현재 쿠바 내부의 역량과 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가능성 보다는 장기적인 과정의 문제로 볼 수 있다.

### 3. 반체제와 인권문제

쿠바에서 1990년대 이후 인권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대중적 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1990년대 초 당의 이념 담당인 카를로스 알다나(Carlos Aldana)는 공개적으로 당시 약 50개의 반정부 단체가 있고, 구성원은 약 1,000여 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96년에는 인권, 민주주의, 가족결합 등을 요구하는 140여개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쿠바 위원회(Concilio Cubano)를 구성하기도 했다.

인권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인권과 민족화합을 위한 쿠바위

원회(CCDHRN)’와 인권을 위한 쿠바 위원회(CCPDH)을 들 수 있다. CCDHRN은 1987년에 결성되었으며, 철학교수출신으로 가장 저명한 시민운동가인 산체스(Elizardo Sánchez)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의 강령을 살펴보면, 인권침해 중단,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미국-쿠바 관계 정상화, 사회민주주의 원칙 고수 등이다(Otero, 2002: 37~39).

물론 마이애미를 근거지로 한 쿠바의 망명 단체들은 대부분 선거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민주주의 제도와 전면적인 시장경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쿠바 사회 내에서의 시민단체들은 쿠바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쿠바 정책의 전환도 주장하고 있다.

쿠바에서의 이른바 시민영역(Civil sphere)은 시민사회와 시장경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Otero, 2002)으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증대된 사회적 불만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합의 기반을 높이기 위한 정권의 유연성, 혹은 영리한 권력운용의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쿠바의 시민단체 역시 ‘체제 내 반대파’의 형태로 존재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대안권력’의 지지기반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는 미국의 대쿠바 강경정책의 유산, 즉 민족주의와 대중적 반미주의의 기반이 작용이 작용하고 있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의 탈출은 국가 붕괴로 이어졌다. 북한에 대한 인권 운동을 하는 미국 내 강경파들도 이른바 ‘탈북자’문제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망명 쿠바인들을 비롯한 미국 내 대쿠바 강경론자들 역시, 적극적인 난민수용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량 난민의 발생이 결국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카스트로 정부는 난민 정책을 위로부터 체제안정의 도구로 활용해 왔다. 허쉬만(Hirshman)이 1970년대 소비자나 조직구

성원들의 행태를 분석하면서 개념화한 탈출(Exit)과 저항(Voice)의 관계, 즉 ‘탈출이 쉬울수록 저항이 적다’는 사례<sup>99</sup>를 쿠바처럼 적절히 활용한 사례도 없다. 쿠바의 사례는 동독의 붕괴와 명백히 차이가 난다.

카스트로 정부는 경제위기로 사회적 불만이 높았던 1994년 8월, 공개적으로 해안국경을 개방하여 떠날 사람은 누구든지 가도 좋다고 선언했다. 일주일 후 3만 명이 떠났다. 카스트로 정부의 선택은 국내적으로 불만세력을 외부로 이전시키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대쿠바 강경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다. 쿠바의 입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다수의 쿠바난민을 미국이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미국의 쿠바 난민 수용은 한계가 있었다. 미국은 결국 쿠바의 의도적인 방출정책을 협상을 통해 중단시킬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외부압력을 통한 쿠바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자유를 향한 탈출’을 선전했지만, 막상 대규모 난민이 미국 망명을 신청하자,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3만 명의 쿠바인들의 공개적인 탈출직후 쿠바와 이민협정을 맺어, 통제되지 않은 난민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카스트로 정부는 연간 미국으로의 공식적인 이민자수를 규정한 미국과의 이민 협정이후 국경을 닫고, 내부적으로 개혁조치를 단행하여 사회적 불만을 약화시켰다.

<sup>99</sup>-탈출(Exit)과 저항(Voice)은 소비자 혹은 조직구성원들의 상반되는 반응을 개념화한 것이다. ‘탈출이 쉬울 수록 저항이 적다’는 것은 예를 들어 손님이 어떤 가게에서 물건이 마음에 안들 때, 다른 가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언제나 항의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탈출은 다른 사람의 협력 없이 혼자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허쉬만(Hirshman)은 탈출과 저항의 관계와 관계변화의 조건 등을 개념화해서 많은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유럽과 달리 산업화 초기에 강력한 노동운동이 부재했던 것은 바로 서부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탈출과 저항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설명과 이것을 동독의 붕괴에 적용한 논문은 Hirshman(1993) 참조.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개혁이후 급속하게 확산된 달러경제와 부의 불평등 현상, 체제 이데올로기의 침식으로 카스트로 사후 쿠바의 장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나아가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 들은 카스트로 사후의 혼란 상황이 조성되면 쿠바체제의 근본적 변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지원 활동도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부의 압력은 내부적으로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강화시켜왔으며,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카스트로 사후 확대될 '외압'은 외부세력의 기대처럼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 II. 쿠바의 외교정책: 대미정책을 중심으로

### 1. 미-쿠바 관계와 경제제재

미국이 쿠바에 대해 적대정책을 시작한 것은 1959년 혁명직후이다. 이후 쿠바는 미소냉전의 최전선이였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쿠바를 둘러싼 냉전의 균형은 깨졌고, 미국에 의한 적대정책이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미국의 쿠바경제제재는 더욱 강화되었다. 대표적으로 1992년 의회는 쿠바민주화법(Cuba Democracy Act)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쿠바와 거래하는 미국 회사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단, 쿠바와 거래하는 기업과 관련된 미국 입항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항은 1996년 Libertad 법(일명 Helms-Burton 법)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1996년 2월 쿠바가 미국의 민간비행기 두 대를 격추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으로 미국 시민이 3명 사망하였다. 리버타드 법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3월 12일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의 3조에는 쿠바에 5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억류당한 미국인이나 기업들이 쿠바에 투자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허용하였고, 4조에서는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기업의 경영진이나, 주주, 가족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sup>100</sup>

그렇지만 리버타드 법안은 국제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EU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본적으로 EU는 쿠바와의 투자와 교역을 증대하면서 점차적으로 인권 개선 압력을 높여간다는 접근법을 채택해 왔다. EU는 리버타드 법안을 WTO에 제소하였다. 개별국가의 국내법이 국제통상 질서의 포괄법안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1996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EU간의 갈등은 1997년에 들어 타협점을 찾았다. EU가 대쿠바 투자를 자제하는 대신, 미국은 이 법의 3조와 4조의 적용을 유예하였다. EU는 이러한 타협조치를 통해 WTO제소를 취하였다.<sup>101</sup>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온건한 압력’은 부시행정부 들어와, 보다 분명하게 구체화했다. 부시행정부는 도덕외교와 망명쿠바인들의 정치적 압력 등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체제이행 전략을 분명히 했다.

## 2. 미국의 쿠바 정권교체 시도와 대응

물론 2002년 카터 전 대통령의 쿠바 방문(2002.5.12~17)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쿠바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카터는 1977년 대통령 재임 시 처음으로 대쿠바 관계 개선을 시도(대표부 설치와 쿠바계 난민의 고향 방문)한 바 있으며, 2002년 방문에서 이른바 바렐라 프로젝트(Varela Project)<sup>102</sup>에 의해, 쿠바 의회에 언론과 결사의

<sup>100</sup> -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연철(2002) 참조.

<sup>101</sup> - 헬름스 버튼 법안을 둘러싼 미국과 EU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Roy(2000)을 참조.

<sup>102</sup> - 이 프로젝트는 북아일랜드 민족주의자 게리 애담스(Garry Adams)가 2001년 12월



자유, 개인의 소유와 기업운영권리, 정치범들의 자유,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의 실시에 관한 국민투표 요구를 전달했다.

쿠바의 민주화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에 관한 포괄적 협상(package deal)을 제시한 것이다. 나아가 식량수출의 필요성 때문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쿠바를 방문하고 제재 해제를 건의하기도 했으며,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대쿠바 강경정책을 국내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쿠바가 ‘자유선거’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제재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강경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안보패러다임의 유지와 ‘적국’의 필요, 그리고 망명쿠바인들의 미국내 정치압력을 상징하는 마이애미 정치(miami politics)의 구조적 배경<sup>103</sup> 때문이다.

2005년 7월 라이스 국무장관은 국무부에 쿠바 이행담당관(Cuba-Transition Coordinator)을 신설하고, 맥커리(Caleb McCarry)를 임명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2004년 5월 자유쿠바 지원 위원회(Commission for Assistance to a Free Cuba: CAFC)가 부시 대통령에게 제시한 권고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CAFC는 현재 라이스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재무, 상무,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국가안보보좌관과 미국대외원조처(USAID)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임시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미국의 주요 부서의 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설적인 협의체라고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Pickel, 2006). 목표는 쿠바가 미국의 관할권에 편입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통치 체제를 비롯한 모든 쿠바의 공적기구의 형성과 조직을 준비하고

---

에 쿠바를 방문하면서,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 해제와 쿠바의 민주화이행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sup>103</sup> 미국의 대쿠바 정책은 마이애미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쿠바 망명자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대쿠바 정책은 ‘마이애미 정치’가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대선에서 마이애미는 부시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있다.<sup>104</sup>

그러나 미국의 쿠바이행전략과 마이애미 정치가 쿠바 국내에서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카스트로 정부는 국내적 위기와 정당성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체제안정을 유지해 왔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의 대쿠바 정책 때문이다. 미국의 대쿠바 강경정책이 오히려 카스트로 정부의 국내외적 정당성의 근거로 작용해 왔다.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는 미국과의 대결 국면 속에서 형성된 ‘유사 전시체제’에서 유보되었고, 시민들의 경제적 수준의 약화는 카스트로 정부의 정책실패 보다는 미국의 경제제재 탓으로 돌려질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외부의 ‘공격적인 민주주의 수출’정책이 해당국가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로 쿠바를 들 수 있을 것이다(Hoffmann, 2001).

### III. 쿠바의 경제 개혁

쿠바에서는 1993년 후반부터 이른바 구조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제개혁이 시작되었다. 달러사용이 합법화되었으며, 미국거주 쿠바인의 고국방문 조건을 완화하는 등 외환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달러의 합법화 조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재미친척들의 송금 등으로 개인들이 축장하고 있는 달러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국내 경제정책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농업과 금융 및 재정정책, 그리고 자영업 활성화 조치<sup>105</sup>이다.

<sup>104</sup> - CAFC의 활동과 목표에 대해서는 국무부 해당 사이트를 참조. <<http://www.state.gov/p/wha/rt/cuba>>.

<sup>105</sup> - 자영업 허용은 1993년에 허용되었다. 허용 배경은 국영기업을 구조조정하면서 실업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 1. 쿠바 경제개혁과 국가의 성격

1993년부터 추진된 쿠바 경제개혁의 특징은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농민시장의 자유화, 미국 달러화의 합법화, 자영업 허용, 재정적자 축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3-1> 쿠바의 주요 경제지표(1990~2000년)

|                   |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 1인당 GDP(1989=100) |     | 96.0 | 86.1  | 77.1  | 66.1  | 66.4 | 67.9 | 72.8 | 74.3 | 75.0 | 79.3 | 83.3 |
| 1인당 GDP 성장률(%)    |     | -4.0 | -10.3 | -10.5 | -14.2 | 0.4  | 2.2  | 7.3  | 2.1  | 0.9  | 5.8  | 5.1  |
| 실업률(%)            |     | 7.3  | 7.7   | 6.1   | 6.2   | 6.7  | 7.9  | 7.6  | 7.0  | 6.6  | 6.0  | 5.8  |
| 총외채 (10억 US \$)   |     | 7.0  | 8.0   | 10.0  | 8.8   | 9.1  | 10.5 | 10.5 | 10.1 | 11.2 | 11.1 | 11.0 |
| 환율 (Peso/\$)      | 공식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준공식 | 7.0  | 20.0  | 35.0  | 78.0  | 95.0 | 32.1 | 19.2 | 23.0 | 21.0 | 20.0 | 21.0 |

자료: Ritter(2004) p. 11에서 재인용

쿠바의 경제는 개혁정책이 추진된 이후인 1994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쿠바의 재정적자도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1993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33.5%에서 2003년에는 3.2%로 줄어들었다. 그것은 조세정책의 개혁 때문이다(Mesa-Lago, 2005).

그러나 쿠바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대쿠바 경제 제재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과 관광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 산업구조의 특성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의 재형성'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쿠바

경제개혁의 특징인 ‘분절적 시장화’의 부정적 유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쿠바의 경제개혁은 가다서다 현상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쿠바의 국제정치적 구조와 개혁에 대한 지도부의 전략이 작용하고 있다. 제한적인 개혁의 과정 속에서 중앙계획과 시장의 긴장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 개혁이 가져오는 분권화와 동원적 권위주의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시장의 요구’와 ‘동원적 정치’ 사이의 긴장관계가 경제개혁의 가다 서다 현상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Marifeli Pérez-Stable, 1999).

쿠바의 경제개혁은 현재까지 국가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제개혁이 정치개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일반적 가정과 달리, 쿠바에서 경제개혁의 과정은 국가의 통제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불균등한 경제개혁에는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권 엘리트’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개혁과 개방의 과정은 수익성이 높은 영역을 만들어 냈는데, 국가가 이러한 부분을 분권화하기 보다는 독점화해서 이익을 얻고, 수익분야의 접근권을 통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지기 국가(the gatekeeper state)’로 재형성되었다(Corrales, 2004). 독점과 접근권의 통제는 정치 사회적 충성 층에게 보상을 베푸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국가-사회관계에서 개혁과정은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약화하기 보다는 강화시키고 있다. 코랄레스(Corrales)는 이러한 쿠바 사례를 통해, 권위주의정부는 민주주의정부보다 국내외적인 경제충격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의 통제가 강화된 분야는 주로 대외개방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우선 달러거래의 독점을 들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분야에서 임금은

달러로 지급되지만, 정부는 그것을 공식환율로 계산하여 폐소화의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 임금의 직접지불을 하지 않음으로서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차액을 국가가 갖는다. 또한 1993년 정부는 달러소유를 합법화 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화를 거둬 들이기 위해 275개의 외화상점을 열고, 대부분의 거래상품에 140%정도의 판매세를 부과하였으며, 환전소도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 허용조치도 마찬가지다. 개인 레스토랑(Paladares)은 모든 식자재를 국영상점에서 20~40%정도 비싸게 구입해야 했다. 또한 많은 수공업업을 비롯한 소기업들은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만, 승인비용은 높지 않았다. 2001년 아바나시에서는 97,687개의 소기업들이 승인 허가를 신청했지만, 단지 23.9%만이 허가를 받았다(Ritter, 2006: 9). 2001년에는 모든 컴퓨터의 판매 금지를 법으로 규정했고, 인터넷은 제한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를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국가가 결정하는 방식은 결국 경제개혁의 과정이 분권화보다는 기득권을 가진 기존 권력 엘리트의 권력 강화를 가져왔다. 즉 시장경제가 확산된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적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쿠바사례는 보여주고 있다(Corrales, 2004: 35~43).

## 2. 금융정책과 환율정책

쿠바의 경제개혁에서 국가의 통제적 역할이 강화된 분야는 외환관리 분야이다. 쿠바는 이중환율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환율은 US \$ 1.00에 쿠바 Peso 1.00인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쿠바 내국인들이 외화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준공식 환율은 1\$에 20~22페소에 달한다. 암시장에서의 교환비율은 더욱 격차가 벌어진다.

1994년 암시장에서 1달러는 150 페소에 거래되기도 했다(Ritter & Rowe, 2002: 102).

쿠바의 외화소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친척송금이 다. 주로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망명 쿠바인들이 쿠바에 살고 있는 친척들에게 송금하는 규모는 1991년 1,800만 달러에서 2000년에는 7억 2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표 3-2> 쿠바의 국제수지 현황(1991~2001년)

(단위: 100만 US Dollars)

|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수출       | 총계        | 3,563 | 2,522 | 1,968 | 2,542 | 2,926 | 3,707 | 3,873 | 4,085 | 4,085 | 4,807 | 4,893 |
|          | 상품        | 2,980 | 1,779 | 1,137 | 1,381 | 1,507 | 1,866 | 1,819 | 1,512 | 1,512 | 1,692 |       |
|          | 서비스       | 584   | 742   | 832   | 1,160 | 1,419 | 1,841 | 2,054 | 2,572 | 2,572 | 3,115 |       |
| 수입       | 총계        | 4,702 | 2,737 | 2,339 | 2,849 | 3,565 | 4,125 | 4,619 | 4,841 | 5,003 | 5,587 | 5,651 |
|          | 상품        | 4,234 | 2,315 | 1,984 | 2,353 | 2,883 | 3,569 | 3,987 | 4,181 | 4,323 | 4,816 |       |
|          | 서비스       | 468   | 422   | 355   | 497   | 683   | 556   | 632   | 660   | 680   | 771   |       |
| 현금<br>이전 | 총계        | 18    | 43    | 263   | 470   | 646   | 744   | 792   | 813   | 828   | 850   | 750   |
|          | 송금        |       |       |       |       | 537   | 630   | 670   | 690   | 700   | 720   |       |
| 자본<br>계정 | 총계        | 1,421 | 419   | 356   | 262   | 596   | 174   | 457   | 409   | 486   | 640   | 770   |
|          | 외국인<br>투자 |       |       | 54    | 563   | 5     | 82    | 442   | 207   | 205   |       |       |

자료: Ritter(2004) p. 8에서 재인용

외화의 주요 순환경로는 마이애미 가족→쿠바의 친척→외화상점→조세당국(ONAT, the Oficina Nacional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과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쿠바 경제에서 달러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이른바 ‘달러화 경향’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미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페소경제권의 침체와 달러경제권의 급팽창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사회주의 경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달 평균 223 페소를 벌었다. 2000년의 경우 평균 연금수령자는 매달 104 페소, 의사, 교사, 기술자, 교수 등은 200에서 450 페소 정도가 평균 소득이었다. 환율을 달러당 20 페소로 했을 때, 일반 쿠바 시민들의 월 평균 소득은 10~22.50 \$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친척으로부터의 송금을 받는 사람들이나 관광 분야 종사자 등은 몇 배 많은 소득을 올렸다. 이러한 환율차이로 인한 소득격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소경제권에서 이탈하여, 달러경제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욕구의 배경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외국 관광객에게 수공예품 판매자로 나섰고, 교수는 호텔 종업원이 되고자 했으며 기술자들은 택시운전사로 전업하고자 했다. 결국 폐소경제권의 침체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심각한 퇴조를 가져왔다. 쿠바의 총 교육 예산은 1990년 16억 2,000만 페소에서 1999년 15억 8,500만 페소로 오히려 줄었다. 교사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교사들에 대한 봉급 지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Ritter & Rowe, 2002: 109~110).

물론 폐소경제권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에 식량과 생활필수품에 배한 배급제 때문이다. 모든 성인은 매달 2.7kg의 쌀과 570g의 콩을 낮은 국정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설탕가격을 예로 들어보면, 배급표에서는 1 파운드에 0.15 페소에 불과하나, 달러 상점에서는 1.50 태환 페소였다.<sup>106</sup> 그러나 배급 품목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1998년의 경우 노동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16 페소였다. 그러나 FAO가 권장한 최소 칼로리 섭취를 위해서는 평균 156 페소가 필요했다, 결국 정상적인 소비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

---

<sup>106</sup> - 환율 1 태환페소는 26 페소를 적용할 때, 39 페소이며, 이것은 배급가격과 달러상점에서의 가격이 260배 정도가 차이난다고 볼 수 있다(Ritter, 2006).

통신, 공공요금, 침구및 가구 구입 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위해서는 폐소경제권이 아닌 달러경제권에서의 추가소득이 필요한 것이다.

2005년 4월 카스트로는 임금과 연금 인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은 100페소에서 225페소로 인상되었고, 최소연금은 55페소에서 150페소로 인상되었다(Ritter, 2006: 9). 그렇지만 이중환율의 격차를 고려할 때, 폐소화의 소득증가가 그동안의 확산된 달러경제권으로의 유입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 3. 농업개혁

쿠바의 산업구성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직업별 노동력 구성에서 농업은 24%(공업이 25%, 서비스업이 51%, 199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6%(2000년 기준)이다. 국토에서 경작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이다.<sup>107</sup> 농업정책에서 쿠바사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집권적 농업체제의 개혁모델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하나는 유기농법이다. 집권적 농업체제는 쿠바의 주요 작물(사탕수수 등)의 특성과 이에 따른 대규모 기계화 영농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에 비해 유기농은 1980년대 후반이후 소련으로부터의 원유공급 중단, 농기계 가동율 하락, 비료와 농약의 수입감소 상황에서 선택된 새로운 농업발전 모델이다. 특히 유기농업은 쿠바가 1980년대 후반까지 대규모 기계화 영농에 의존하였고, 평균기온(25.5도)이 높고 강수량(연평균 1,375mm)이 많은 유기농에 불리한 기후 조건을 감안하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쿠바의 경작지는 사

<sup>107</sup>- 참고로 쿠바의 2002년 기준 인구는 1,122만명이다. 쿠바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geos/cu.html>> 2002년 12월 21일 검색 참조.



탕수수와 방목지를 제하면 약 190만 헥타인데, 그중 80%가 유기농업이 나 농약 및 화학비료를 줄인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경작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이후 농업위기 상황을 유기농업으로의 전환기회로 살린 것이다. 현재 쿠바는 전세계 유기농업학자들의 경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108</sup>

### 가. 쿠바 농업의 특징

쿠바 농업의 전개과정은 크게 세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1959년 5월 혁명 직후 실시한 농업개혁법이다. 주요 조항으로는 ① 라티폰디아(405 헥타 이상 농장)의 국가몰수 ② 토지분배 ③ 협동화<sup>109</sup>이다. 두 번째 단계는 1963년 10월에 실시한 농업개혁법이다. 주요 내용은 67헥타 이상의 농장은 국유로 하고, 그 이하의 개인농장은 경작권은 인정되지만, 정부의 수매기관(acopia)에 국가고시 가격으로 정해진 생산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이후 개인농민들은 신용·서비스 협동조합으로 조직되었다.<sup>110</sup> 세 번째 단계는 바로 1993년 10월에 실시한 농업개혁조치이다.

쿠바 농업의 특징은 사탕수수에 의존하는 단일 경작형태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사탕수수 농업은 작물의 성격상 국가주도의 외연적 성장방식으로 육성되었다. 구체적인 특징은 농지 확대, 높은 자본투자, 생산 투입물의 과다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사탕수수 경작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80년대 초까지 사탕수수 생산지역은 총경작지 440만 헥타중

<sup>108</sup> 일본의 유기농 연구자인 요시다 타로(吉田太朗)는 쿠바의 유기농을 ‘인류사상 최대의 실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쿠바의 유기농업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는 요시다 타로, “유기농업으로 나라가 변한다” 『녹색평론』 (2002, 11~12월호)에 실린 스티븐 쥬니스, “쿠바는 녹색국가가 되는가”도 참조.

<sup>109</sup> 대부분의 농장은 1962년에 협동농장으로 개편하였다.

<sup>110</sup> Nancy Forster, “Cuba’s Agrarian Productivity,” Irving Louis Horowitz, *Cuban Communism 1959~1995: Eighth Edition* (New Brunswick, London: Transaction Pub, 1995), p. 228.

160만 헥타, 1990년대초에는 190만 헥타까지 증가했다. 또한 농업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도 특징적이다. 1981~1990년 총 투자에서 농업은 평균 20.3%를 차지했다. 그렇지만 높은 자본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 효율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11</sup>

대규모 자본집약적 농업의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노동력 투입이다. 경제적 인센티브정책의 한계로 국영농장은 개인영농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sup>112</sup> 둘째는 자본집약 농업의 핵심관건인 수리, 기계화, 기술수준 등의 유지다.

쿠바 농업의 특징은 기계화에 의한 대규모 농장시스템의 발달을 들 수 있다. 혁명 이후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하고, 사탕수수 농사의 성격 때문에 초기부터 대규모 기계화를 통한 영농방식이 발달된 것이다.<sup>113</sup> GDP의 15%를 점하는 농업과 축산업이 이른바 ‘평화시의 비상국면’에서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유류 및 비료소비가 높은 기계화 영농방식은 소련으로부터의 석유수입 축소와 동유럽으로부터의 농자재 수입 감소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고질적인 노동의욕 감퇴 등이 겹치면서 농업 위기가 가시화되었다.

쿠바 정부는 90년 12월 의회에서 식량증산 결정을 내렸다.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식량위기의 원인으로는 중앙계획경제

<sup>111</sup>-Lázaro Peña Castellanos and Jose Alvarez, “The Transformation of the State Extensive Growth Model in Cuba’s Sugarcane Agricultur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Cuban Economy(ASCE)*, 1995, pp. 348~351.

<sup>112</sup>- 물론 쿠바에서 작물의 성격에 따라 국영과 개인농장의 작물은 다르다. 국영농장의 80%는 주로 사탕수수와 축산, 쌀 등이며, 개인농장의 작물은 주로, 열대성 뿌리식물인 카사바(Cassava)와 말랑가(Malanga), 토마토, 마른콩 등이다.

<sup>113</sup>- 사탕수수와 담배 농사의 공통점은 ① 수출 작물 ② 정부의 높은 관심도 ③ 중간재로 유통과정에서의 유희가 상대적으로 최소화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의 비효율성, 코메콘의 붕괴, 미국의 경제제재 등을 들 수 있다. 주요정책으로는 쌀 면적 확대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가축생산 증가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sup>114</sup> 그러나 식량자급을 목표로 한 이 정책은 제도적 변화없이 정책의 우선 순위 변경에 초점을 뒀으므로 성공할 수 없었다. 이 정책은 1993년 농업개혁정책의 선택으로 중단되었다.

<표 3-3> 쿠바의 식량수입 현황(1989~1996년)

(단위: 1,000 peso)

| 구분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
| 식량수입            | 908,762   | 827,341   | 825,377   | 498,569   | 474,146   | 467,331   | 610,883   | 689,108   |
| 총수입             | 8,124,224 | 7,416,525 | 4,233,752 | 2,314,916 | 2,008,215 | 2,016,821 | 2,882,530 | 3,480,608 |
| 총수입에서<br>식량수입비중 | 11.2      | 11.2      | 19.5      | 21.5      | 23.6      | 23.2      | 21.2      | 19.8      |

자료: William A. Messina, Jr, 1999. p. 441.

## 나. 농업개혁의 특징과 전개

쿠바의 농업개혁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1993년 9월 국영농장의 개편조치와 1994년 농민시장(Mercados Agropecuarios: MA)을 허용한 것이다. 쿠바는 1993년 9월 국영농장 개편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농업개혁안을 발표했다. 노동의욕과 개인 및 집단의 책임감 향상을 목표로 농업 노동자의 수입을 생산의 결과와 결부하는 것이었다.

쿠바의 농장경영 방식은 국영 농장, 협동농장, 개인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동농장은 형태에 따라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① 농업생산 협동

<sup>114</sup>- 1990년 2월에 결정된 식량증산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노동자의 숙사 확대, 배수·관개공사, 쌀재배 면적 확대(16만 헥타), 양돈장, 양어장, 양계장건설 확대 등이다.

조합(Cooperativas de Proucción Agropecuario: CPA), ② 협동조합 생산기초조직(las unidades básicas de producción cooperativas: UBPC)<sup>115</sup>, ③ 신용 및 서비스 협동조합(Cooperativas de Crédito y Servicios: CCS) 등이다.

국영농장 개편의 가장 주목할만한 특징은 바로 협동조합 생산기초조직(이하 UBPC)의 태동이다. UBPC 구상은 1993년 9월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국가 위원회 142호 법령으로 법제화되었다. 협동조합 생산기초조직과 생산협동조합의 형태는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토지 소유의 법적 차이이다. CPA조합원은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UBPC는 계약기간 동안 국가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한다. 즉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갖는 것이다. 둘째는 대중조직 참여 형태의 차이이다. CPA조합원은 전국소농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mall Famers)에 소속되지만, UBPC 농장원은 각각 농업, 축산, 임업 노동조합에 등록된다. CPA가 UBPC보다는 자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UBPC의 설립원칙(1조)을 살펴보면 ① 토지와 노동력의 연계 ② 농업 노동자의 성과를 생산성과 연계 ③ 관리의 자율성 제고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이다. UBPC의 권리와 의무로는 ① 토지의 사용권 부여 ② 생산물의 소유권 인정 ③ 생산물은 국가 결정 가격으로 판매 ④ 은행잔고 관리 ⑤ 생산수단 구입 ⑥ 집단적 의사로 관리자 선출 ⑦ 재정 의무 완수 등이다.

1994년 UBPC는 2,643개, 총면적은 740만 에이커, 257,000명의 조

<sup>115</sup>-UBPC의 특징으로는 ① 무기한의 토지사용권 부여 ② 생산물 구입이 가능 ③ 생산물은 국가에 판매 ④ 기본적인 생산 수단은 대부분 국가에서 구매 ⑤ 생산물의 종수는 국가가 결정 ⑥ 관리직은 선출하고, 정기적으로 농장현안을 조합원에 보고하고 결정 등이다. 新藤通弘, 『現代 キューバ經濟史: 90年代經濟改革の光と影』(東京: 大村書店, 2000), p. 88.

합원을 포함했다. 이러한 규모는 총 국가소유면적의 50%, 사탕수수 경작지역의 93.5%를 차지했다. 평균 UBPC의 규모는 2,800 에이커, 97명의 농장원 등이다.<sup>116</sup> UBPC는 대체로 국영농장의 10%정도로 축소되었다.

<표 3-4> 국영농장(1990)과 UBPC(1994)의 규모 비교  
(단위: hecta)

| 주요작물    | 국영농장(1990) | UBPC(1994) | 평균 축소율(%) |
|---------|------------|------------|-----------|
| 사탕수수    | 13,110     | 1,190      | 91        |
| 혼합 곡물   | 4,276      | 456        | 89        |
| 감귤 및 과일 | 10,822     | 100        | 99        |
| 쌀       | 32,760     | 5,132      | 84        |
| 담배      | 2,778      | 241        | 91        |
| 가축      | 24,865     | 1,595      | 94        |

자료: José Alvarez and William A. Messina, 1996, p. 178.

규모를 줄이고, 관리의 자주성을 부여하며, 생산에서 독립채산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농업노동자에게는 토지의 사용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전 농지의 71%, 477만ha, 60만 명을 고용한 387개의 국영기업 농장이 해체되고 2,500~2,600여개 정도의 협동조합 생산기초조직이 만들어졌다.

<sup>116</sup> - José Alvarez and William A. Messina jr, "Cuba's New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Markets: Antecedents," *Organization Early Performance and Prospects* (ASCE, 1996), p. 178.

<표 3-5> 쿠바의 국영농장 개편이후 농장형태 변화

| 구분        |                | 1992    |      | 1996    |      |
|-----------|----------------|---------|------|---------|------|
| 농업경영형태    |                | 면적(천ha) | %    | 면적(천ha) | %    |
| 국영농장      |                | 5,097.7 | 75.2 | 2,178.7 | 32.6 |
| 비국영<br>농장 | 소계             | 1,677.2 | 24.8 | 4,499.7 | 67.4 |
|           | UBPC           | 0       | 0    | 2,816.6 | 42.1 |
|           | 농업생산 협동조합      | 690     | 10.2 | 649.5   | 9.7  |
|           | 신용·서비스<br>협동조합 | 752.7   | 11.1 | 787.3   | 11.8 |
|           | 독립자영농          | 234.2   | 3.5  | 252.1   | 3.8  |

출처: 新藤通弘(2000), p. 89.

UBPC는 국가수매기관(Acopia)에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생산 쿼터를 가진다. 생산 쿼터는 매년 UBPC 지도위원회와 국가간에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쿼터는 전체 생산목표의 80% 정도로 하고, 나머지 20%는 농민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목표 생산액을 초과하는 것도 자유롭게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했다.<sup>117</sup>

대부분의 UBPC에서는 잉여농산물 판매 수익중 50%는 노동자에게 직접 배분하고, 나머지는 농기계 구입, 생산 관련 지출, 편의시설 건설 등에 사용했다. 초기 UBPC의 농업생산성은 국영농장보다 떨어졌다. 노동력 부족, 낮은 인센티브 효과, 작업도구 부족 등이 원인이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sup>117</sup>- 다만 정부는 도시지역에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UBPC가 잉여농산물을 하바나 등 도시에 판매할 경우 감세 혜택을 실시했다.

<표 3-6> 생산 협동조합의 경작면적 및 농장원 수 현황(1980~1996년)

|      | 개 수   | 총경작면적(ha) | 평 균<br>경작면적(ha) | 평 균<br>농장원 수 |
|------|-------|-----------|-----------------|--------------|
| 1980 | 1,035 | 212,900   | 206             | 29           |
| 1985 | 1,378 | 1,008,800 | 732             | 51           |
| 1990 | 1,305 | 838,900   | 642             | 47           |
| 1993 | 1,202 | 772,500   | 643             | 50           |
| 1995 | 1,160 | 740,900   | 639             | 54           |
| 1996 | 1,156 | 725,800   | 628             | 54           |

자료: José Alvarez(1999)

#### 다. 농민시장과 수매정책 변화

쿠바에서 식량 배급은 공식적으로 혁명이후인 1962년 3월 12일 법률 1015에 의해 선포되었다. 혁명이후 식량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배급제는 내무성에서 운영하였으며 품목은 모두가 해당되나, 일부 과일과 채소는 공급 상황에 따라 변동하였다. 배급량은 4인 가족(어른 청장년 기준)의 경우 한달 식비는 140.35~162.79 페소였다. 1998년 평균 임금이 217 페소임을 고려하면, 식비가 65~75%를 차지하고, 4인 모두 일한다면 16~19%를 차지한다.<sup>118</sup>

농민시장은 1980년에 도입된 바 있다. 농가나 협동조합이 국가에 수매의무를 완수한 이후 잉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한 조치였다. 농민시장은 이후 1982년에 규제를 받았고, 1986년에 폐쇄되었다. 농민시장이 다시 허용된 것은 1994년이였다. 1995년 현재 하바나에서만 농민시

<sup>118</sup> - 배급가격은 어느정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지만, 공급은 충분하지는 않았다. José Alvarez, *Rationed Products and something Else: Food availability and distribution in 2000 Cuba* (ASCE 2001) p. 306.

장이 49개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sup>119</sup>

농민시장은 1994년 9월 내각 법률 191호로 법제화되었다. 농민시장은 상업성에서 관장하게 했다. 상업성은 지방별 농민시장 수와 위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농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농민간의 생산 의무분량을 완수한 이외의 잉여농산물만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판매자는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의무 생산량을 채우지 못한 생산자가 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농민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는 국영농장과 기업, 비사탕수수 UBPC, 노동청년단에 소속된 농민, 신용서비스 협동조합, 소농, 자가 소비용 생산을 하는 예산기업 및 단위 등이다. 농민시장에 판매가 제한되는 생산물은 소, 물소 및 고기, 우유, 커피, 담배, 코코아, 국가와 계약한 농산물 공장의 쌀 등이다.

농민시장과 자유시장(Mercados Libres Campesinos; MLC)은 크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자유시장은 1980년에서 1986년까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고, 이후에는 주로 암시장 형태로 존재해 왔다. 첫째는 농민시장의 참여자는 국가의 수매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둘째는 농민시장의 판매자는 판매대금의 5%를 조세로 내야 한다(José Alvarez and William A. Messina, 1996: 183~185).

농민시장의 가장 중요한 초기 역할은 암시장에서 폭등하던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킨 것이다. 또한 미국 달러화에 대한 폐소화의 평가절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1994년 7월 암시장에서 달러당 폐소화는 120으로 거래되었다. 그러나 1996년 봄에는 21~23 폐소까지 떨어졌다.

<sup>119</sup> - William A. Messina, Jr, *Agricultural Reform in Cuba: Implica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Markets and Trade* (ASCE, 1999), 참조.



<표 3-7> 농민시장과 암시장의 가격비교(1994~1996년)  
(단위: Cuban Pesos/pound)

|      | 암시장(1994.6) | 농민시장   |        |        |
|------|-------------|--------|--------|--------|
|      |             | 1995.2 | 1995.6 | 1996.2 |
| 쌀    | 50          | 7      | 9.5    | 4      |
| 검은 콩 | 30          | 13     | 9      | 9      |
| 돼지고기 | 75          | 45     | 35     | 28     |
| 잼    | 150         | 70     | 60     | 45     |
| 카사바  | 15          | 2.5    | 2.5    | 1      |
| 감자   | 15          | 2.5    | 3      | 1.5    |
| 호박   | 40          | 5      | 3      | 2      |

자료: José Alvarez and William A. Messina, 1996, p. 186.

#### 4. 관광개혁

##### 가. 쿠바의 관광산업 개관

저개발국에서 관광산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쿠바와 같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체제에서 관광 산업은 첫째, 관광객과의 접촉을 통해 서구적 가치가 유입되고, 둘째, 당국으로 하여금 사회, 경제적 제도의 개선을 촉발하며, 셋째,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산업구조와 전통산업의 부진이라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은 주요 외화수입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쿠바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주력 분야로 관광산업을 선택하고, 경제의 심장(el turismo es el corazón de la economía)이라고 규정했다.

쿠바는 잘 알려진대로 전통적인 관광국가였다. 혁명이전인 1957년에 34만 7,508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관광수익은 6,200만 페소를 기록했다. 카리브해 관광시장의 18~21%를 차지할 정도였다(María Dolores

Espino, 2000: 360).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담배산업보다도 높았다. 물론 대부분의 관광객은 미국인이었다. 그러나 1959년 쿠바혁명이후 미국의 경제제재가 가속화되자 관광산업은 침체할 수밖에 없었다.

쿠바 관광이 다시 시작된 것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다. 1974년 8,400명의 자본주의권 관광객이 쿠바를 찾았다. 1976년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쿠바 국립관광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Turismo)가 설립되었다.

1980년대 쿠바가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한 것은 외환 부족 때문이었다.<sup>120</sup> 외자유치 노력은 합영법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쿠바정부는 1982년 2월 법령 50호로 외국인 투자지분을 49%까지 인정하는 합영법을 발표했다. 사실 합영법의 주요목적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관광산업은 우선 투자 분야로 분류되었으며 ① 관광산업 투자시 세금면제를 포함한 우대조치를 실시 ② 외국인 경영자가 쿠바의 시설을 임대할 수 있고 ③ 쿠바인의 고용을 허용했다(María Dolores Espino, 2000: 361).

1987년에는 관광진흥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회사인 Cubanacán이 설립되었다. 1990년에 유명한 휴양지인 Varadero에 2개의 호텔이 건설, 운영되었다. 하나는 Sol Palmeras Hotel로 Cubanacán과 스페인 회사인 Sol이 합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Tuxpán Hotel로 Cubanacán과 독일의 LTI호텔체인이 합작한 것이다. 1994년에는 관광 분야 전반을 확장하기 위해 관광성이 신설되었다.

1990년대 쿠바 관광객의 확대는 국제적으로 경제불황 때문에 서구선진국의 관광객들이 저가 카리브해 관광을 선호했으며, 국내적으로는 경

<sup>120</sup> - 쿠바 국립은행(Banco Nacional de Cuba)는 30억 달러에 달하는 서방의 외채에 대해 1982년 8월 채무기한 조정을 신청했으며, 1986년에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제개혁을 통한 관광 인프라의 적극적 육성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치안상 태때문에 가능했다.

관광 산업은 안전한 위생, 보건체제의 정비, 풍부한 문화, 교육수준 등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1988년에 관광사업 합영회사는 2개사였지만, 1997년 합영기업 13개로 증가했다. 1996년에 관광에 의한 외화수입은 14억 달러,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만 6만 명에 이를 정도로 팽창했다. 98년에 관광산업으로 4억 6천만 달러의 국산품 수요가 발생했다 (新藤通弘, 2000: 22~23).

관광객 수도 급증했다. 1988년에 쿠바를 찾은 관광객은 30만 명 이하로 추산할 수 있었으나, 1998년 에는 140만 명으로 급증했다. 1987년 기준으로 쿠바 관광객이 카리브 연안국가의 관광에서 3%정도를 차지했다면, 1997년 말 기준으로는 7%로 비중을 확대했다. 대체로 쿠바의 관광산업은 1990년 이후 연평균 20%씩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sup>121</sup>

<표 3-8> 쿠바의 관광객수 및 관광수익(1990~1998년)

|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
| 관광객수(만명)        | 34.0 | 42.4 | 46.0 | 54.4 | 61.7 | 74.5 | 100.4 | 117.0 | 141.5 | 160.2 |
| 관광객 증가율(%)      | 4    | 25   | 9    | 18   | 13   | 21   | 35    | 17    | 21    | 13    |
| 관광수익(백만\$)      | 243  | 387  | 443  | 636  | 763  | 977  | 1185  | 1345  | 1571  | 1714  |
| 1인당<br>평균수익(\$) | 714  | 913  | 962  | 1169 | 1236 | 1311 | 1180  | 1149  | 1110  | 1069  |

자료: María Dolores Espino (2000), p. 369.

<sup>121</sup> - 정확히는 1990~1997년 사이 쿠바 관광산업은 연평균 19.3% 성장했다면, 카리브 연안국가는 4.3% 성장했다. Félix Blanco Godínez(1998), p. 50,

1999년 관광객의 국별 현황을 보면 캐나다가 17%, 유럽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중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3국이 전체 관광객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 나. 관광산업의 외국인 투자 현황

2000년초 기준으로 9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26개 합영회사를 통해 투자하고 있다. 이중 25개 사업은 호텔합작이다. 쿠바의 총 호텔수 189개중 50%가 외국인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호텔업 진출회사인 Sol Meliá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회사는 2000년 말 기준으로 전세계 30개국에 330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스페인계 다국적 호텔체인이다. 유럽에서 2번째로 크며, 국제호텔업계 순위로 세계 7위인 기업이다.<sup>122</sup> 이 호텔체인은 2000년말 기준으로 쿠바에 20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5개의 신규호텔을 계약 중에 있다.

관광수익은 경제적으로 ① 재정수입 증대와 ② 고용 및 국민소득 증가로 나타난다. 1994년 이후 관광소득은 쿠바의 총 현금소득(재화 및 서비스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의 경우, 서비스 수출의 66%를 차지했지만, 상품 수출액을 초과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그만큼 관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관광을 제외한 여타 수출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관광 산업과 관련이 있는 재정수입 통로로는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① 공적 관광서비스 기관의 수익 ② 외국인 법인에 부과하는 조세, 인허가수수료, 요금 ③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적 부문의 조세, 인허가 수수료, 요금 ④ 관광객들의 세금 및 요금 등이다.

<sup>122</sup> - Sol Maliá의 2000년 경영성과는 'Annual Report 2000'을 참조. <<http://www.solmelia.es/solmelia/english/accionistas/memoria00/mem00.pdf>>.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998년 기준으로 81,000명으로 쿠바 노동력의 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5. 외자유치 정책

쿠바 경제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부족’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국내의 제한된 재정능력 때문에, 설비확대와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물론 쿠바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1985년에 선언한 외채상환 불이행조치(moratorium)로 투자유치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유엔 기구인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Caribbean)의 조사에 따르면,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쿠바는 16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캐나다는 니켈 광산, 석유 추출, 발전소 등에 투자했고, 스페인은 관광 인프라사업과 시가 제조 사업에, 이태리는 전화망 개선 사업 등에 투자했다(Ritter, 2004: 8~9).

중요한 것은 쿠바가 보다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쿠바는 1996년 법률 165를 통해 수출 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s)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1997년 5월 아바나에 2곳을 포함한 총 4곳에 수출가공구역이 설립되었다.

OECD의 연구에 따르면, 1995년 73개국에 500개의 수출가공구역(Export Processing Zones)이 있었다. 수출 가공구역은 경제특구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가 규제를 완화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입과 투자유치를 통해서 국가간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sup>123</sup> 특히 쿠바 혹은 북한과

---

<sup>123</sup> - 경제특구를 특성별로 유형화하면, 무역·물류형 경제특구, 제조·가공형 경제특구, 복합형 경제특구, 업무형 경제특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오랫동안 고립된 경제체제는 경제특구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의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외화소득, 기술이전, 국내의 고용과 소득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제특구는 일정 부분 외국에 대해서 경제적 개방을 하는 것으로 전국 그리고 전 산업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그리고 산업부문별로 이루어진다. 경제특구 지역 내에서는 일부 산업에 대해서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외국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어야 하나,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은 개방정책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수출가공구역의 성공 기준은 내수시장의 크기, 기술 확산 효과, 원자재의 내수시장 조달을 통한 후방연관효과 등이 거론된다.<sup>124</sup>

수출가공구역을 비롯한 경제특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쿠바의 수출가공구역의 최저임금은 월 163 페소로 결정되었다. 쿠바의 국내 임금수준과 비교했을 때, 50%정도 높지만, 1997년 10월 환율 적용시 월 7달러, 시간당 4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Willmore, 2000).

쿠바의 수출 가공구역은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제특구와 비교했을 때, 확대·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경제제재라는 국제적 환경이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호적인 세금면제와 노동자들의 높은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 비용 및 생산비용 때문

---

이상준·김월배·김영봉·이성수(2004) 참조.

<sup>124</sup> - 이런 점에서 슈랭크(Andrew Schrank)는 한국의 마산수출자유지역과 도미니카공화국의 로마나(La Romana)를 비교연구 했는데,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원자재의 구입비중이 높아졌고, 국내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고, 도미니카의 경우에는 적은 인구나 왜곡된 소극구조로 구매력을 창출하지 못했고, 후방연관 효과와 경제개혁 효과의 측면에서 확산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패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Schrank(2001) 참조.

에 수출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고, 이중환  
을 제도로 외국인 투자자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실질임금의 가치가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불되지 않은 것이 핵심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외환집중관리제나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환차 이익을 국가가 수취하는 방식은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의  
문제로 볼 수 있다. 1979년 시작된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였던 심천  
에서 임금의 직접 지불이 보편화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89년  
이었다. 10년 동안 심천에 투자했던 외국인 기업들은 중국 당국을 통해  
근로자를 간접 채용했다. 기업들이 달러화로 임금을 당국에 지불하면,  
중국 당국은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접지불  
방식을 10여년 지속한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제 3세계의 경제건설 초  
기에서도 외환집중관리제는 일반적으로 실시해 왔다.<sup>125</sup>

쿠바는 향후 개방의 확대와 ‘지체된 개혁’사이의 괴리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의 직접지급은 중요한 노동생산성  
향상의 수단이지만, 쿠바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와 명확히 구분하여 현  
금 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배급제라는 현물임  
금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특구에서의 임금정책만을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특구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쿠바 경제  
개혁이 진전될 필요가 있다. 대외개방지역에서의 정책변화 수준은 국내  
개혁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환율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경제특구 지역에서 임금의 직접

---

<sup>125</sup> 한국도 마찬가지다. 중동에 근무한 한국근로자들의 예를 들어보자. 해당국가에서  
건설회사에 임금을 달러로 지급하고 국내로 보내면, 건설회사는 각 근로자의 은행  
계좌에 임금을 한국 원화로 입금하였다.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 제3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부족한 외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엄격한 외환관리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불을 실시하기 어려운 이유의 핵심은 공식 환율과 실질환율 사이에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개방지역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달러임금을 공식 환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실질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특구에서의 노동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실질임금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쿠바 국내적으로 가격 개혁을 통해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기업의 이윤과 손실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는 전반적인 경제개혁 정도에 따라 경제특구에서의 노동 인센티브 정책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쿠바 폐소화의 불안정한 가치는 향후 쿠바 경제개혁에서 중요한 불안요인이며, 경제특구에서도 중요한 개선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 제4장

# 통합결론: 북한체제에 대한 시사점





## I. 리비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리비아는 독립이후 왕정의 부패와 가난으로 인해 독재정권이 탄생할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카다피라는 젊은 엘리트가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켰다. 카다피의 리비아 정체는 이슬람에 기반을 둔 아랍 사회주의와 반제국주의 노선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대결 국면을 취하였다. 이로 인해 카다피의 장기집권은 가져왔지만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새로운 것이 없는 정권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냉전종식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리비아도 기존의 국제정치 패러다임으로 국제정세에 대체할 수 없었으며 결국 1999년 ‘로커비 사건’의 해결과 2003년 ‘대량살상 무기’ 포기를 통해 유엔과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제재를 해제 받았다. 이후 일부 경제개혁과 고유가로 인해 리비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치적 자유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카다피에 대한 독재적인 이미지는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카다피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미국으로부터 ‘테러를 지원하는 배후 인물’ 혹은 ‘악의 축’의 선봉장 등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런 카다피가 최근에는 평화의 전도사 역할을 자청하며 아프리카 분쟁국들에 대한 화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또한 아프리카 대륙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이전의 아랍 민족주의를 내세운 독재자 이미지에서 평화 전도사로의 새로운 이미지로 변신하고 있다.

카다피의 독재 통치를 비교하고 분석함에 있어 함께 거론되는 정치지도자로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1942년생의 동갑이다. 그러나 카다피가 27세 때 군사 쿠데타로 왕정을 무너뜨리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고 권좌에 오른 지도자라면, 김정일은 세습을 통한 권력승계 지도자라는 점이 최고 지도자로 올라간 경로가 다르다.

이들의 공통점은 반미 노선을 견지해왔고,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또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테러를 지원한다는 비난 속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1969년 카다피가 군사혁명을 일으켜 리비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한 이후 리비아와 관계를 급속도로 강화시켰다. 제4차 중동전쟁을 전후하여 북한은 반미·반제국주의의 기수임을 자처하는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과 급속히 친밀해 졌다. 1974년 1월 북한은 리비아와 국교를 수립하고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테러리즘에도 협력하였다. 1977년 북한은 리비아에 군사고문단 10명과, 대공미사일 기술자 4명을 파견하였다.

더욱이 이집트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친미노선을 표방하자 북한은 리비아와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켰다. 북한은 1979년 리비아에 조종사 80명을 포함한 정비보급요원 및 군의관 등 공군요원 280명을 파견하였다. 북한은 이와 같이 리비아와 군사적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공군요원들이 리비아가 보유하고 있는 소련제 최신 전투기에 대한 훈련기회를 갖게 하는 한편, 리비아의 급진적인 좌경정책에 편승하여 비동맹권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려 하였다. 북한은 그 외에도 트리폴리 비행장 건설, 도시건설 등 리비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두 지도자의 유사점과 양국가간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해왔으나 카다피가 2003년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한 이후 두 국가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2003년 12월 19일 리비아 외무부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자료

들, 장비 그리고 프로그램과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들을 제거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중동의 ‘불량국가(rogue state)’로 불리는 리비아의 이와 같은 발표는 동북아시아의 ‘불량국가’로 미국이 지칭하고 있는 북한도 리비아의 선례를 따를 것인가가 국제사회의 이슈였다.

즉 리비아는 국제원자력(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고 모든 대량살상 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을 증명했으나 북한은 2005년 10월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데 이어 2006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다. 2006년 2월에는 봉인돼 있던 폐연료봉의 재처리에 들어가는 등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북한은 핵 포기의 대가로 미국에 대해 북한 체제 보장과 불가침 조약, 경제지원 등의 맞교환을 요구했다. 즉 리비아의 카다피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후세인의 몰락 이후 정치적 변신을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김정일은 미국과의 대결국면을 통한 협상으로 실리를 얻으려 했다.

국제사회의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북한의 김정일이 카다피의 정치적 결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처럼 미국과의 대치상황을 지속하면서 궁극적으로 스스로 후세인과 같은 사례를 따를 것인지를 선택할 시기가 되었다고 전망했었다. 사실 카다피가 ‘대량살상무기’를 전격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한 것은 리비아의 경제상황 등 많은 변수들도 있었지만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후세인의 체포를 통해 카다피 자신이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기도 하였다.<sup>126</sup>

미국무부 차관 리처드 아미타지(Richard Armitage)는 회견에서 만약 북한이 리비아처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자발적인 폐기를 선택한다면 북한은 매우 빨리 동아시아의 통합체제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

<sup>126</sup> - “Qaddafi’s Surrender, Bush’s Succes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December 23, 2003.

라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었다.<sup>127</sup>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위협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최대한 유리한 협상전략을 고집하였고 또한 리비아와 다른 국제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현재 부시 미 행정부는 리비아의 자발적인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이끌어내었고, 이라크는 군사행동으로 후세인을 체포하여 제거함으로써 소위 미국이 지목하고 있는 ‘불량국가’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미국은 현재 남아있는 이들 국가들 중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이 리비아의 모델을 따름으로써 ‘불량국가’들의 정권전복이나 미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국가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최근 급진전된 미국과 리비아 간의 관계 정상화는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동안 리비아는 북한과 유사한 국가로 비교되었으며 북한의 김정일과 비교한 정치인으로 리비아의 카다피가 꼽히곤 하였다. 그 중에서도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북한이 걸어온 길과 동일한 방향을 고수하며 동일한 길을 걸어왔었다. 그러나 북한이 끊임없이 핵무기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은밀한 진행을 추진해 왔던 반면 리비아는 2003년 12월,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핵무기 계획의 완전한 해체를 미국과 전격적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리비아와 미국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짧은 시간동안 속전속결로 관계를 복원시켜 나갔다. 미국은 리비아의 발표에 즉각적으로 화답하여 2개월 만에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대표부를 개설하였으며 4개월 만에 다시 연락사무소로 격상하였다. 효과는 유럽에도 미쳐 2004년 10월, EU는 18년 동안 진행되었던 대리비아 경제제재 조치를 전격적으로 해제하였다. 또한 2005년 3월 15일에는 프랑스와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

---

<sup>127</sup> - [http://usembassymalaysia.org.my/wf/wf1224\\_armitage.html](http://usembassymalaysia.org.my/wf/wf1224_armitage.html).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핵 개발 프로그램을 자진 포기한 대신 평화적 핵 사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리비아의 이러한 관계 정상화 움직임은 자국의 경제 발전에도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재제 해제로 인해 쇠퇴한 경제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수많은 외국 자본과 프로젝트가 리비아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대통령 카다피는 과거의 '독재자'에서 마치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듯 변신하여 외국의 투자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여념이 없다.

특히 리비아는 OPEC 회원국 중 7위의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는데 앞으로 석유 생산량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굴지의 석유 자본이 리비아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리비아는 40년 만에 석유채굴권에 대한 공개 입찰을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내놓았다.

리비아의 이러한 변신은 WMD 폐기에 있어 '리비아식 모델'이라는 말로 이미 많이 알려졌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 핵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 사회의 위협이 되었으나 자진해서 그 위협이 해소된 특별한 사례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후세인을 무력으로 제거한 것과 달리 평화적 방법만으로 달성된 것으로, 9·11 이후 '선제공격론'과 '협력해 온다면 옹당히 보상한다'는 양 날개를 내세운 미국 외교의 주목할 성취로 평가된다.

둘째, 이른바 '불량 국가'로 지목되거나 테러와 유관한 나라로 분류된 나라가 그 불명예를 벗어난 좋은 사례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을 적대국으로 규정, 대립각을 세워 왔다. 미국은 이미 테러지원국으로 이란, 북한, 쿠바, 시리아, 수단과 함께 리비아를 지목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을 필두로 이란, 쿠바, 미얀마를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하면서 평소 악명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높았던 리비아를 그에 포함시키지 않는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였다.

이 처럼 두 국가가 다른 방식으로 협상하였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최근 북한도 핵 포기를 통해 체제유지와 빈곤한 경제현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리비아식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리비아와 북한은 주변 국제환경이 다르다. 리비아의 경우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카다피 정권을 지지하던 소련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주변국들 또한 리비아를 지지해 줄 입장이 아니었다. 특히 리비아의 경우 미국의 이라크 침입과 테러와의 전쟁으로 더욱 더 입지가 좁아졌다. 더욱 위협적인 상황은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국내정치의 불안이었다.

반면 북한의 경우 리비아와는 다르게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계속하고 있고 남한의 경우도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사업과 관광사업 등을 통해 북한경제의 붕괴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 오랜 폐쇄경제정책으로 미국의 경제제제조치가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남북한의 대치상황이라는 점이 미국의 이라크와 같은 군사위협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리비아의 경우 미국은 공격할 근거가 발생할 경우 직접 군사적 행동을 통해 카다피에 위협을 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특성상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 남한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미국 또한 수많은 주한 미군들의 피해를 우려해 직접적인 행동까지는 감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28</sup>

---

<sup>128</sup> - 실제로 지마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한국과 미국이 쉽게 북한을 패배시킬 수 있지만 대가가 따른다면 “북한은 2만 기의 미사일을 남한에 발사할 수 있으며, 희생자 수는 한국전 때를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국내정치의 특성을 들 수 있다. 리비아 카다피의 경우 국내경제상황의 악화와 종교문제로 인해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정치적 도전을 받고 있었다. 반면 북한의 경우 세습체제를 이어 받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선군정치, 집단적 군부엘리트의 강경노선이 김정일을 보호막해주고 있다. 이것은 분명 카다피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는 국내정치측면에서 김정일의 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미국의 노력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최근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폐기 노력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완전 핵 폐기의 성과가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거 클린턴행정부 시절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한 북한과의 핵문제 해결이 부시행정부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듯이 북한 핵문제 만큼은 완전한 핵불능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미국의 성공적인 핵 확산방지는 군사적 압력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carrot and stick)’에 기초한 외교적 협상에 의존해왔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테러리즘과 핵무장 추구를 포기하겠다고 나선 것도 외교적 협상의 성과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1990년대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한 것도 미국의 폭격 때문이 아니라 외교와 국제적 압력에 기초한 10년에 걸친 유엔의 사찰 때문이었다. 남아공, 우크라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핵무기 보유 열망을 지닌 국가들이 핵개발을 포기한 것도 외교적 압력 때문이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 북한은 지난 날 여러 차례 거듭 밝혔듯이, 미국이 직접협상을 통해 외교관계와 경제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핵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므로 북한 핵에 대해 ‘리비아식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카다피에 대한 교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듯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성사시킬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 할 것이다. 이 역할을 담당해 줄 지도자는 중국의 후진타오주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과 중국의 입장과 카다피와 김정일의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접근도 현재까지는 큰 성과를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WMD 폐기 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대화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은 북한 체제의 유지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을 밝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2005년 ‘9·19 베이징 공동성명’에 입각해 핵무기를 비롯한 WMD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의 명단에서 삭제하며, 국제금융기구들(IMF, IIFC, 세계은행 등)은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한다. 남북한도 동시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불가침을 선언하고,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미·일·중·러) 역시 이를 즉각적으로 동의하며, 나아가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프로젝트(이르쿠츠크·사할린의 석유·가스전 개발,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종단철도(TCR)와의 교통망 연계 등)를 추진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비아는 부패한 왕정을 무너뜨리고 야심찬 혁명사상을 통해 국가를 건설하려는 카다피의 야심이 국제정세와 유리된 노선과 경제실패 그리고 장기집권이라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이데올로기 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리비아 경제는 개방화를 통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대외 관계는 ‘대량살상무기’ 포기 등으로 국제정세에 발맞추고 있다. 그러나 리비아 국내정치는 아직 카다피의 장기집권과 개혁미비로 이전 정권과 다름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리비아 카다피와 더불어 최근 국제정세에서 관심을 끄는 북한도 과연 리비아식 해법으로 대량살상무기 포기가 가능할지의 여부이다.

## II. 쿠바

### 1. 정치 이념분야의 시사점

쿠바 정치구조의 특징과 후계체제 전망은 북한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국내적인 ‘체제 전환’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를 위한 주요 변수는 구조적 압력, 사회경제적 발전, 경제적 위기, 우호적 국제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이 기준에서 보면 쿠바는 ‘예외 사례’이다. 그래서 쿠바의 민주화 비이행(nontransition)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민주화 주체세력(독립적 사회집단과 지도부 내의 온건파)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부재의 이유는 영리한 리더십 전략과 효과적 억압, 그리고 최소한의 정권 합법성을 들고 있다.<sup>129</sup> 북한과 마찬가지로 쿠바는 다른 권위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권력엘리트층 내부에 개혁주체가 허약하고,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반정부 단체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

둘째, 후계체제의 성격 역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카스트로 이후

---

<sup>129</sup> - 자세한 내용은 Hawkins(2001) 참조.

들어설 라울체제는 선군정치의 지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3세계형 군사정권의 가능성은 현실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쿠바의 정치체제가 이미 어느 정도의 위기관리형 ‘선군 정치’의 모습을 띠어 왔고, 경제개혁 과정에서 가장 큰 기득권 집단으로 부상한 것이 군부이기 때문에,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군이 정체를 변형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러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이념분야의 실용주의적 전환은 북한이나 쿠바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변화에 적합한 정치·사상체제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북한식 정치체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와 내각에 대한 당의 영도원칙이 주장되면서 사상·군사 엘리트가 실권을 행사하는 당우위 체제였다. 향후 북한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당의 영도원칙이 공식담론으로 유지되더라도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내각의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군부와 사상 엘리트가 변화과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담론을 제공하는 대신, 실용주의적 실무관료들이 실제적인 정책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각을 중심으로 한 개혁추진 실무관료들이 형성될 수 있다.

한편 주체사상의 실용주의적 재해석도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주체사상체계에서 창조성이나 의식성 등은 시장 논리와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나아가 정치 사상적 인센티브를 강조하면서도, 물질적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보다 부각시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체사상을 보다 추상수준이 높게 위치 규정하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 등을 근거로 한 경제정책 변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체계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 2. 경제개혁에 주는 시사점

북한은 쿠바의 경제개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상황에서 대체시장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개혁 선택에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라는 국제적 변수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경제정책 선택에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는 국제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쿠바 사례는 미국의 경제제재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EU와 캐나다 등 국제사회와의 교류확대는 쿠바의 국가적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미국 내에서 경제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옹변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쿠바와 북한의 전략적 의미는 다를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소련의 체제전환이후 쿠바의 외교적 환경과 중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분명 전략적 위협성에서 차이가 난다. 동시에 동북아 안보환경과 남북분단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서 대외적 환경의 영향력은 더욱 클 수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 긴장구조와 체제고수라는 악순환의 순환고리를 단절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는 국제 환경의 문제보다는 주체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경협증가와, EU국가와의 경협 확대, 그리고 동남아시아와의 교역 확대라는 현실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1984년 합영법이 실패한 이유나, 1991년 나진선봉 실험이 실패한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체시장의 모색은 북한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조성 과 제도개선, 그리고 경제개혁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둘째, 개혁과 개방의 병행 추진이 중요하다. 북한이 개성공단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방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경제

정책의 변화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sup>130</sup> 우선 산업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의 군수경제 위주의 중공업 발전전략은 국제경제체제로의 편입에 불리하다. 남북경협을 포함한 외자유치는 당분간 노동집약산업 위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북한이 경공업위주의 수출산업 중심으로 개편해야 됨을 의미한다. 특히 공정분업의 경우 북한 내 관련부품 산업이 발달하지 않으면, 투자기업들은 부품조달에 애로를 겪게 되고, 원부자재 일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물류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익성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위탁가공이나, 직접투자가 수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 육성으로의 산업정책 재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생산성 제고가 가능한 노동시장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당국 차원의 임금 책정이나, 임금의 간접지급 방식은 북측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환율정책의 변화 역시 중요하다. 북측의 금융개혁과 노동시장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획경제에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공유의 비극’을 막을 방법이 없다. 경제 특구 내에서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킬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태업이나 자재낭비, 규율위반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기능 전수도 어렵다. 기술 습득이 실제적인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능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쿠바사례는 경제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향상만이 실제적인 경제회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북한은 쿠바의 농업개혁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점진적인 체제전환에서 농업정책의 변화는 경제개혁의 출발신호였다. 물론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

---

<sup>130</sup> - 자세한 내용은 김연철, “북한경제특구의 성공조건,” 참조.

지하는 의미나 비중에서 북한은 중국과 다르다.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농업개혁이 공업개혁으로 확산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쿠바의 농업개혁은 중국·베트남의 개인농 중심의 농업개혁과 다르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쿠바의 국영농장 중심의 개편은 쿠바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과 쿠바의 차이는 명백하다. 쿠바가 집체적 틀을 유지한 것은 작물의 경작형태 때문이다. 주요 작물이 사탕수수와 설탕이기 때문에, 경작형태가 개인농 중심이기보다는 대규모 영농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점은 분명히 북한과 다르다. 북한의 주요 작물은 쌀, 옥수수, 감자 등 일반 식량이 중심이다. 주요 작물만 본다면, 북한은 동아시아 농업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정치적 필요와 경제개혁의 점진성 추진 의지 때문에 당분간 집체 농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 조치이후 일부 지역에서 가족농 중심의 실험적 조치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정리 사업 등을 통해 기계화와 집체 영농방식을 지속하고 있다. 필자가 쿠바사례에 주목하는 것은 북한이 당분간 집체 농업의 틀을 유지한다면, 그 한계 속에서 적정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체제를 모색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쿠바의 국영농장 개편 사례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사점은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농업 부문의 시장개혁 체제를 시도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 3. 인권 정책의 시사점

최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이른바 ‘인권 정치’에서 중요한 현상은 비동맹 국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동맹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인권 문제의 정치적 이용과 이중 잣대의 적용을 비판하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는 보편적 의미 보다는 각국의 이해와 역학관계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인권논의에서 북한과 함께 단골로 등장했던 쿠바 인권 결의안은 UN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제적인 인권논의에서 비동맹 국가들의 ‘수의 정치’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 등은 ‘유엔 인권 논의’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여전히 기권과 반대가 적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비동맹국가 다수의 반대여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에는 북한의 책임이 크다. 북한은 미국식 인권접근법과 다른 EU 방식의 인권 대화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의 접근법이 ‘정권 교체론’에 가깝다면, EU는 접촉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가능한 영역에서 개선방법을 찾는 방식이다. 북한은 2000년대 초 EU와 인권대화를 하기도 했지만, 지속하지 못했다. 유엔 대북인권 담당관인 문타폰의 활동에 대해서도 무시전략으로 일관했다.

이에 비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주도의 쿠바 인권결의안에 대해 대부분의 비동맹 국가들이 반대한 것은 비동맹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쿠바의 국제적 위상도 작용했지만, 쿠바가 비록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인권 개선노력을 해왔다는 점 때문이다. 199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쿠바 방문을 계기로 카스트로 정부는 100명 이상의 반체제인사들을 석방했다. 2001년부터는 다당제의 인정, 언론자유 보장, 시민개헌 청원권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바렐라 프로젝트(Varela Project)’가 추진되기도 했다.

정권의 간섭을 받고 있지만, ‘인권과 민족화합을 위한 쿠바위원회’, ‘인권을 위한 쿠바 위원회’와 같은 인권운동 단체들도 있다. 이러한 단체

들은 쿠바의 체제전환을 추진하는 미국 내 망명쿠바인들의 인권 운동과 다르다. 쿠바 내에서 쿠바의 인권 개선과 동시에 미국의 대쿠바 강경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쿠바 스스로의 ‘영리한 전략’들이 국제사회에서 미국 주도의 인권결의안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최소한 비동맹 다수 국가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 EU와의 인권대화를 재개해야 하며, 비동맹 국가들의 여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연철.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2.
- 서상현. 『아프리카 이해』. 서울: 다해출판사, 2004.
- Alexander M. Haig. *Caveat: Realism, Reagan, and Foreign Policy*. New York: Macmillan, 1984.
- Belkaoui. *Qaddafi: The Man and his Politics*.
- Brian L. Davis. *Quaddafi, Terrorism, and the Origins of the U.S. Attack on Libya*. New York: Praeger, 1990.
- E.E. Evans-Pritchard. *The Sanusi of Cyrena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49.
- Geoff Simons. *Libya. The Struggle for Survival*.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3.
- John Wright. *Libya. A Modern Histor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 Jonathan Berman. *Qadhafi's Libya*. London: Zed Books, 1986.
- Joseph T. Stanik. *El Dorado Canyon: Reagan's Undeclared War with Qaddafi*. 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3.
- Khalil I. Matar and Robert W. Thabit. *Lockerbie and Libya: A Study in International Relations*. Jefferson: NC: McFarland and Co., 2004.
- Janice Monti-Belkaoui and Ahmed Riahi-Belkaoui. *Qaddafi: The*

- Man and his Policies*. Brookfield, VT: Ashgate Publishing Ltd., 1996.
- Mansour O. El-Kikhia. *Libya's Qaddafi: The Politics of Contradiction*. Gainesville, FL: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7.
- Mu'ammarr Al-Qaddafi. *The Green Book*. Tripoli: The Green Book World Center, 1980.
- Nicola Ziadeh, Sanusiyah. *A Study of a Revivalist Movement in Islam*. Leiden: E.J. Brill, 1958.
- Omar El Fathaly and Monte Palmer, *Polit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in Libya*.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0.
- Ronald Bruce St. John. *Libya and the United States: Two Centuries of Strif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 Ruth First. *Libya. The Elusive Revolution*.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1974.
- Ruffin Patricia. *Capitalism and Socialism in Cuba: A Study of Dependency,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New York: St.Martin's Press, 1990.
- 新藤通弘, 『現代 キューバ 經濟史: 90年代 經濟改革の光と影』. 東京: 大村書店, 2000.

## 2. 논문

Austin Granville. "The Libya Raid and the Arab-Israeli Dispute."

-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Vol. 15, Issue 4, Summer 1986.
- 김달관. “쿠바의 딜레마: 이상과 현실.” 『라틴아메리카 연구』. 17권 3호, 2004
- 김연철. “쿠바 후계체제에서 ‘외압’과 ‘분절적 경제개혁’의 유산: 북한에 주는 시사점” 『아세아연구』. 2007.
- Boaz Ganor. “Libya and Terrorism from *Survey of Arab.*” *Affairs - A Periodic Supplement to Jerusalem Letter/Viewpoints*, June 1992.
- Claudia Wright. “Libya and the West: Headlong into Confrontation.” *International Affairs*. Vol. 58, Winter 1981 ~82.
- Dennis Sammut. “Libya and the Islamic Challenge.” *World Today*. No. 50, October 1994.
- Dirk Vandewalle. “Qadhafi’s ‘Perestroika’: Economic and Political Liberalization in Libya.” *Middle East Journal*. No. 45, Spring 1991.
- \_\_\_\_\_. “The Libyan Jamahiriyya since 1969.” in Dirk Vandewalle (ed.). *Qadhafi’s Libya, 1969~1994*.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 \_\_\_\_\_. “The Libyan Revolution After Twenty Years, Part I: Evaluating the Jamahiriyyah.” *Universities Field Staff International Africa/Middle East*. No. 2, 1990~1991.
- Enzo Santarelli. “Giorgio Rochat, Romain Rainero and Luigi Goglia, Omar al-Mukhtar.” *The Italian Reconquest of Libya*, London: Darf Publishers, 1986.

- Federal Research Division of the Library of Congress, "Government and Politics of Libya." *U.S. Library of Congress*. 1987.
- Francois Burgat. "Qadhafi's Ideological Framework." in Dirk Vandewalle, (ed.). *Qadhafi's Libya, 1969~1994*.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 L. Carl Brown. "Islam's Role in North Africa." in William Zartman (ed.). *Man,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North Africa*. New York: Prager, 1973.
- Lisa Anderson. "Qadhafi's Legacy: An Evaluation of a Political Experiment," in Dirk Vandewalle, (ed.). *Qadhafi's Libya, 1969~1994*.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 Marius Deeb. "Islam and Arab Nationalism in Al-Qaddhafi's Ideology." *Journal of South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Vol. II, No. 2, Winter 1978.
- Martha Crenshaw. "Theories of Terrorism: Instrumental and Organizational Approache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10, No. 4, December 1987.
- Raymond Habiby. "Mu'ammar Qadhafi's New Islamic Scientific Socialist Society." *Middle East Review*. Summer 1979.
- \_\_\_\_\_. "Qadhafi's Thoughts on True Democracy." *Middle East Review*. Summer 1978.
- Sami Hajjar. "Qadhafi's Social Theory as the Basis of the Third Universal Theory."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17, 1982.
- US Department of State's Background Notes. "Libya - History."



- U.S. Dept. of State.* July 2006.
- “U.S./UK Negotiations with Libya Regarding Nonprolifer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8, No. 1, Winter 2004.
- Corrales Javier. “The Gatekeeper State: Limited Economic Reforms and Regime Survival in Cuba, 1989~2002.”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9, No. 2. June 2004.
- Crez, Consuelo and Seleny, Anna. “Reform and Counter-reform: The Path to Market in Hungary and Cuba.” *Comparative Politics.* Vol. 34, No. 2. January 2002.
- Erikson. Daniel P. “Charting Castro’s Possible Successor” *SAIS Review* Vol. XXV, No. 1, Winter-Spring 2005.
- Godínez Félix Blanco. “Cuba’s Tourism Industry: Sol Meliá as a Case Study.” *ASCE.* 1998.
- Hamilton, Douglas. “Whither Cuban Socialism? The Changing Political Economy of the Cuban Revolu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 Issue.* Vol. 29, No. 3, May 2002.
- Hawkins Darren. “Democratization Theory and Nontransitions: Insights from Cuba.” *Comparative Politics.* July 2001.
- Hirshman, Albert O.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 Essay in Conceptual History.” *World Politics.* No. 45, 1993.
- Hoffmann, Bert. “Transformation and Continuity in Cuba.”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No. 33, 2001.
- J. Sachs and W.T.Woo. “Structural Factors in the Economic Reforms of China,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 Union.” *Economic Policy*. Vol. 9, No. 18, April 1994.
- Kildegaard Arne C. and Orro Roberto Fernández. “Dollariza-tion in Cuba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Transition.” *ASCE*, 1999.
- Mesa-Lago Carmelo. “Cuba’s Economic Policies and Strategies for the 1990s.” Irving Louis Horowitz. *Cuban Communism 1959~1995*. New Brunswick.London: Transaction Pub, 1995.
- Mesa-Lago, Carmelo.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in Cuba: during the Crisis and Subsequent Recovery.” *CEPAL Review* No. 86, August 2005.
- Otero, Gerardo and Ó Bryan Janice. “Cuba in Transition? The Civil Sphere’s Challenge to the Castro Regime.”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44, No. 4, Winter 2002.
- Packenhams A. “Cuba and the Soviet Union: What Kind of Dependency.” Irving Louis Horowitz(eds). *Cuban Communism 1959~1995*.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1995.
- Pérez Lorenzo L. “Fiscal Reforms in Transition Economics: Implications for Cuba.” *ASCE*. 2000.
- Pérez-Stable Marifeli. “Caught in a Contradiction: Cuban Socialism between Mobilization and Normalization.” *Comparative Politics*. October 1999.
- Pickel Andreas. “The U.S.-Cuba system and the key Mechanism of Regime Change After Castro.” *TIPEC Working Paper*. No. 1, 2006.

- Ritter, Archibald R. M. & Rowe Nicholas. “Cuba: From ‘Dollarization’ to ‘Euroization’ or ‘Peso Reconsolidation’?” *Latin America Politics and Society*. Vol. 44, No. 2, Summer 2002.
- Ritter, Archibald R. M. “The Cuban Economy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cuperation or Relapse.” Edited by Archibald R. M. Ritter. *The Cuban Econom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04.
- Ritter, Archibald. “Economic Illegalities and the Underground Economy in Cuba.” *Canadian Foundation for the Americas (FOCAL)*. March 2006.
- Roy Joaquín. “‘The understanding’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ver investments in Cuba.” *ASCE*. 2000.
- Ruth Pearson.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 Reproduction: The Case of Cuba in the 1990s.” *New Political Economy*. Vol. 3, No. 2, 1998.
- Schrank Andrew. “Export Processing Zones: Free Market Islands or Bridges to Structural Transformation?” *Development Policy Review*, No. 19, 2001.
- Sullivan. Mark P. “Cuba after Fidel Castro: Issues for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Oct. 2005.
- Willmore Larry. “Export Processing Zones in Cuba, United Nations, Economic & Social Affairs.” *DESA Discussion Paper*, No. 2, 2000.
- Zimbalist Andrew. “Interpreting Cuban Planning: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Andrew Zimbalist(eds). *Cuban Political Economy: controversies in Cubanology*. 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1988.

### 3. 기타

이왕재, “카다피의 새로운 선택”, 시대정신<<http://www.zeitgeist.co.kr>> 참조.

*Economist Intelligence Unit.*

*New York Times Magazine.*

*Reuters.*

<http://blog.daum.net/unisa/12279721>.

<http://www.arabdatanet.com/country/profiles/profile.asp?>

<http://www.arabdatanet.com/country/profiles/profile.asp?CtryName=Libya>.

<http://www.arabicnews.com/ansub/Daily/Day/020307/2002030732.html>.

<http://www.economist.com/countries/libya/>.

<http://www.infoplease.com/ipa/A0107722.html>.

<http://www.nationsencyclopedia.com/Africa/Libya-ECONOMIC-DEVELOPMENT.html>.

<http://www.wws.princeton.edu/wws401c/1998/ilsa.html>.

## 부 록

### 리비아와 국제사회

- 1969.9 : 카다피 쿠데타 집권
- 1982 : 미국, 리비아산 석유 수입금지, 일부 품목 수출금지
- 1986.1 : 미국, 무역거래금지. 미국 내 리비아 자산동결 등 경제제재
- 1986.4 : 미국, 리비아 트리폴리·벤가지 등 폭격
- 1988.12 : 리비아,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미국 팬암 여객기 폭파
- 1992.4 : 리비아, 미국 측의 팬암기 폭파범 인도 요구 거부 유엔, 대 리비아 경제제재
- 1999.4 : 리비아, 팬암기 폭파 혐의자 2 명 인도 유엔, 경제제재 해제
- 1999.9 : 아프리카 50개국 초청, 정상회담. 아프리카 통합체제 출범 '서트 선언' 채택
- 2003.8 : 리비아, 희생자 배상 합의
- 2003.9 : 유엔, 경제제재 해제
- 2003.12 : 리비아,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
- 2004.1 : 미 의회대표단, 30년 만에 리비아 방문
- 2004.2 : 미국, 미국인 리비아 여행금지조치 해제
- 2004.9 : 미국, 리비아 경제제재 조치 해제
- 2006.5 : 미국-리비아 양국 대사관 개설합의



연구총서

|         |  |     |      |         |
|---------|--|-----|------|---------|
| 2005-01 |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br>: A Case of South Korea | 전성훈 | 저    | 7,000원  |
| 2005-02 |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 최의철 | 저    | 8,000원  |
| 2005-03 |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 조정아 | 저    | 7,000원  |
| 2005-04 |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br>: Issues and Suggestions              | 김규륜 | 저    | 4,500원  |
| 2005-05 |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 김영춘 | 저    | 5,000원  |
| 2005-06 |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 이금순 | 저    | 6,500원  |
| 2005-07 |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 임순희 | 저    | 5,500원  |
| 2005-08 |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 황병덕 | 저    | 9,000원  |
| 2005-09 |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 김영운 | 저    | 7,000원  |
| 2005-10 |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 손기웅 | 저    | 5,500원  |
| 2005-11 | 러시아 탈 사회주의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 조한범 | 저    | 6,000원  |
| 2005-12 |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 박종철 | 외 공저 | 10,000원 |
| 2005-13 |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 김수암 | 저    | 7,000원  |
| 2005-14 |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 허문영 | 저    | 7,500원  |
| 2005-15 |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br>: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 이교덕 | 외 공저 | 10,000원 |
| 2005-16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 조민  | 저    | 6,000원  |
| 2005-17 |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 이석  | 저    | 7,000원  |
| 2005-18 |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 최수영 | 저    | 5,500원  |
| 2005-19 |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 배정호 | 저    | 6,500원  |
| 2005-20 |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 김국신 | 저    | 5,000원  |
| 2005-21 |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br>역할과 한반도 문제                                | 박영호 | 저    | 8,500원  |
| 2005-22 |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 박종철 | 외 공저 | 10,000원 |
| 2005-23 |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br>한국의 정책공간  | 박형중 | 저    | 5,000원  |
| 2006-01 |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 전성훈 | 저    | 10,000원 |
| 2006-02 |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 임강택 | 저    | 7,000원  |
| 2006-03 |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 최수영 | 저    | 5,000원  |
| 2006-04 |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 이석  | 저    | 8,000원  |
| 2006-05 |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 박종철 | 외 공저 | 10,000원 |
| 2006-06 |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 전현준 | 외 공저 | 10,000원 |
| 2006-07 |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br>-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 김영운 | 저    | 10,000원 |

|               |  |          |    |         |
|---------------|--|----------|----|---------|
| 2006-08       |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 손기웅      | 저  | 6,000원  |
| 2006-09       |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 정영태      | 저  | 7,500원  |
| 2006-10       |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 황병덕      | 저  | 8,500원  |
| 2006-11       |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 서재진      | 저  | 10,000원 |
| 2006-12       |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조민       | 저  | 6,500원  |
| 2006-13       |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 최춘흠      | 저  | 5,000원  |
| 2006-14       |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 박영호      | 저  | 7,000원  |
| 2006-15       |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 배정호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6       |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 임순희      | 저  | 8,000원  |
| 2006-17       |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 이금순, 김수암 | 저  | 10,000원 |
| 2006-18       |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 조영아      | 저  | 6,000원  |
| 2006-19       |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 조한범      | 저  | 5,000원  |
| 2007-01       |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 최진욱      | 저  | 6,500원  |
| 2007-02       |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김수암      | 저  | 6,000원  |
| 2007-03       |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 서재진      | 저  | 8,500원  |
| 2007-04       |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 전성훈      | 저  | 10,000원 |
| 2007-05       |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 손기웅      | 저  | 7,000원  |
| 2007-06       |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 이교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7-07       |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 최수영      | 저  | 6,000원  |
| 2007-08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 허문영 외    | 공저 | 10,000원 |
| 2007-09       |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 정영태      | 저  | 6,000원  |
| 2007-10       |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 허문영 외    | 공저 | 9,000원  |
| 2007-11       |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br>: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 정영태 외    | 공저 | 7,000원  |
| 2007-12       |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br>대응전략              | 김국신 외    | 공저 | 8,500원  |
| 2007-13       |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 배정호      | 저  | 6,000원  |
| 2007-14       |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 최춘흠      | 저  | 5,000원  |
| 2007-15(1)    |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 김규륜 외    | 공저 | 10,000원 |
| 2007-15(11)-1 |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5(11)-2 |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5(11)-3 | 東北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5(11)-4 | 東北亞区域合作的新联系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6       |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 김영운 외    | 공저 | 8,000원  |
| 2007-17       |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 이석       | 저  | 8,500원  |
| 2007-18       |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 조한범      | 저  | 5,000원  |
| 2007-19       |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 이금순      | 저  | 7,000원  |

## 학술회의총서

|         |                               |         |
|---------|-------------------------------|---------|
| 2005-01 |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 8,000원  |
| 2005-02 |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 10,000원 |



|         |  |  |         |
|---------|--|--|---------|
| 2005-03 |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br>: Current Status and Tasks                       |  | 10,000원 |
| 2005-04 |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br>Korean Peninsula                                       |  | 10,000원 |
| 2005-05 |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  | 10,000원 |
| 2006-01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  | 10,000원 |
| 2006-02 |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  | 9,500원  |
| 2006-03 |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  | 10,000원 |
| 2006-04 |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br>: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  | 9,500원  |
| 2006-05 |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  | 7,000원  |
| 2007-01 |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 8,500원  |
| 2007-02 |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  | 10,000원 |
| 2007-03 |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변영: 평가와 전망   |  | 9,000원  |

## 협동연구총서

|            |  |          |         |
|------------|--|----------|---------|
| 2005-01-01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 김명섭 외 공저 | 9,500원  |
| 2005-01-02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br>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 문옥표 외 공저 | 10,000원 |
| 2005-01-03 |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br>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 서중석 외 공저 | 9,000원  |
| 2005-01-04 |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 전성훈 외 공저 | 10,000원 |
| 2005-01-05 |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 배정호 외 공저 | 10,000원 |
| 2005-01-06 |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 최의철 외 공저 | 10,000원 |
| 2005-01-07 |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 윤종설 외 공저 | 10,000원 |
| 2005-01-08 |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br>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 강일규 외 공저 | 10,000원 |
| 2005-01-09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 전재경 외 공저 | 10,000원 |
| 2005-01-10 |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br>구축에 관한 연구             | 장준오 외 공저 | 8,000원  |
| 2005-01-11 |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 김이선 외 공저 | 10,000원 |
| 2005-01-12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br>구축 연구                | 오해섭 외 공저 | 9,000원  |
| 2005-01-13 |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br>의식조사 연구              | 한만길 외 공저 | 10,000원 |
| 2005-08-01 |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          | 10,000원 |
| 2005-08-02 |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br>거버넌스 구축방안                  | 김국신 외 공저 | 10,000원 |
| 2005-08-03 |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br>: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 박종철 외 공저 | 10,000원 |
| 2005-08-04 |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 이철수 외 공저 | 10,000원 |



|            |   |          |         |
|------------|---|----------|---------|
| 2005-08-05 |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 박광기 외 공저 | 10,000원 |
| 2005-08-06 |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 양문수 외 공저 | 10,000원 |
| 2005-08-07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 이금순 외 공저 | 10,000원 |
| 2005-08-08 |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 김영춘 외 공저 | 10,000원 |
| 2005-09-01 | 동북아 NGO 백서                                      | 전봉근 외 공저 | 10,000원 |
| 2005-09-02 | 동북아 NGO 연구총서                                    | 조한범 외 공저 | 10,000원 |
| 2006-04-01 |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 박종철 외 공저 | 10,000원 |
| 2006-04-02 |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 ): 안보전략                     | 박종철 외 공저 | 10,000원 |
| 2006-04-03 |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I ): 경제전략                    | 박종철 외 공저 | 10,000원 |
| 2006-11-01 |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 황병덕 외 공저 | 10,000원 |
| 2006-11-02 |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          | 10,000원 |
| 2006-11-03 |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 황병덕 외 공저 | 10,000원 |
| 2006-11-04 |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 황병덕 외 공저 | 10,000원 |
| 2006-11-05 |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 황병덕 외 공저 | 10,000원 |
| 2006-12-01 |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 황병덕 외 공저 | 10,000원 |
| 2006-12-02 |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 황병덕 외 공저 | 10,000원 |
| 2007-10-01 |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 김국신 외 공저 | 6,000원  |
| 2007-10-02 |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 손기웅 외 공저 | 9,000원  |
| 2007-10-03 |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 최대석 외 공저 | 7,500원  |
| 2007-11-01 |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 김국신 외 공저 | 10,000원 |
| 2007-11-02 |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 임성학 외 공저 | 9,000원  |
| 2007-11-03 |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배정호 외 공저 | 6,500원  |
| 2007-11-04 |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함택영 외 공저 | 6,000원  |
| 2007-11-05 |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전성훈 외 공저 | 6,500원  |
| 2007-11-06 |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김규륜 외 공저 | 8,000원  |
| 2007-11-07 |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이교덕 외 공저 | 10,000원 |
| 2007-11-08 |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 양현모 외 공저 | 7,500원  |
| 2007-11-09 |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박광기 외 공저 | 8,500원  |

## 논총

|                        |         |
|------------------------|---------|
|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 10,000원 |



|  |         |
|--|---------|
|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2 (2005)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2007)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2007)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   |          |         |
|---|----------|---------|
| 북한인권백서 2005                                     | 이금순 외 공저 | 1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 이금순 외 공저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6                                     | 임순희 외 공저 | 1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 임순희 외 공저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7                                     | 김수암 외 공저 | 1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 김수암 외 공저 | 10,000원 |

### 독일통일백서

|             |        |
|-------------|--------|
| 독일통일백서 2005 | 8,500원 |
|-------------|--------|

### 연례정세보고서

|                                  |        |
|----------------------------------|--------|
|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 6,000원 |
|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 6,000원 |

###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  |                         |
|--|-------------------------|
|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
|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 김영훈, 최수영                |
|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 정영태                     |
|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
|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 최의철, 김수암                |
|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 전병곤                     |

|         |  |                              |          |
|---------|--|------------------------------|----------|
| 2005-07 |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                              | 김영춘      |
| 2005-08 |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                              | 김영운, 최수영 |
| 2005-09 |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                              | 이금순, 임순희 |
| 2005-10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                              | 박형중, 최진욱 |
| 2005-11 |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br>: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                              | 최의철, 임순희 |
| 2005-12 |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                              | 배정호      |
| 2005-13 |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                              | 김수암      |
| 2005-14 |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                              | 황병덕      |
| 2005-15 |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                              | 손기웅      |
| 2005-16 | 일본 총선 결과 분석  |                              | 김영춘      |
| 2005-17 |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 최수영      |
| 2005-18 |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                              | 배정호      |
| 2005-19 |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 최춘흠      |
| 2005-20 |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                              | 김규륜      |
| 2006-01 |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 최진욱      |
| 2006-02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                              | 전현준, 김영운 |
| 2006-03 |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                              | 김수암, 이금순 |
| 2006-04 |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 전병곤      |
| 2006-05 |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                              | 여인곤      |
| 2006-06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                              | 서재진, 김영운 |
| 2006-07 |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                              | 김국신, 배정호 |
| 2006-08 |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                              | 김영운      |
| 2006-09 |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                              | 김국신, 박영호 |
| 2006-10 |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                              | 배정호      |
| 2006-11 |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 최춘흠      |
| 2006-12 |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                              | 김국신, 박영호 |
| 2006-13 |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                              | 김규륜      |
| 2007-01 |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          |
| 2007-02 |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반,          | 최수영      |
| 2007-03 |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                              | 김수암, 이금순 |
| 2007-04 |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 최수영      |
| 2007-05 |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                              | 전성훈      |
| 2007-06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                              | 최수영      |
| 2007-07 |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                              | 최수영      |
| 2007-08 |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 최수영      |
| 2007-09 |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                              | 김국신, 여인곤 |
| 2007-10 |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                              | 배정호      |
| 2007-11 |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                              | 정영태      |
| 2007-12 |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                              | 배정호      |
| 2007-13 |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                              | 여인곤      |
| 2007-14 |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 최수영      |

|         |   |                              |
|---------|---|------------------------------|
| 2005-01 |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 허문영                          |
| 2005-02 |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br>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                              |
| 2005-03 |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 홍용표, 조한범                     |
| 2005-04 |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 김근식                          |
| 2005-05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 조성렬                          |
| 2005-06 |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
| 2006-01 |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 김영운                          |
| 2006-02 |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 박영호                          |
| 2006-03 |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 임을출                          |
| 2006-04 |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 김규륜                          |
| 2006-05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 전현준                          |
| 2006-06 |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 서보혁                          |
| 2006-07 |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 고재홍                          |
| 2006-08 |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 이현근                          |
| 2006-09 |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 전미영                          |
| 2007-01 |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 전성훈                          |
| 2007-02 |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 조한범                          |
| 2007-03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
| 2007-04 |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 박형중                          |
| 2007-05 |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br>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 여인근,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
| 2007-06 |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 임을출                          |
| 2007-07 |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 최진욱                          |
| 2007-08 |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 전성훈                          |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rn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이 책은 국제산림경영인증(FSC)마크를 획득한 무염소 펄프 친환경용지 띠또레또지(표지)와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진 재생용지 이라이트지(본문)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 KINU 연구총서 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